



2018 남북통합지수

IPUS

Institute for Peace and Unification Studies, Seoul National University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CONTENTS

1부 | 남북통합지수 총괄 및 전망

1. 2018년 남북통합지수 총괄	11
2. 영역별 요약	15
3. 남북통합지수로 본 2017년 한반도: 평가와 전망	22

2부 | 2018년 남북통합지수

1장. 구조통합지수

1. 경제	29
가. 지수구성	29
나. 제도통합지수	30
다. 관계통합지수	35
라. 종합	49
2. 정치	57
가. 지수구성	57
나. 제도통합지수	58
다. 관계통합지수	64
라. 종합	87
3. 사회문화	90
가. 지수구성	90
나. 제도통합지수	91
다. 관계통합지수	99
라. 종합	116

2장. 의식통합지수

1. 지수구성	120
2. 영역별 지수	122
가. 경제	122
나. 정치	133
다. 사회문화	144
3. 종합	155

3장. 남북통합지수 : 2010~2017	159
------------------------	-----

CONTENTS (표)

〈표 2-1〉 경제영역 변인들의 분류와 배점	29	〈표 2-32〉 군사적 긴장완화 및 신뢰구축의 배점 (2010년 신설)	78
〈표 2-2〉 경제분야 법제도화 전문가 설문조사 결과	32	〈표 2-33〉 군사적 긴장완화 및 신뢰구축 부문 점수	79
〈표 2-3〉 제도통합지수 종합	34	〈표 2-34〉 2017년 군사적 긴장완화 및 신뢰구축 부문 내용	80
〈표 2-4〉 교역부문 상대점수	37	〈표 2-35〉 상호체제인정 정도(법 개정)	85
〈표 2-5〉 투자부문 상대점수(UN 명목소득 기준)	39	〈표 2-36〉 남북한의 상호체제인정 부문 점수	86
〈표 2-6〉 노동부문 상대점수	41	〈표 2-37〉 2016년/2017년 정치영역 관계통합지수 변화부문 지수 비교	87
〈표 2-7〉 무역자유화 부문 상대점수	43	〈표 2-38〉 정치영역 구조통합지수 종합	88
〈표 2-8〉 제도장치 확립부문 상대점수	45	〈표 2-39〉 사회문화영역 변인들의 분류와 배점	90
〈표 2-9〉 소득수준 수렴부문 상대점수(UN 명목소득 기준)	47	〈표 2-40〉 사회문화영역 제도적 통합의 지표와 배점	92
〈표 2-10〉 2015년/2016년 경제영역 구조통합지수 변화부문 지수 비교	50	〈표 2-41〉 사회문화영역 남북한 법제화 정도	95
〈표 2-11〉 경제영역 구조통합지수 종합(UN 명목소득 기준)	51	〈표 2-42〉 사회문화영역 남북한 법제화 전문가 설문조사 연도별 추이	95
〈표 2-12〉 투자부문 상대점수 (구매력 평가소득 기준)	53	〈표 2-43〉 북한의 사회문화 자유화 법제의 실효성	96
〈표 2-13〉 소득수준 수렴부문 상대점수(구매력평가 소득 기준)	54	〈표 2-44〉 남북한 사회문화 법제화 변인에 대한 점수	97
〈표 2-14〉 경제영역 구조통합지수 종합(구매력평가 소득기준)	55	〈표 2-45〉 사회문화영역 제도통합지수 종합	98
〈표 2-15〉 정치영역 변인들의 분류와 배점	57	〈표 2-46〉 사회문화영역 관계적 통합 지표와 배점	99
〈표 2-16〉 정치영역 제도적 통합의 지표와 배점	59	〈표 2-47〉 인적왕래 변인 상대점수	101
〈표 2-17〉 북한 정치관련 법제화 정도	60	〈표 2-48〉 공동행사 변인 상대점수	103
〈표 2-18〉 북한 정치관련 법제의 실효성 정도	61	〈표 2-49〉 사회문화 교류협력기금 변인 상대점수	105
〈표 2-19〉 남북한 공동법제화 수준	62	〈표 2-50〉 이산가족 상봉 변인 상대점수	106
〈표 2-20〉 정치영역 제도통합지수 종합	63	〈표 2-51〉 인적 이동 자유화 변인 상대점수	109
〈표 2-21〉 실무정치회담 연도별 개최 횟수 및 점수	65	〈표 2-52〉 언론·방송의 자유화 변인 지표와 배점	110
〈표 2-22〉 고위급 정치회담 연도별 횟수 및 점수	66	〈표 2-53〉 언론·방송의 자유화 변인 점수	110
〈표 2-23〉 군사분야 회담 연도별 개최 횟수 및 점수	67	〈표 2-54〉 주요 국제대회 공동개최·단일팀 구성 변인 상대점수	112
〈표 2-24〉 의회회담 연도별 개최 횟수 및 점수	68	〈표 2-55〉 사회문화 교류협력 당국자 회담 상대점수	113
〈표 2-25〉 정당교류 정치단체 교류 관련 점수	69	〈표 2-56〉 사회문화 교류협력 정례화 및 공동협의기구 변인 종합점수	115
〈표 2-26〉 정치분야 공동행사	70	〈표 2-57〉 사회문화영역 구조통합지수 종합	116
〈표 2-27〉 매개제도의 구성과 활동 부문 점수	71	〈표 2-58〉 사회문화영역 구조통합지수 연도별 추이	118
〈표 2-28〉 대화·회담의 정례화 수준 평가 방법 (2010년 수정)	73	〈표 2-59〉 2017년 사회문화 구조통합지수 변화부문 지수 비교	119
〈표 2-29〉 대화·회담의 정례화 부문 점수	73		
〈표 2-30〉 국제사회에서 외교군사적 협력 횟수 및 점수	74	〈표 3-1〉 의식통합지수 변인과 배점	120
〈표 2-31〉 남북한의 연도별 병력 수 및 병력감축 수준 부문 점수	75	〈표 3-2〉 경제영역 의식통합 변인과 배점	122
		〈표 3-3〉 통일이 남한과 자신에게 이익이 되는 정도에 대한 응답률과 상대점수	123
		〈표 3-4〉 남한 주민의 남북 경제교류에 대한 평가	124
		〈표 3-5〉 대북 지원의 선호 정도에 대한 응답률과 상대점수	126
		〈표 3-6〉 북한체제 평가와 시장경제 우호도 응답률과 상대점수	127

<표 3-7> 대북 지원에 대한 응답률과 상대점수	129
<표 3-8> 대북 투자와 사업에 대한 우호도 응답률과 상대점수	130
<표 3-9> 경제분야 의식통합지수 종합	131
<표 3-10> 정치영역 의식통합 변인과 배점	133
<표 3-11> 통일의 필요성에 대한 응답률과 상대점수	134
<표 3-12> 남북 정치제도의 동질성에 대한 응답률과 상대점수	135
<표 3-13> 상대방의 무력도발 가능성 "없음"에 대한 응답률과 상대점수	136
<표 3-14> 상대방에 대한 긍정인식 응답률과 상대점수	137
<표 3-15> 상대방 인지도에 대한 응답률과 상대점수	139
<표 3-16> 정치분야 의식통합지수 종합	142
<표 3-17> 사회문화영역 의식통합 변인과 배점	144
<표 3-18> 상대방의 사회문화에 대한 인지수준 응답률과 상대점수	145
<표 3-19> 상대방에 대한 수용의식 응답률과 상대점수	147
<표 3-20> 상대방에 대한 적대감 해소 응답률과 상대점수	148
<표 3-21> 남북 사회문화양식의 동질성 응답률과 상대점수	150
<표 3-22> 통일 이후의 사회평등 기대수준 응답률과 상대점수	152
<표 3-23> 사회문화영역 의식통합지수 종합	153
<표 3-24> 남북의식통합지수 연도별 변화	157

<표 4-1> 2017년 남북통합지수와 백분율	160
<표 4-2> 2016년 남북통합지수와 백분율	160
<표 4-3> 2015년 남북통합지수와 백분율	160
<표 4-4> 2014년 남북통합지수와 백분율	161
<표 4-5> 2013년 남북통합지수와 백분율	161
<표 4-6> 2012년 남북통합지수와 백분율	161
<표 4-7> 2011년 남북통합지수와 백분율	161
<표 4-8> 2010년 남북통합지수와 백분율	162
<표 4-9> 영역별 구조통합지수 시계열적 추이와 단계 변화	165

CONTENTS (그림)

<그림 1-1> 영역별 남북통합지수 추이	11
<그림 1-2> 경제영역 구조통합지수 연도별 추이	15
<그림 1-3> 정치영역 구조통합지수 연도별 추이	18
<그림 1-4> 사회문화영역 구조통합지수 연도별 추이	19
<그림 2-1> 개성공단 고용 북한노동자와 생산액 추이	41
<그림 2-2> 경제영역 구조통합지수 연도별 추이	52
<그림 2-3> 정치영역 구조통합지수 연도별 추이	89
<그림 2-4> 사회문화 구조통합지수 연도별 추이	119
<그림 3-1> 의식통합지수 2010~2017년 변화 추이	158
<그림 4-1> 2011~2017년 종합지수(구조통합지수+의식통합지수) 비교	164
<그림 4-2> 2008~2017년 종합지수(구조통합지수+의식통합지수) 비교	164
<그림 4-3> 영역별 구조통합지수 연도별 추이	166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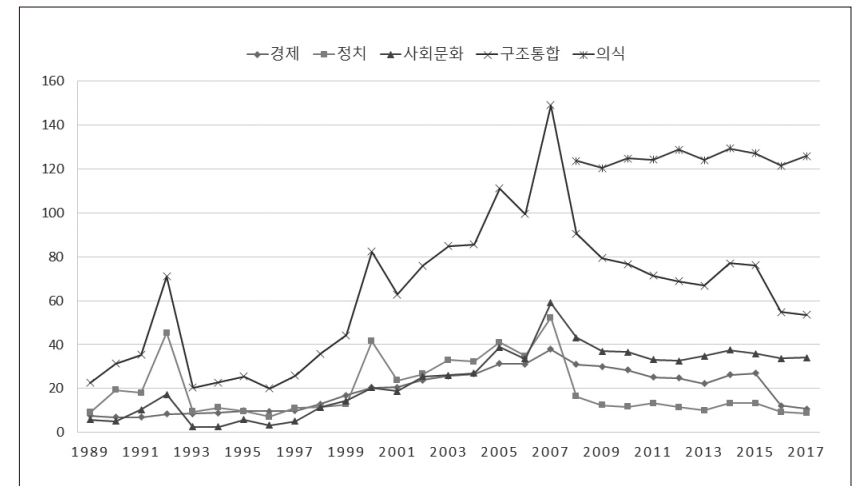
남북통합지수 총괄 및 전망

1. 2018년 남북통합지수 총괄
2. 영역별 요약 및 전망
3. 남북통합지수의 평가, 전망, 제언

IPUS

1. 2018년 남북통합지수 총괄

〈그림 1-1〉 영역별 남북통합지수 추이



■ 2018년 남북통합지수는 다음과 같이 요약 가능하다.

첫째, (1) 2017년 구조통합지수는 53.6점으로 전년 대비 1.3점 하락하였다. 2008년 이명박 행정부의 등장 이후 남북관계가 경색되면서 남북구조통합지수가 하락하는 추세였는데, 2017년 북한의 핵개발과 국제사회의 제재가 결합되면서 남북한 관계가 악화되었다. 2013년 한반도 위기 후 남북관계가 약간 좋아져, 2013-14년 사이 구조통합지수가 소폭 증가한 적이 있었지만, 하락세가 이어졌다(2008년 90.6→2009년 79.4→2010년 76.6→2011년 71.4→2012년 68.8→2013년 66.9→2014년 77.1→2015년 76.1→2016년 54.9→2017년 53.6). (2) 제도적 통합수준은 전년에 비해 정치, 경제, 사회문화 세 영역에서 모두 소폭 올라가, 전년 대비 1.7점이 올랐다. 조사

이후 제도적 통합수준이 최대점을 보였는데, 북한에서 법제화가 진행되면서 남북한의 법이 점차 유사해졌기 때문이다(2008년→27.2→2009년 29.8→2010년 28.4→2011년 28.5→2012년 27.1→2013년 28.4→2014년 30.5→2015년 28.3→2016년 27.7→2017년 29.4). (3) 관계적 통합수준은 전년 대비 3.6점이 하락하여 역대 최저치를 보였다(2008년 63.3→2009년 49.6→2010년 48.2→2011년 42.9→2012년 41.7→2013년 38.5→2014년 46.6→2015년 47.8 2016년 27.2→2017년 23.7). 2017년 북한의 핵도전으로 인한 긴장악화와 대북제재 강화로 인하여 세 영역에서 남북한관계가 모두 악화되었다.

둘째, 영역별 통합단계를 보면, 정치영역의 통합단계가 0단계에 머물렀다. 2016-2017년 한반도에 전운이 감돌 정도였음을 반영하여, 남북관계는 최악 수준이었다. 경제영역에서의 통합은 1단계 머물렀다. 남북 간 경제교류가 사실상 전무한 상태로까지 갔지만, 북한에서 경제 관련 법제화가 이루어져 남북한 경제법이 비슷해졌기 때문에 이 수준을 유지할 수 있었다. 사회문화에서의 통합은 2단계를 유지했다. 남북한 사회문화적 교류가 끊겼지만, 북한에서 사회문화 관련 법제화가 이루어져 남북한 사회문화법이 상대적으로 비슷해졌기 때문이다.

셋째, 의식통합지수는 125.8으로 전년대비 4.3점 상승했다. 2008년 이후 의식통합지수는 120대 중반을 기점으로 등락을 반복한다(2008년 123.7→2009년 120.5→2010년 124.8→2011년 123.7→2012년 128.8→2013년 124→2014년 129.3→2015년 127.2→2016년 121.5→2017년 125.8). 2017년 경제 영역에서 의식통합지수는 39.3점으로 전년 대비 1점이 하락했다. 자본주의 경제체제에 대한 북한 주민의지가 약화되었기 때문이다. 반면, 역설적이게도 2017년 한반도 위기는 사회문화와 정치 영역에서 의식통합지수를 높였다. 2017년 한반도 위기를 겪으면서 한국 사람들이 북한의 존재를 상대적으로 더욱 의식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넷째, 구조통합과 의식통합을 합친 종합지수는 179.4점으로 전년대비 3.0점 상승하였다. 구조통합의 수준이 전년에 비하여 악화되었지만, 의식통합지수가 상승하였기 때문이다. 지난 10년간 종합지수는 2008년 214.2→2009년 199.9→2010년 201.4→2011년 195.6→2012년 197.6→2013년 190.8→2014년 206.4→2015년 203.3→2016년 176.4→2017년 179.4으로 나타났다. 의식통합지수의 변동이 구조통합지수 보다 종합지수상승에 더 큰 영향을 미치는 현상이 다시 확인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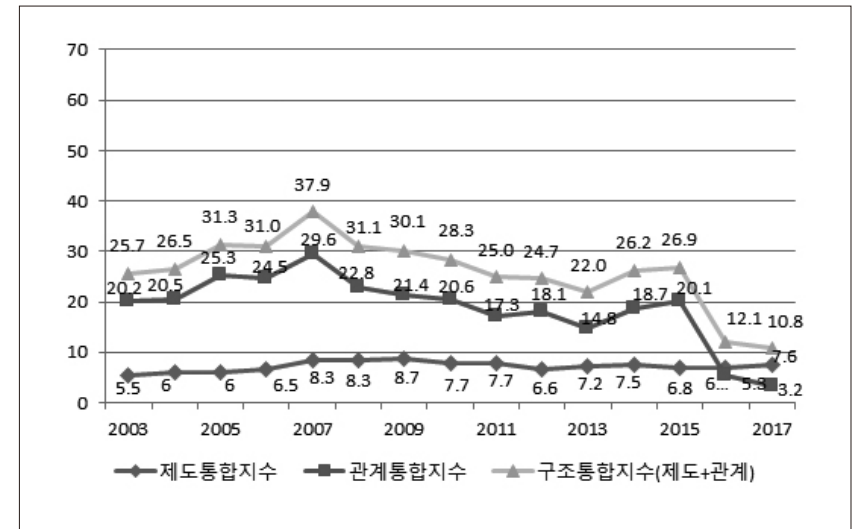
다섯째, 종합지수를 기초로 한 2017년 남북한의 통합률은 17.9% 수준이다. 이는 2016년 17.6%보다 0.3% 상승하였지만, 2016년 시작된 한반도 위기가 2017년으로 이어지면서 남북한 통합 수준이 낮은 수준에 머물렀기 때문이다. 연도별 통합률은 2008년 21.4%→2009년 20.0%→2010년 20.1%→2011년 19.5%→2012년 19.8%→2013년 19.1%→2014년 20.6%→2015년 20.3%→2016년 17.6%→2017년 17.9%였다. 영역별로 남북한 통합률을 살펴보면 (1) 경제영역에서는 19.4%로 전년대비 3.8% 증가하였다. 남북한 경제관계가 최저점을 보였지만, 경제 분야에서 북한의 법제화가 진행되어 남북한 경제법이 비슷해졌기 때문이다. 지난 10년간 경제 영역에서 통합률은 2008년 22.1%→2009년 21.6%→2010년 20.9%→2011년 20.2%→2012년 20.4%→2013년 19.1%→2014년 21.1%→2015년 21.1%→2016년 15.6%→2017년 19.4%였다. (2) 정치영역에서 통합률은 19.7%로 전년대비 5.7% 상승하였다. 2016년 한반도 위기 후 남북관계가 최악 상황으로 돌입한 상태에서 2017년 위기가 격화되면서 한국 사람들이 북한이 더 인지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지난 10년간 정치 영역에서 통합률은 2008년 17.4%→2009년 15.8%→2010년 14.5%→2011년 14.7%→2012년 14.9%→2013년 14.1%→2014년 15.3%→2015년 14.9%→2016년 14.0%→2017년 19.7%였다. (3) 사회문화 영역에서 통합률은 27.5%로 전년대비 4.3% 상승하였다. 북한

이 법제화가 진행되면서 사회문화 영역에서 남북한이 비슷해졌기 때문이다. 지난 10년간 사회문화 영역에서 통합률은 2008년 24.7%→2009년 22.5%→2010년 24.9%→2011년 23.5%→2012년 23.8%→2013년 23.9%→2014년 25.4%→2015년 24.8%→2016년 23.2%→2017년 27.5%였다.

2. 영역별 요약

가. 경제

〈그림 1-2〉 경제영역 구조통합지수 연도별 추이



- 2017년 경제영역 구조통합지수는 전년대비 1.3점 하락한 10.8점을 기록하였고, 이는 통합단계로는 1단계에 해당하는 수치이다.

2017년에는 △ 남북 교역 비중 감소, △ 남한 기업의 북한 노동자 고용 감소, △ 상품 및 서비스 무역의 자유화 정도 감소가 지수의 하락을 이끌었으나, 개성공단 폐쇄 이후 교류 협력 전면 중단으로 인한 경제 통합 수준 하락이 이미 2016년 지수에 상당 부분 반영되어 있어 하락의 폭은 크지 않았다.

통합단계 역시 전년과 동일한 1단계를 기록하였으며, 이는 물적 자원이 교류되고 있으나, 그 비중은 낮은 단계이다.

- 그러나 이것은 2018년의 경협 재개에 대한 기대감이 법제화 점수에 반영되어 지수 하락 폭을 일부 상쇄한 결과이며, 2017년의 상황 자체로는 사실상 0단계로 볼 수 있다.

구체적으로 2017년 경제영역 구조통합지수에 영향을 미친 변화요인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하락요인>

개성공단 가동 중단 이후 남북 경제 교류가 전무한 상황에서 교역, 노동, 무역 자유화 점수가 0점을 기록하여 이 세 가지 요인이 경제부문 구조점수의 하락 요인이 되었다. 이 밖에도 투자 부문 점수 역시 소폭 하락하였다.

□ <상승요인>

2017년 말 남북한 정권에서 당시의 경색된 국면을 전환하려는 시도가 있을 것임을 암시하는 움직임이 나타났고 이것이 전문가들의 법제화 수준 점수 평가에 영향을 미쳐 해당 점수가 0.8점 상승하였다.

□ 2018년의 경제영역 구조통합지수는 다음과 같이 예측할 수 있다.

2018년에도 실질적인 면에서 경제 교류는 여전히 전무할 것으로 예상되나, 남북, 북미 정상회담 등 비핵화 협상이 시작되었고, 이에 경협 재개를 위한 회담 등이 일부 전개되고 있는 점이 반영되면 2018년의 구조 통합지수는 다소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 특히 전문가들의 법제화 평가 점수와 투자 점수, 경제교류를 뒷받침하는 제도적 장치 점수가 상승할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2018년 내에 남북한의 경제 교류가 재개되기는 힘들 것으로 전망되므로 상승 폭에는 한계가 존재할 것이며, 따라서 2018년의 구조통합 지수 역시 1단계에 머물게 될 공산이 크다.

경제영역의 의식통합지수는 2012년 42.5점→2013년 40.8점→2014년

43.4점→2015년 42.6점→2016년 39.3점→2017년 38.3점으로 2015년 이래 3년 연속 하락하여 30점대 후반에 머물러 있다.

□ 2017년 조사를 중심으로 살펴보면, 경제분야 남한주민의 의식조사 상대점수는 2016년 15.9점→2017년 16.6점으로 0.7점이 상승하였다. 이것은 2017년에도 북한의 핵 개발 가속화와 대북제재 등으로 남북 관계가 악화일로에 있었던 것을 감안하면 인상적인 결과이나 해당 조사의 질문 문항이 2017년 조사에서 일부 변경되어 이를 남한 주민들의 인식 개선으로 평가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북한주민(탈북자)의 의식조사 상대점수는 2016년 23.4점→2017년 21.7점으로 전년대비 1.7점 하락하였다. 특히, '시장 경제에 대한 선호도' 항목에서 긍정 응답이 크게 감소하면서 전반적인 지수 하락을 이끌었다. 이는 북한에 대한 대북 제재가 2017년부터 본격적으로 영향력을 발휘하면서 경제난의 원인을 체제나 제도 보다는 외부적, 정치적 이유로 돌리는 경향이 나타났기 때문으로 해석할 수 있다.

□ 경제영역의 통합지수는 남북 관계의 정치적 변화에 따라 상당한 영향을 받는 것으로 평가된다.

구조통합지수는 작년에 비해 1.4점 하락하여 1998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하였는데, 이는 북한의 계속되는 핵무기 개발과 이에 따른 대북제재로 인해 남북 교류가 재개될 수 없었던 현실을 반영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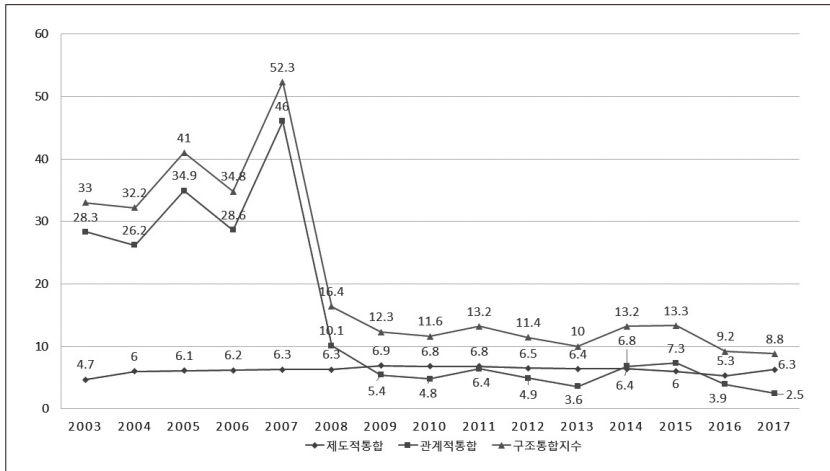
즉, 최근의 상황은 정치적 관계의 경색이 경제 영역의 남북 통합을 저해하는 양상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정치영역에 대한 경제영역의 독자성은 여전히 낮은 단계에 머물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나. 정치

□ 2017년 정치영역의 남북통합지수는 48.3점으로 전년도 46.1점보다 2.2점

상승하였다. 2016년 조사에서 기록된 최저점보다 약간 좋아졌을 뿐이다. 구조통합과 의식통합을 나누어 보면 구조통합은 작년보다 0.4점이 하락한 8.8점을 기록하였고, 의식통합은 2.6점이 상승한 39.5점을 기록하였다.

〈그림 1-3〉 정치영역 구조통합지수 연도별 추이



구조통합은 2011년 이후 2년 연속 하락한 이후 2013년 약 9.9점으로 0단계로 떨어졌다가 2014년에 3.2점이 상승하여 1단계를 가까스로 회복하였고 2015년에는 0.1점 상승한 13.3점이나 통합단계는 전년도와 동일한 1단계이다. 그러나 2016년에는 4.1점 하락한 9.2점으로 급격히 하락하였다. 2017년에는 더 하락하여 8.8점까지 떨어졌다. 구조통합지수는 최저점을 갱신했다. 2017년 대북한 국제제재가 강화되는 상황에서, 남북 간에 대화·회담 등의 빈도와 교류가 없는 상태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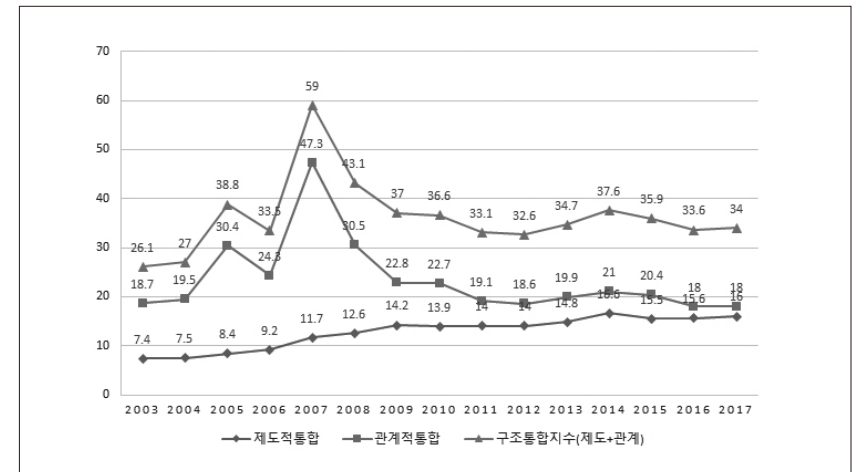
구조통합의 한 축인 제도통합 부분은 정치 분야나 군사 분야의 남북공동 집행기구가 존재하지 않고 기구구성의 논의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남북한 정치제도의 단일화 정도도 작년과 동일하다. 공동법제화 수준(전문가평가)은 2016년 대비 1.0점 상승하였다. 관계통합은 1.4점 하락하였

다. 제도통합의 하락과 관계통합의 하락으로 전체적인 구조통합지수는 0.4점 감소한 8.8점으로 통합단계는 전년에 이어 0단계를 유지하였다.

의식통합은 80점 중에서 39.5점으로 통합수준은 49.4%였으며, 전년인 2016년과 비교하면 2.6점 상승하였다. 전년 대비 통일의 필요성(0.4점), 상대방에 의한 무력도발 가능성이 없다는 신뢰도(0.7점), 상대방에 대한 긍정인식(1.0점), 상대방에 대한 인지도(0.4)이 높아졌다. 반면, 정치제도 동질성(0.1점)이 감소하였다. 남한주민의 통합의식은 전년도보다 통합의식은 2016년에 비해 2.8점 상승하여 18.6점을 보인 반면, 북한주민의 통합의식 점수는 20.9점으로 소폭 하락하였다.

다. 사회문화

〈그림 1-4〉 사회문화영역 구조통합지수 연도별 추이



2017년 사회문화영역 통합지수는 82점(구조통합지수 34.0점 + 의식통합지수 48.0점)으로 전년 대비 3.1점 상승하였다. 이 중에서 구조통합지수는 제도적 통합지수 16.0과 관계적 통합지수 18.0점을 합하여 34.0점이다.

이 수치는 단계별 배점 기준에 따라 2단계(21-40점)에 해당한다. 2단계는 교류가 비정기적으로 이루어지지만 상대적으로 1단계에 비해 접촉빈도가 높은 상태를 의미한다. 2015년과 마찬가지로 단계별 배점 기준에 따라 2단계(21-40점)에 해당된다.

□ 이산가족 상봉, 당국자 회담 등이 개최되지 않았고, 남북한 공동행사나 경제분야의 인적 이동도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존에 단일, 공동으로 마련한 법제들이 남아있어, 동시에 북한에서 법제화가 조금 진행되어 구조통합지수가 2단계로 유지되고 있다. 2016년 33.6점에서 0.4점이 올라 34.0점이다.

□ 2008년~2017년 기간 동안 구조통합지수의 증감을 비교해 보면 2008년 -15.9, 2009년 -6.1, 2010년 -0.4, 2011년 -3.5, 2012년 -0.5, 2013년 +2.1, 2014년 +2.9, 2015년 -1.7, 2016년 -2.3, 2017년 +3.1로 나타났다. 2014년에는 인천 아시안게임에 북한 선수단이 출전하고 폐회식 날에 북한의 권력 실세 3인방이 전격 방문하는 등 남북관계에서 유화 분위기가 형성되면서 반짝 상승하였으나, 2015년부터 DMZ 지뢰폭발 사고와 대북방송 재개 등 남북관계가 다시 경색되면서 사회문화영역 구조통합지수는 상승세를 잇지 못하고 다시 하락하였다. 이후 북한의 핵실험과 미사일 실험에 대응하는 국제제재로 인하여 남북한 정치적 교류가 사실상 전무하여 지수가 하락하였다. 2017년의 경우 북한에서 법제화가 제한적으로 진행되어, 지수가 약간 상승하였다.

□ 2017년 사회문화영역 의식통합지수는 90점 만점 중 48.0점으로 2016년 45.3점보다 2.7점 상승하였다. 2008년 이후부터 2016년까지 9년간의 사회문화영역 의식통합지수의 변동 추이는 2008년 40.9→2009년 39.4→2010년 47.9→2011년 46.8→2012년 48.5→2013년 46.4→2014년 48.6→2015년 48.6→2016년 45.3→2017년 48.0점으로 2010년 이후

로 큰 변동 없이 일정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 사회문화영역 의식통합지수에서 나타난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부동성(不動性)으로 남북한 주민 모두 전년대비 거의 모든 항목들에서 큰 변화가 없다. 이러한 결과가 나타난 이유는 2016년에는 한 차례의 이산가족 상봉이 있었던 2015년과 달리 사회문화영역의 의식통합에 영향을 미칠만한 유의미한 변화가 거의 없었기 때문이다.

□ 2017년 사회문화영역 의식통합지수가 상승한 이유는 역설적이게도 악화된 남북관계로 추정된다. 남북관계가 악화되어 전쟁을 걱정할 수준에 이르자, 한국인은 북한의 존재를 더 인식하게 되고 상대방을 수용할 수밖에 없는 현실을 인정하게 되었다. 반면, 남북한의 동질성은 악화되었다.

□ 2019년에 발표하게 될 사회문화영역 남북통합지수의 전망을 예측해 보면, 2018년에 비하여 대폭 상승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 대북 제재국면이 2018년에도 지속되었지만, 3차례 남북정상회담이 열렸고, 남북단일팀이 일부 종목에서 만들어졌고, 문화단이 상호 방문하였다. 이런 변화는 남북한 동질성에 대한 인식을 좋게 만들 것으로 예상된다.

3. 남북통합지수로 본 2017년 한반도: 평가와 전망

2017년 남북통합지수는 179.1점으로 2016년 최저치 177점보다 2.1점 상승했다. 2008년부터 2015년까지 남북통합지수가 190-200점을 시계추처럼 오가며 소폭의 등락을 보여 왔지만, 2016년부터 2017년 북한의 핵개발과 국제사회의 대북제재가 맞물리면서 남북간 교류가 최저치를 보였다. 남북관계가 전쟁을 걱정할 정도로 악화되자, 역설적이게도 한국인들은 북한의 존재를 인정하고 협력 대상으로 수용하는 입장을 보였다.

2017년 북한의 핵실험과 미국의 강경한 반응, 세컨더리 보이콧에 이르기까지 남북관계에 호재가 될 요인이 거의 전무했다. 햇볕정책을 계승할 것으로 예상되었던 문재인 정부의 집권이 남북관계 개선에 긍정적인 기여를 하지 않을까하는 기대 심리가 있었지만, 국제사회의 대북제재를 극복할 수 없었다. 국제공조를 깨뜨릴 수 있다는 우려로 인하여 국제사회가 문재인 정부의 행동을 주시하자, 문재인 정부도 남북관계에서 큰 변화를 모색할 수 없었다.

- 구조의 변화 그리고 의식의 변화

남북통합지수의 시계열 지수를 구조(관계와 제도)와 의식으로 구분하면 세 가지 의미있는 추세가 있다. 첫째, 관계통합지수가 2016년 이후 악화되었다. 2016년 이후 북한의 핵도전이 강화되자, 국제사회는 대북제재로 맞섰다. 국제사회의 연결망에 들어있는 한국은 국제사회의 대북제재에 참여할 수밖에 없었다. 이는 남북관계의 악화로 이어졌고, 결국 관계통합지수의 하락으로 이어졌다. 2017년 남북관계는 최악 상태로 떨어져, 전쟁 개연성마저 언급될 정도였다.

둘째, 북한에서 법제화가 진행되어 법적 측면에서 남북한 동질성이 조금씩 높아진다. 2013년 북한에서 5.30 조치로 명명된 새로운 경제관리조치와 나와 특히 경제 부분에서 남북한 동질성이 조금씩 높아지고 있다. 이는 북한의 일방적 조치로 인한 결과이다. 또한, 인권을 이유로 국제사회가 북한을 압박하면서 북한이 이를 점진적이지만 법적 체계로 반영되어, 북한에서 법제화가 다른 영역에서도 진행되고 있다. 이처럼 다양한 영역에서 북한의 법제화가 진행되면서, 남북한 법적 동질성이 높아지고 있다.

셋째, 의식통합에서는 역설적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남북관계가 상대적으로 좋을 시기 남북한 주민이 만나면 오히려 이질성이 확인되는 현상이 나타났다. 환상 속에 있던 한국인과 탈북민들이 직접 만나게 되면서 남북한 차이를 인식하게 되었다. 반면, 2016년부터 2017년 남북관계가 매우 악화되면서 한국인들이 북한에 대하여 더 많은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남북관계가 매우 악화되면 의식통합지수가 올라가고, 남북관계가 좋은 상태가 지속되면 의식통합지수가 떨어지는 현상이 확인된다.

- 조금씩 늘어나는 기회의 창

2017년 남북관계는 1968년 준전시상태, 1976년 미루나무사건, 2015년 DMZ 지뢰도발사건 후 남북대결에 버금갈 정도로 나빴다. 북한의 핵개발과 국제사회의 대결 사이에 남북관계도 피해할 수 없었다. 남북관계에서 새로운 길을 모색할 원하는 문재인 정부가 등장했지만, 북한과 국제사회 간 대결구도에서 벗어나기 어려웠다. 2017년 남북관계는 2000년 1차 남북정상회담 이래 최악이었다.

2018년 북한 김정은의 신년사 발표 이후 9월 제3차 남북정상회담까지 극적인 변화가 연이어 발생했다. 평창올림픽에서 북한이 참여하고, 남북예술단이 서로 교차 방문하고, 남북정상이 세 차례 만나고, 북미정상회담이 있었다. 북중 정상간 만남도 수차례 전개되었다. 마치 1970년대 미국과 중

국 간 관계정상화 과정에서 일어났던 큰 변화가 한반도에서 일어나는 듯 보였다.

2018년 한반도발 훈풍은 북한의 비핵화 쟁점에 막혀 확산되지 못하고 있다. 비핵화에 대한 정의를 둘러싸고 ‘북한의 비핵화’와 ‘조선반도의 비핵화’가 엇갈린다. 서로 상대방에게 더 많은 양보를 하라고 버티고 있다. 과거와 같은 대결로 되돌아갈 수 있는 경고가 종종 흘러나온다. 동시에, 새로운 변화의 기초를 이어가려는 노력이 진행된다.

북한의 핵문제를 둘러싼 갈등이 지속되는 상황에서도 인도적 단체가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이 조금 늘어났다. 2017년 국제사회의 제재로 인하여 북한을 떠날 수밖에 없었던 국제인도적 단체가 북한에서 활동공간을 넓히고 있다. 한국 내 시민단체의 대북 활동도 조금이나마 늘어났다. 아직 기대에 미치지 못하지만, 대북 활동의 공간이 넓어졌다는 점은 확실하다.

– 새로운 남북관계를 기대하며

새로운 변화가 감지되는 국면에서 새로운 남북관계를 준비해야 한다. 과거 민족동질성에 대한 환상에서 시작된 남북관계가 현실 세계와 만나면서 좌절을 겪던 경험이 다시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 이전까지는 70여년간 분단에도 불구하고 남북한 동질성을 찾는 작업에 집중했다면, 이제부터 70여년간 분단이 가져온 차이를 확인해야 한다. 동시에 남북한 차이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 생각해야 한다.

남북한 이질성을 극복하는 방식은 민족관계라는 특수성을 반영해야 하지만, 동시에 인류 보편성을 반영해야 한다. 민족 특수성에 기반을 둔 남북관계개선 시도가 국제사회의 반대에 부딪히는 형국을 바꾸려면, 인류 보편성에 기반을 두어 남북관계를 시도해야 한다. 한국이 국제사회를 향하는 보편적 원칙과 일치하게 북한을 대할 때, 국제사회도 한국의 대북접근을 인정할 것이다. 동시에 북한도 국제사회의 시각에서 볼 때 어색한 정책을 수정하고

국제사회의 보편성을 수용하기에 노력해야 한다. 남북한이 국제사회의 보편성을 수용하게 될 때, 남북통합은 국제사회의 축하 속에 진행될 수 있다.

2

2018년
남북통합지수

1장. 구조통합지수

2장. 의식통합지수

3장. 남북통합지수: 2010~2017

IPUS

1장. 구조통합지수

1. 경제

가. 지수구성

〈표 2-1〉 경제영역 변인들의 분류와 배점

영역	지표	배점
제도적 통합	· 공동의 경제제도나 정책의 존재	30
	· 동일화폐 사용	30
	· 남북한 경제분야 공동법제화	30
관계적 통합	· 남북교역액/북한 총 무역액 : 교역부문	20
	· 한국의 대북투자액/북한 국민소득 : 투자부문	20
	· 남한기업이 고용한 북한 노동자의 수/남한기업이 고용가능한 최대 북한 노동자 고용수 : 노동부문	20
	· 관세정도와 비관세장벽의 존재 : 무역자유화 부문	20
	· 경제교류를 뒷받침 하는 제도적 장치 확립 정도	20
	· 소득수준의 수렴	20
	· 이자율의 수렴	10
	· 인플레이션율의 수렴	10
	· 경기변동의 동조화	10
	· 금융시장의 통합정도	10

- 이상의 변인들에 부여된 점수를 가산하여 경제통합의 단계를 다음과 같이 11단계로 구분한다.

- 0단계 (물적 자원의 교류가 없거나 있더라도 미미한 수준임): 10점 이하

- 1단계 (물적 자원이 교류되고 있으나 그 비중은 낮음): 11-20점
- 2단계 (물적 자원이 교류되고 있으며 그 비중이 높음): 21-30점
- 3단계 (물적 자원 교류의 비중이 높으며 이를 뒷받침하는 제도적 지원 (주로 매개적 제도)이 마련됨): 31-50점
- 4단계 (3단계 + 관세나 수입할당 등이 없으며 자유로운 수출입이 가능): 51-70점
- 5단계 (4단계 + 비관세 장벽을 철폐하고 자본이동을 자유화함, 상당한 정도의 노동 이동도 가능): 71-100점
- 6단계 (5단계 + 회원국의 정책을 구속하는 제도(위임적 제도)의 수립): 101-130점
- 7단계 (6단계 + 동일 화폐 사용): 131-160점
- 8단계 (7단계 + 경제정책의 대부분이 국가 공동의 기구와 제도에 위임): 161-190점
- 9단계 (8단계 + 모든 경제정책이 국가 공동의 기구와 제도에 위임): 191-220점
- 10단계 (9단계 + 실질적인 경제적 통일을 이룬 단계): 221-250점

나. 제도통합지수

1) 공동의 경제제도나 정책의 존재

- 공동의 경제제도와 정책 부문은 현재까지 공동의 경제정책(통합재정, 공동 중앙은행)을 위임하기 위한 위임기관(delegated institutions)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예년과 같이 0점을 부여한다.
- 이 부문의 배점은 30점으로 남북한 통합재정의 존재유무와 그 정도에 따라 15점을 배점하고, 남북한 중앙은행의 존재유무와 그 권한 정도에 따라 15점 배점한다.
- 현재는 남북한 정부의 경제정책 권한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임받은 공동

기관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공동 제도·정책 부문의 점수는 0점이다.

2) 공동화폐의 사용 - 화폐 동맹

- 남북한 공동화폐 사용 부문도 현재까지는 진전이 없으므로 예년과 같이 0점을 부여한다.
- 이 부문의 배점은 30점으로 남북한 공동화폐 사용이 EU의 경우와 같이 점진적으로 이루어진다는 가정 하에 다음과 같이 이루어진다.
- 1단계: 북한화폐 태환화 10점 2단계: 북한화폐의 남한 화폐에 대한 페그(peg) 10점 3단계: 남북한 공동화폐의 사용 10점

3) 남북한 경제분야 공동법제화

- 남북한 법제의 공동법제화는 전문가 평가에 기초한 '법제화 수준' 배점과 △사유재산권, △경제적 자유화, △금융제도의 확립 등 세 부분으로 나누어 평가한 '법제의 실효화' 배점의 합으로 측정된다.
- 경제분야 법제화 수준은 △북한의 법제화 수준, △남북한 법제의 수렴정도, △남북공동법제의 구속력 수준으로 나누어 전문가 조사를 통해 측정한다. 전문가 조사는 10명의 북한법 전문가들이 세 개의 지표에 대해 각각 10점 척도로 점수를 부과, 그 부문별 점수를 합계한 후, 15점 만점으로 환산하는 방식을 따른다. 2018년 7월에 실시된 전문가 조사 결과, 2017년 경제분야 남북한 공동법제화 수준은 15점 만점에 6.6점으로 평가되었으며, 이것은 작년보다 0.8점 상승한 수치이다.
- '북한 경제 분야 법제화 수준', '경제 분야 남북한 법제의 수렴정도', '공동법제의 구속력'은 모든 분야에서 전년 대비 소폭 상승하였다. 이는 북한의 경제 제도 개선이 실질적인 변화 발전으로 이어지지 않고 단순히 시장을 묵인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으며, 북한의 핵·미사일 실험과 남한을 비롯

한 국제 사회의 경제 제재가 이어지면서 남북한 간 경제 협력 움직임 역시 정체되어 있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 북한의 최근 경제 관련 법령의 입법은 미진한 상태이나, 연말 김정은 위원장이 '핵무력 완성'을 선언한 뒤 '사회주의 경제강국 건설'에 돌입할 것으로 강조하여 경제분야 법제화의 진전을 기대하게 하였으며, 남한 내에서도 남북교류와 협력을 예정하여 남북교류협력법 및 남북관계발전법 개정 논의가 활발히 전개되는 등 남북경협에 대한 기대감이 고조되면서 경제분야 법제도화 점수 상승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된다.

〈표 2-2〉 경제분야 법제화 전문가 설문조사 결과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북한의 경제분야 법제화 수준	2.4	2.7	2.6	3.0	2.9	2.8	2.7	3.0
경제분야 남북한 법제의 수렴 정도	2.1	2.0	1.6	1.8	1.7	1.6	1.6	1.9
경제분야 공동법제 구축력	2.2	2.0	1.4	1.8	1.9	1.4	1.5	1.8
합계	6.7	6.7	5.6	6.6	6.5	5.8	5.8	6.6 ^a

(a : 합계 점수는 각 부문별 점수를 '합산 후 반올림' 한 것이며, 부문별로 반올림 후 합산한 것과는 차이가 날 수 있음.)

- 법제 실효화 수준은 △사유재산권, △경제적 자유화, △금융제도의 확립 등 세 부분으로 나누어 평가한다.
- 2009년 화폐 개혁의 단행으로 '사유재산권' 부분의 점수가 하락하고, 2010년 3월 북한이 금강산 지구 내 남한 투자 자산에 대한 몰수를 통보하여 경제적 자유화 부문 중 '투자의 자유'가 침해된 이후 이에 대한 개선의 여지가 없어 전년과 동일한 1점을 유지하였다.
 - 법제의 실효화 점수는 1998년 헌법 개정을 통해 개인 및 생산 수단의 소유가 일부 인정되어 '사유재산권' 부분에서 1점의 점수를 부여한 바 있고, 헌법 개정 이후 후속 작업으로 외국인투자 관련법과 경제특구법이 제정되어 이를 '투자의 자유'와 관련된 경제적 자유가 일부 존재하

는 것으로 판단하여 추가로 1점을 부여하였었다. 이에 따라 1998년 이후 2008년까지 실효화 점수는 2점대를 유지하였다.

- 하지만, 2009년 말 전격적으로 단행된 화폐 개혁이 개인의 재산권을 심대하게 침해한 것으로 판단하여 '사유재산권' 부분에서 0.5점을 감점하였고, 2009년 실효화 점수는 1.5점을 부여하였다.
- 또한 2010년 3월 북한이 '금강산 지구 내 남한 투자 자산에 대한 몰수를 통보한 점'을 경제적 자유화 부문 중 '투자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평가하여, 2010년 실효화 점수는 0.5점 하락한 1점을 부여하였다. 2010년 이래로 '사유재산권', '경제적 자유화', '금융제도의 확립' 부분에서 이렇다 할 등락 요인이 없어 2010년과 동일한 1점을 부여하였다.

- 이상의 남북한 공동법제화 변인에 대한 점수를 종합해 보면, 전문가 평가에 의한 '법제화 수준' 점수 6.6점과 '법제의 실효화 수준' 점수 1점(2016년과 동일)을 합하여 7.6점이 된다.

4) 제도통합지수 종합

- 경제영역의 제도통합지수는 △공동의 경제제도와 정책의 존재, △공동의 화폐의 사용, △남북한 공동법제화 수준의 합계로 산정하여 7.6점을 부여한다.
- 현재 남북 사이의 공동의 경제제도와 정책, 공동의 화폐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이 두 항목의 점수는 0점이다.
- 남북한 공동법제화 수준은 위에서 기술한 대로 법제화 수준과 법제의 실효화 수준을 합산하여 7.6점이 된다. 따라서 제도통합지수는 공동법제화 수준 점수와 동일하며 이는 아래 〈표 2-3〉에 나타나 있다.

〈표 2-3〉 제도통합지수 종합

	공동제도와 정책(30)	동일화폐 사용(30)	남북한 공동법제화(30)		법제, 제도적 통합
			법제화(15)	실효화(15)	
1989	0	0	1	0	1
1990	0	0	1	0	1
1991	0	0	1	0	1
1992	0	0	2	0	2
1993	0	0	2	0	2
1994	0	0	2	0	2
1995	0	0	2	0	2
1996	0	0	2	0	2
1997	0	0	2	0	2
1998	0	0	3	2	5
1999	0	0	3	2	5
2000	0	0	3	2	5
2001	0	0	3	2	5
2002	0	0	3.5	2	5.5
2003	0	0	3.5	2	5.5
2004	0	0	4	2	6
2005	0	0	4	2	6
2006	0	0	4.5	2	6.5
2007	0	0	6.3	2	8.3
2008	0	0	6.3	2	8.3
2009	0	0	7.2	1.5	8.7
2010	0	0	6.7	1	7.7
2011	0	0	6.7	1	7.7
2012	0	0	5.6	1	6.6
2013	0	0	6.6	0.6*	7.2
2014	0	0	6.5	1	7.5
2015	0	0	5.8	1	6.8
2016	0	0	5.8	1	6.8
2017	0	0	6.6	1	7.6

* 개성공단이 5개월 가량 폐쇄되었던 점을 감안하여 1-5/12의 점수를 부여함

다. 관계통합지수

1) 교역부문

- 2017년 북한의 무역액(남북교역 제외)은 55.5억 달러로 전년대비 15% 감소한 수치이다. 수출은 37.2% 감소한 17.7억 달러, 수입은 1.8% 증가한 37.8억 달러로 무역수지는 20.1억 달러 적자를 기록하였다.
- 2016년 말 북한의 석탄 수출의 상한을 설정한 UN안보리 결의안 2321호가 통과된데 이어, 2017년에는 광물, 수산물, 섬유제품의 수출을 전면금지한 결의안이 연달아 통과되면서 북한의 주요 수출 품목이 대부분 차단되었고, 이것이 2017년 북한의 수출액 급감을 야기하였다. 반면 수입의 경우 산업 기반이 취약한 북한의 특성 상 수입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필수 품목이 많고, 2017년까지는 제재의 영향도 거의 받지 않아 전년 수준을 유지하였으며 이에 북한의 2017년 총 대외교역액은 전년 대비 약 9.8억 달러 감소하였다.
- 2017년 남북교역액은 약 100만 달러로 전년대비 99.7% 감소하였고, 북·중 교역액은 13.2% 감소한 52.6억 달러를 기록하였다.
- 2010년 5.24 조치로 대부분의 일반 교역 및 위탁 가공 교역이 중단된 가운데 개성공단을 통해 그 명맥이 유지되고 있었으나, 2016년 2월 10일 개성공단이 폐쇄되면서 이후의 남북교역은 거의 전무한 상태이다. 2017년에는 민간 대북지원단체의 인도적 지원 물자 반출이 예외적으로 3차례 승인되었을 뿐 남북 간 상업적 거래는 전면 차단되어 있다.
- 이에 2017년, 북한의 전체 무역에서 남한과의 교역이 차지하는 비율은 0.02%로 의미 없는 수준이다.
- 2017년에도 중국과의 교역은 북한의 전체 무역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였다. 사실상 북한의 제2교역국이었던 남한과의 교역이 2016년 2월 이후 전면 중단되고, 국제 제재의 영향으로 다른 주요 교역국과의 무역

액 또한 줄어들면서 60~70% 수준이던 북한의 대중 무역 의존도는 작년의 88%에서 올해 95%까지 급증하였다.

- 가장 많이 수출된 품목은 의류/부속품(HS62)로 전체 대중수출에서 28.2%인 5억 달러를 기록하였고 이는 전년대비 18.6% 감소한 수치이다. 기존까지 최대 수출 품목이었던 광물성 연료 및 광물유(HS27)는 연초부터 이행된 국제 제재의 영향으로 65.3% 하락하여 4.13억 달러로 의류에 이어 2위로 내려 앉았다.

- 가장 많이 수입된 품목은 광물성 연료 및 광물유(HS27)이며 총 4.12억 달러로 전체 수입의 10.9%를 차지하였으나 2016년과 비교하여 6.1% 감소하였다. 전기기기(HS85)가 9.0%, 기계류(HS84)가 7.2%로 뒤를 이었다.

- 2017년 북한 무역현황에서 드러난 가장 중요한 특징은 제재로 인한 수출의 급감과 주요 거래 품목의 변화이다.
- 2017년 발효된 UN 대북제재 결의안은 특히 북한의 수출을 집중적으로 타격하였고, 제재를 우회할 수 있는 여지를 대부분 차단하여 북한의 수출액 급감을 야기하였다. 또한 광물, 섬유 제품, 수산물의 수출이 시간차를 두고 금지되어 상대적으로 금수조치가 일찍 발효된 광물 제품의 수출이 상대적으로 큰 폭의 감소세를 보였다. 이에 광물 제품의 상대적인 비중 또한 다른 품목 군에 비해 떨어지는 모습이 나타났다.
- 이상을 종합하면, 교역부문 상대점수는 남북 교역의 전면 중단을 반영하여 전년 대비 1.1점 하락한 0.0점을 기록하였다¹⁾.

1) 교역부문의 상대점수는 EU나 COMECON과 같이 경제통합도가 높은 경제공동체의 '역내교역비중'과 남북교역 비중을 비교하여 산출하였다. 2006년 유럽연합 27개의 회원국가의 국가별 전체 교역액 중 역내 교역(intra-EU)의 비중 자료와 1985년 CMEA (Council for Mutual Economic Assistance) 회원국 6개국(불가리아, 체코, 헝가리, 폴란드, 루마니아, 소련연방)의 역내 수출비중 자료를 사용한다. 각각 68.9%와 56%로 이 두 수치의 평균인 62.4%를 상대점수 산출을 위한 기준으로 삼았다.

〈표 2-4〉 교역부문 상대점수

(단위: 백만 달러, %)

연도	북한 무역액 ^a (A)	남북 교역액 ^b (B)	북한 총 무역액 (C=A+B)	남북 교역 비중 (D=B/C)	상대점수 (E=(D*14)/62.4)
1989	4,516	19	4,534	0.4%	0.1
1990	4,170	14	4,184	0.3%	0.1
1991	2,584	111	2,695	4.1%	0.9
1992	2,555	173	2,728	6.4%	1.4
1993	2,646	187	2,833	6.6%	1.5
1994	2,100	195	2,295	8.5%	1.9
1995	2,052	287	2,339	12.3%	2.8
1996	1,977	252	2,229	11.3%	2.5
1997	2,177	308	2,485	12.4%	2.8
1998	1,442	222	1,664	13.3%	3.0
1999	1,480	333	1,813	18.4%	4.1
2000	1,969	425	2,394	17.8%	4.0
2001	2,270	403	2,673	15.1%	3.4
2002	2,260	642	2,902	22.1%	5.0
2003	2,391	724	3,115	23.2%	5.2
2004	2,857	697	3,554	19.6%	4.4
2005	3,002	1,056	4,058	26.0%	5.8
2006	2,996	1,350	4,346	31.1%	7.0
2007	2,940	1,798	4,738	37.9%	8.5
2008	3,816	1,820	5,636	32.3%	7.2
2009	3,414	1,679	5,093	33.0%	7.4
2010	4,174	1,912	6,086	31.4%	7.1
2011	6,316	1,714	8,030	21.3%	4.8
2012	6,811	1,971	8,782	22.4%	5.0
2013	7,340	1,136	8,476	13.4%	3.0
2014	7,610	2,343	9,953	23.5%	5.3
2015	6,252	2,711	8,963	30.2%	6.8
2016	6,532	332	6,879	4.8%	1.1
2017	5,550	1	5551	0.0%	0.0

a. Kotra, 『북한대외무역동향』, 각년호 (남북교역액은 제외).

b. 통일부 주요 사업 통계, "남북 교역액 현황", <<https://www.unikorea.go.kr/unikorea/business/statistics>, 검색일 2018.10.04>.

2) 투자부문

- 대북투자액은 크게 ‘정부 대북투자’와 ‘민간 대북투자’로 구분될 수 있으나, 현재까지는 정부주도의 투자가 이루어지는 점을 감안하여 정부 대북투자규모를 중심으로 대북투자액을 산정하였다.
- 정부 대북투자액은 남북협력기금 중 투자의 성격으로 볼 수 있는 두 가지 항목 △경협기반조성 무상지원액(이하 지원액), △남북교류협력지원 용자액(이하 용자액)의 합산을 통해 산출하였다.
- 2017년 남북협력기금 중 투자 성격으로 규정한 지원액과 용자액의 합은 약 1천5백만 달러로 전년대비 39% 감소하였다.
- 2017년 ‘경협기반 조성 무상지원액’은 전년대비 25%가 감소한 854만 달러가 지출되었다. 위 금액은 대북 경협기반조성 사업 중 대북 투자와는 무관하다고 생각되는 ‘경원선 남측구간 복원사업’, ‘개성공단 입주기업 투자자산 피해지원’, ‘개성공단 입주기업 유동(재고)자산 피해지원’,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 로드맵 수립 용역 지원’ 항목을 제외한 금액이다.
- ‘남북협력지원 용자액’은 전년대비 17% 감소한 266만 달러가 지출되었다.
- 2017년 투자부문 상대점수는 남북 경제 교류의 중단으로 인해 대북 투자 관련 지출 역시 대북 투자 관련 기관의 운영 경비 등에 제한되어 총액 면에서 감소하였으나, 북한의 국민소득 대비 크게 의미 없는 금액의 변화만 보였기에 상대점수는 0.2점으로 변동이 없었다²⁾³⁾.

2) 투자부문의 경제통합지수는 경제통합이 높은 지역에 포함된 국가들의 국민소득대비 외국인직접투자(FDI: Foreign Direct Investment)의 비중을 기준으로 삼고, 남한의 대북투자액을 이와 비교하여 산출하였다. 2004년 EU에 가입한 동유럽 8개국(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폴란드, 체코, 슬로바키아, 헝가리, 슬로베니아)의 GDP의 FDI 비중을 사용하였고, 기간은 2004년부터 2006년까지 고려하였다. 이들 국가들의 EU 통합 이후 3개년에 걸친 국민소득 대비 외국인직접투자 비중의 평균값은 5.9%이다.

3) 투자부문의 지수를 소수점 두자리까지 계산하면 0.21점에서 0.17점으로 0.04점 감소하였음.

전반적인 추세로 보면, 2010년 이후 남북관계가 경색되면서 정부의 대규모 대북투자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상대 점수는 1점 이하의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표 2-5〉 투자부문 상대점수(UN 명목소득 기준)

(단위: 백만 달러, %)

연도	정부투자(남북협력기금) ^a		민간 투자액 ^b	남한 전체 투자액 (A)	북한의 국민소득 ^c (B)	남한투자 비중 C=(A/B) *100	상대점수 D=(C*14) /5.87
	경협분야 기반조성 (경상지출)	남북교류 협력지원 (용자)					
1989					17,720	0.00	0.0
1990					16,706	0.00	0.0
1991					15,554	0.00	0.0
1992					13,842	0.00	0.0
1993					11,678	0.00	0.0
1994					9,334	0.00	0.0
1995					5,215	0.00	0.0
1996	4.9		5	9.9	10,528	0.09	0.2
1997			1	1.0	10,309	0.01	0.0
1998			1	1.0	10,260	0.01	0.0
1999			125	125.0	10,265	1.22	2.9
2000	14.6		22	36.6	10,593	0.35	0.8
2001	89.9	46.0	28	163.9	11,007	1.49	3.6
2002	36.8	35.7	12	84.5	10,887	0.78	1.9
2003	76.3	54.7	8	139.0	11,028	1.26	3.0
2004	76	81.4	12	169.4	11,145	1.52	3.6
2005	204.5	56.8	45	306.3	13,001	2.36	5.6
2006	152.1	71.0		223.1	13,741	1.62	3.9
2007	172.5	140.0		312.5	14,349	2.18	5.2
2008	110.0	36.6		146.6	13,327	1.10	2.6
2009	41.5	24.0		65.5	12,044	0.54	1.3
2010	17.7	45.2		62.9	13,960	0.45	1.1
2011	12.4	13		25.4	15,719	0.16	0.4
2012	23.8	22.1		45.9	15,962	0.29	0.7
2013	11.5	74.6		86.1	16,602	0.52	1.2

연도	정부투자(남북협력기금) ^{a)}		민간 투자액 ^{b)}	남한 전체 투자액 (A)	북한의 국민소득 ^{c)} (B)	남한투자 비중 C=(A/B) *100	상대점수 D=(C*14) /5.87
	경험분야 기반조성 (경상지출)	남북교류 협력지원 (용자)					
2014	20.0	22.3		42.3	17,462	0.24	0.6
2015	20.6	3.6		24.2	16,386	0.15	0.4
2016	11.5	3.2		14.7	16,837	0.09	0.2
2017	8.64	2.66		11.3	16,247 ^{d)}	0.07	0.2

- a. 통일부, "남북협력기금 현황", (1,000원 = 1달러 적용), <https://www.unikorea.go.kr/unikorea/business/interkoreanfund/bfPresent/>, 검색일 2018.10.04)
b. 김영훈, 2006, "남북경협 현황과 평가", 『금융경제연구』, 제281호.
c. UN, "GNI in US Dollars", <http://unstats.un.org/unsd/snaama/dnllist.asp>.
d. 2016년도 국민소득에서 한국은행이 발표한 2017년 북한경제성장률 -3.5%를 적용하여 산출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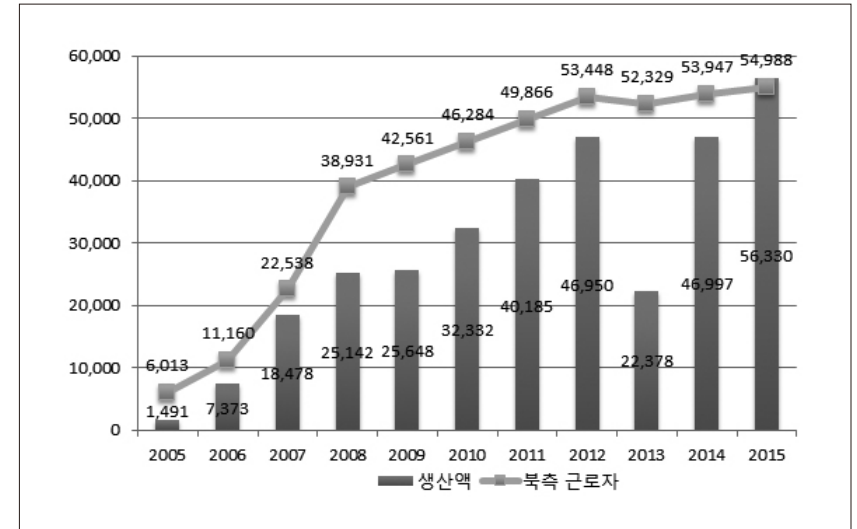
3) 노동부문

- 노동부문의 상대점수는 통일이후 예상되는 북한 노동인구의 남한 유입규모⁴⁾에 현재 고용된 북한노동력 규모를 비교하여 산출하였다.
- 남한기업이 고용한 북한 노동자의 수는 2015년 말 기준 개성 공단에 약 5만 5천 명이 있었으나, 2016년 2월 10일 개성공단이 폐쇄되어 현재는 남한 기업에 고용된 북한 노동자가 없다.
 - 이에 따라 2017년 노동부문의 상대점수는 전년대비 0.4점 하락한 0점을 기록하였다.
 - 2016년 이후 개성공단 생산액 및 노동자 관련 통계는 발표되지 않고 있으나, 2016년의 실효 노동자 수는 2015년 말 기록된 54,988명에 연중 개성공단이 가동된 날의 비율을 반영하여 조정한 결과 6,110명으로 계산된 바 있다.

4) 정창무(2007) 인구이동 예측결과에 2020년을 통일 시점으로 가정하고 거주이전의 자유가 보장되는 2025년부터 2040년까지 연평균 32만 명 정도의 북한주민이 남한지역으로 이동할 것으로 추정하였다.

<그림 2-1> 개성공단 고용 북한노동자와 생산액 추이

(단위: 만 달러, 명)



<표 2-6> 노동부문 상대점수

(단위: 명)

연도	남한기업 고용 북한노동자 ^{a)} (A)	상대점수 (A/320,000)*20
1989	0	0.0
1990	0	0.0
1991	0	0.0
1992	0	0.0
1993	0	0.0
1994	0	0.0
1995	0	0.0
1996	0	0.0
1997	0	0.0
1998	0	0.0
1999	0	0.0
2000	0	0.0
2001	0	0.0

연도	남한기업 고용 북한노동자 ^a (A)	상대점수 (A/320,000)*20
2002	0	0.0
2003	0	0.0
2004	0	0.0
2005	7,621	0.5
2006	11,189	0.7
2007	22,538	1.4
2008	38,931	2.4
2009	42,561	2.7
2010	46,284	2.9
2011	49,866	3.1
2012	53,448	3.3
2013	30,525b	1.9
2014	53,947	3.4
2015	54,988	3.4
2016	6,110 ^c	0.4
2017	0	0.0

a. 통일부, "개성공단 사업 주요 통계", <http://www.unikorea.go.kr/cms/getFile.do?file=2017070714065518271.xls&orgname=%EA%B0%9C%EC%84%B1%EA%B3%B5%EB%8B%A8%EC%82%AC%EC%97%85_%EC%B5%9C%EC%A2%85.xls&mgmtId=MGMT_0000000350&siteId=SITE_00001&filePath=unikorea/common/file/&count=Y>.

b. 연말 노동인구 52,379명에 개성공단 폐쇄일 수를 고려한 (1-5/12)를 곱하여 산출함

c. 전년도 연말 노동인구 54,988명에 개성공단 폐쇄일 수를 고려한 (1-32/36)를 곱하여 산출함

4) 무역자유화 부문

- 2017년에는 일부 인도적 지원을 제외한 남북 교류가 전면 중단된 것을 반영하여 0점을 부여한다.
- 무역자유화 부문은 크게 '상품무역'과 '서비스무역' 자유화정도의 합산을 통해 상대점수를 산출한다.
- 상품무역은 다시 '관세 유무'와 '교역금지품목 범위' 등 두 가지 범주로 나누어 평가한다.
 - 2010년 '5.24 대북조치'로 인해 같은 해 6월 「반출·반입 승인대상품

목 및 승인절차에 관한 고시」가 개정된 후 모든 물품의 반출입 시 통일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극소수의 예외를 제외하면 승인을 받기 어려워졌다. 이에 개성공단을 제외한 남북 교역이 거의 중단되면서 상품 무역자유화 정도에 심대한 제한이 발생한 것으로 판단되어 2010년부터 0.5점이 낮은 4.5점을 부여하여 왔다.

- 2016년 2월에는 개성공단마저 잠정 폐쇄되면서 2017년에는 남북 간 상품 교역이 전면 중단된 상태이므로 상품 무역자유화 점수는 0점을 부여한다.

○ 서비스무역에 대한 자유화 점수는 '북한 서비스시장에 대한 접근성'과 '남한인력의 국경 간 이동' 등 두 가지 범주에서 평가한다.

- 2010년 이후 '5.24 조치'로 인해 개성공단사업을 제외한 경험사업에 대해서는 남한 사업자들이 방북승인이 불가한 상황을 반영하여 1.5점을 부여하여 왔다.
- 2017년에는 개성공단 중단 이후 인적 왕래가 전무한 상황을 반영하여 0점을 부여한다.

〈표 2-7〉 무역자유화 부문 상대점수

연도	상품무역(10) (A)	서비스무역(10) (B)	상대점수 (C=A+B)	비고
1989	5.0	0.0	5.0	
1990	5.0	0.0	5.0	
1991	5.0	0.0	5.0	
1992	5.0	0.0	5.0	
1993	5.0	0.0	5.0	
1994	5.0	0.0	5.0	
1995	5.0	0.0	5.0	
1996	5.0	0.0	5.0	
1997	5.0	0.0	5.0	
1998	5.0	0.0	5.0	
1999	5.0	0.0	5.0	

연도	상품무역(10) (A)	서비스무역(10) (B)	상대점수 (C=A+B)	비고
2000	5.0	0.0	5.0	
2001	5.0	0.0	5.0	
2002	5.0	0.0	5.0	
2003	5.0	0.0	5.0	
2004	5.0	1.0	6.0	개성공단·금강산 통행합의서 채택(1)
2005	5.0	2.0	7.0	KT 개성공단 통신서비스 개시(1)
2006	5.0	2.0	7.0	
2007	5.0	2.0	7.0	
2008	5.0	2.0	7.0	
2009	5.0	1.5	6.5	'12.1 조치' : 인적이동 제한 '유씨 억류사건' : 거주인력 안정 보장 문제 발생
2010	4.5	1.5	6.0	'5.24 조치' : 상품무역 및 인력 이동에 대한 제약요인 발생
2011	4.5	1.5	6.0	
2012	4.5	1.5	6.0	
2013	2.6	1.5	4.1	개성공단 폐쇄(5개월)에 따른 점 수 차감
2014	4.5	1.5	6.0	'5.24 조치'에 따른 상품과 인력이동의 제한 지속
2015	4.5	1.5	6.0	
2016	0.5	0.2	0.7	개성공단 폐쇄(2월10일 이후)에 따른 점수 차감
2017	0.0	0.0	0.0	남북 상품 무역 및 인적 왕래 전면 중단

5) 경제 교류를 뒷받침하는 제도적 장치 확립 정도

- 2017년에는 남북경제협력 확대를 위해 설치되었던 매개제도인 '남북경제협력공동위원회(이후 공동위원회)'가 명목상 존재할 뿐 개최된 바 없으며 기타 경제 관련 회담의 개최 또한 전무하여 작년과 동일한 3.0점을 부여한다.

- 본 연구에서는 남북경제협력 확대를 위한 매개제도(intermediating institutions)를 2007년 2차 정상회담이후 설치된 '남북경제협력공동위원회'로 규정하고, 매개제도의 존재와 실질적인 작동여부를 구분하여 점수를 부여한다.
- 제도 확립의 질적인 측면에서는 매개제도인 공동위원회가 2017년에도 계속 명목상으로나마 존재하는 상황이므로 '매개 제도의 존재'에 대해 3점을 부여하나 실질적인 작동은 하지 않았기 때문에 '매개 제도의 작동' 점수는 0점이다.
- 제도 확립의 양적인 측면에서는 경제 관련 남북회담의 개최가 전무하였으므로 역시 0점을 부여한다.

〈표 2-8〉 제도장치 확립부문 상대점수

(단위: 회)

연도	질적변수			양적변수 ⁵⁾				연도별 점수에 따른 상대점수	상대 점수
	위임 제도의 존재	매개 제도의 존재	매개 제도의 작동 ^a	회담 개최수	합의서 채택수	합의서 가중치	연도별 점수		
1989							0.0	0.0	0.0
1990							0.0	0.0	0.0
1991							0.0	0.0	0.0
1992							0.0	0.0	0.0
1993							0.0	0.0	0.0
1994							0.0	0.0	0.0
1995							0.0	0.0	0.0
1996							0.0	0.0	0.0
1997							0.0	0.0	0.0
1998							0.0	0.0	0.0
1999							0.0	0.0	0.0
2000	0.0	3.0	2.0	3	0	0.0	3.0	0.5	5.5
2001	0.0	3.0	0.0	3	2	3.0	6.0	0.5	3.5

연도	질적변수			양적변수 ⁵⁾					상대 점수
	위임 제도의 존재	매개 제도의 존재	매개 제도의 작동 ^a	회담 개최수	합의서 채택수	합의서 가중치	연도별 점수	연도별 점수에 따른 상대점수	
2002	0.0	3.0	2.0	14	11	16.5	30.5	1.5	6.5
2003	0.0	3.0	2.0	17	14	21.0	38.0	2.0	7.0
2004	0.0	3.0	2.0	13	8	12.0	25.0	1.5	6.5
2005	0.0	3.0	2.0	11	6	9.0	23.0	1.5	6.5
2006	0.0	3.0	2.0	8	3	4.5	12.5	1.0	6.0
2007	0.0	3.0	2.0	22	16	24.0	46.0	2.5	7.5
2008	0.0	3.0	0.0	3	1	1.5	4.5	0.5	3.5
2009	0.0	3.0	0.0	4	0	0.0	4.0	0.5	3.5
2010	0.0	3.0	0.0	3	0	0.0	3.0	0.5	3.5
2011	0.0	3.0	0.0	0	0	0.0	0.0	0.0	3.0
2012	0.0	3.0	0.0	0	0	0.0	0.0	0.0	3.0
2013	0.0	3.0	0.0	22	5	7.5	29.5	1.5	4.5
2014	0.0	3.0	0.0	3	0	0.0	3.0	0.5	3.5
2015	0.0	3.0	0.0	1	0	0.0	1.0	0.5	3.5
2016	0.0	3.0	0.0	0	0	0.0	0.0	0.0	3.0
2017	0.0	3.0	0.0	0	0	0.0	0.0	0.0	3.0

a. 2000년 이후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또는 남북경제협력공동위원회가 개최되었을 경우 매개제도가 작동한 것으로 보고 2점을 부여하였음.

* 자료 : 통일부 남북회담본부, <http://dialogue.unikorea.go.kr>.

5) 제도 확립관련 양적변수는 다음의 방식으로 산출한다.

* 합의서 가중치 : 합의서 채택은 회담 개최에 비해 상대적으로 어렵고 파급효과도 크다는 점을 감안하여, 회담 개최에 비해 0.5의 가중을 더 주었다.

* 연도별 점수는 다음 수식으로 산출: 연도별점수=경제회담 개최 수+경제관련 합의서 채택 수 *1.5

* 상대점수는 연도 연도별 점수에 따라 0~5점까지 범위에서 상대점수를 부여한다. 하지만, 연도별 점수가 80이상을 넘을 만큼 활발히 회담이 개최되고, 합의서가 채택된다고 할지라도 상대점수는 5점 이상 부여할 수 없다. 이는 매개제도의 존재와 활발한 활동만으로는 10점 이상의 점수는 부여될 수 없고, 위임제도가 존재하였을 때만이 그 이상의 점수를 부여할 수 있음을 함의하고 있는 것이다.

6) 소득수준 수렴

- 2017년에 남한은 3.1%의 경제성장률을 보였으며, 북한은 3.5%의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하여 남북한 간 소득격차는 더욱 벌어졌다.
- 북한의 소득수준은 여전히 남한의 10%이하 수준이어서 소득수렴 부문의 상대점수는 예년과 같은 0점을 기록하였다.
- 2017년을 기준으로 남한의 1인당 소득 대비 북한 1인당 소득수준은 2.2% 정도이다.

<표 2-9> 소득수준 수렴부문 상대점수(UN 명목소득 기준)

(단위: 달러, %)

연도	북한	남한	비율	상대점수
1989	911	5,711	16.0%	1.74
1990	835	6,498	12.8%	1.08
1991	753	7,496	10.0%	0.42
1992	659	7,966	8.3%	0
1993	547	8,692	6.3%	0
1994	432	10,129	4.3%	0
1995	239	12,222	2.0%	0
1996	476	13,016	3.7%	0
1997	461	11,992	3.8%	0
1998	455	7,916	5.7%	0
1999	451	10,199	4.4%	0
2000	461	11,767	3.9%	0
2001	475	11,095	4.3%	0
2002	467	12,635	3.7%	0
2003	470	14,045	3.3%	0
2004	472	15,739	3.0%	0
2005	547	18,295	3.0%	0
2006	574	20,616	2.8%	0
2007	596	22,813	2.6%	0

연도	북한	남한	비율	상대점수
2008	550	20,361	2.7%	0
2009	495	18,222	2.7%	0
2010	570	22,110	2.6%	0
2011	639	24,315	2.6%	0
2012	645	24,731	2.6%	0
2013	668	26,210	2.5%	0
2014	699	28,099	2.5%	0
2015	652	27,405	2.4%	0
2016	667	27,813	2.4%	0
2017 ^a	640	28,566	2.2%	0

※ 자료: UN, "Per Capita GNI in US Dollars", <<http://unstats.un.org/unsd/snaama/dnllist.asp>>.
a. 2017년 소득은 2016년 자료에 한국은행에서 산출한 남북한 경제성장률을 곱하여 산출함. 전반적인 통계수치는 각 해에 발표된 UN 공식통계를 반영하여 재조정됨.

7) 이자율의 수렴

- 이자율의 수렴은 남북한의 월별 대출이자율과 화폐시장이자율의 상관계수를 이용하여 측정한다.
- 이자율의 수렴정도는 북한에 시장경제가 도입된 이후에 통합지수의 일부로 이용될 것이며 따라서 이 부문에서의 현재 점수는 0점을 부여한다.

8) 인플레이션율의 수렴

- 인플레이션율의 수렴은 남북한의 월별 CPI로 측정된 인플레이션의 상관계수를 사용하여 계산한다.
- 현재 북한에서는 전반적인 가격자유화가 진행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부문에서의 점수도 0점을 부여한다.

9) 경기변동의 동조화

- 경기변동의 동조화는 월별 산업생산량(industrial production) 자료를 활용하되 추이(trend)를 제거한 데이터를 사용한다.
- 현재 북한과 남한의 경기변동을 동조화시키는 요인들을 찾기 어려우므로 이 영역에서의 현재 점수도 0점으로 평가한다.

10) 자본시장의 통합 정도

- 북한에 주식과 채권시장 등 자본시장 개설이후 '북한의 포트폴리오 투자액과 남한저축액과의 상관계수' 및 '남북한 주식시장 수익률 상관계수' 등을 이용하여 자본시장의 통합정도를 측정한다. 현재 이 부문의 상대점수는 0점으로 평가한다.

라. 종합

- 2017년 경제영역 구조통합지수는 전년대비 1.3점 하락한 10.8점을 기록하였고, 이는 통합단계로는 1단계에 해당하는 수치이다.
- 2017년에는 남북 경제 교류 전면 중단으로 인한 △ 남북 교역 비중 감소, △ 남한 기업의 북한 노동자 고용 감소, △ 상품 및 서비스 무역의 자유화 정도 감소가 지수의 하락을 이끌었다.
- 통합단계는 전년과 동일한 1단계를 기록하였으며, 이는 '물적 자원이 교류되고 있으나, 그 비중은 낮은 단계'이다.
 - 그러나 이것은 2018년의 경험 재개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된 것으로 2017년의 상황만으로 평가하면 통합 단계를 사실상 0단계로 볼 수 있다.

〈표 2-10〉 2016년/2017년 경제영역 구조통합지수 변화부문 지수 비교

	부문	2016년	2017년	증감	요인
변화 부문	경제분야 공동 법제화	6.8	7.6	0.8	- 향후 경험 재개 및 제도화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되어 법제 실효화 부문 전문가 평가점수 상승
	교역	1.1	0.0	-1.1	- 남북 경제 교류 전면 중단으로 인한 교역액 감소
	노동	0.4	0.0	-0.4	- 남북 경제 교류 전면 중단으로 인한 실효 노동자 수 감소
	무역자유화	0.7	0.0	-0.7	- 남북 경제 교류 전면 중단으로 인한 상품 및 인적 이동의 자유화 정도 하락
불변 부문	투자 ⁶⁾	0.2	0.2	-	- 남북경협기금 투자관련 지출액 감소 (점수는 불변)
	경제적 위임	3.0	3.0	-	- 남북경제협력공동위원회 (이후 공동위원회) 명목상 존재, 회담 및 합의서 채택 없음
	공동제도와 정책	0	0	-	- 공동의 경제정책 (통합재정, 공동 중앙은행)을 위임할 위임기관 부재
	공동화폐의 사용	0	0	-	- 남북공동 화폐 사용 관련 진전 없음.
	소득 수렴	0	0	-	- 남북간 소득격차 소폭 축소
	이자율 수렴	0	0	-	- 북한의 시장 이자율 미확립
	인플레이션 수렴	0	0	-	- 북한의 가격 자유화 미도입
	경기변동 동조화	0	0	-	- 남북한 경기변동 동조 요인이 없음.
	자본시장 통합도	0	0	-	- 북한 자본시장 미도입
계			-1.3 ⁷⁾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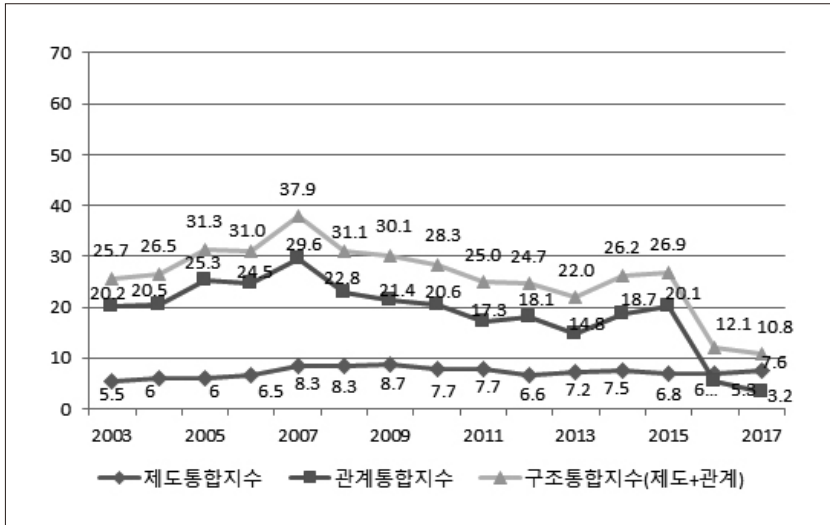
6) 투자부문의 지수는 소수점 둘째자리까지 표시할 경우 0.21점에서 0.17점으로 0.04점 감소하였으나, 남북 통합지수에서는 소수점 첫째자리까지 표시하는 것이 원칙임에 따라 불변으로 나타났다.

7) 각 부문의 변화를 소수점 둘째자리에서 반올림한 후 합산하면 2016년 대비 1.4점 감소한 것으로 계산되나, 먼저 부문별 점수를 합산한 후 증감을 계산하면 1.3점 감소한 것이다.

〈표 2-11〉 경제영역 구조통합지수 종합(UN 명목소득 기준)

연도	제도통합 (90)			관계통합 (160)										합계 (250)	통합 단계
	공동 제도와 정책 (30)	동일 화폐 사용 (30)	법제의 시장 경제화 (30)	교역 (20)	투자 (20)	노동 (20)	무역 자유화 (20)	제도 장치 (20)	소득 수렴 (20)	이자율 수렴 (10)	인플 레이션 수렴 (10)	경기 변동 동조화 (10)	자본 시장 통합 정도 (10)		
1989	0.0	0.0	1.0	0.1	0.0	0.0	5.0	0.0	1.5	0.0	0.0	0.0	0.0	7.8	0단계
1990	0.0	0.0	1.0	0.1	0.0	0.0	5.0	0.0	0.9	0.0	0.0	0.0	0.0	7.2	0단계
1991	0.0	0.0	1.0	0.9	0.0	0.0	5.0	0.0	0.0	0.0	0.0	0.0	0.0	7.3	0단계
1992	0.0	0.0	2.0	1.4	0.0	0.0	5.0	0.0	0.0	0.0	0.0	0.0	0.0	8.4	0단계
1993	0.0	0.0	2.0	1.5	0.0	0.0	5.0	0.0	0.0	0.0	0.0	0.0	0.0	8.5	0단계
1994	0.0	0.0	2.0	1.9	0.0	0.0	5.0	0.0	0.0	0.0	0.0	0.0	0.0	8.9	0단계
1995	0.0	0.0	2.0	2.8	0.0	0.0	5.0	0.0	0.0	0.0	0.0	0.0	0.0	9.8	0단계
1996	0.0	0.0	2.0	2.5	0.2	0.0	5.0	0.0	0.0	0.0	0.0	0.0	0.0	9.8	0단계
1997	0.0	0.0	2.0	2.8	0.0	0.0	5.0	0.0	0.0	0.0	0.0	0.0	0.0	9.8	0단계
1998	0.0	0.0	5.0	3.0	0.0	0.0	5.0	0.0	0.0	0.0	0.0	0.0	0.0	13.0	1단계
1999	0.0	0.0	5.0	4.1	2.9	0.0	5.0	0.0	0.0	0.0	0.0	0.0	0.0	17.0	1단계
2000	0.0	0.0	5.0	4.0	0.8	0.0	5.0	5.5	0.0	0.0	0.0	0.0	0.0	20.3	1단계
2001	0.0	0.0	5.0	3.4	3.6	0.0	5.0	3.5	0.0	0.0	0.0	0.0	0.0	20.4	1단계
2002	0.0	0.0	5.5	5.0	1.9	0.0	5.0	6.5	0.0	0.0	0.0	0.0	0.0	23.8	2단계
2003	0.0	0.0	5.5	5.2	3.0	0.0	5.0	7.0	0.0	0.0	0.0	0.0	0.0	25.7	2단계
2004	0.0	0.0	6.0	4.4	3.6	0.0	6.0	6.5	0.0	0.0	0.0	0.0	0.0	26.5	2단계
2005	0.0	0.0	6.0	5.8	5.6	0.4	7.0	6.5	0.0	0.0	0.0	0.0	0.0	31.3	3단계
2006	0.0	0.0	6.5	7.0	3.9	0.7	7.0	6.0	0.0	0.0	0.0	0.0	0.0	31.0	3단계
2007	0.0	0.0	8.3	8.5	5.1	1.4	7.0	7.5	0.0	0.0	0.0	0.0	0.0	37.9	3단계
2008	0.0	0.0	8.3	7.2	2.6	2.4	7.0	3.5	0.0	0.0	0.0	0.0	0.0	31.1	3단계
2009	0.0	0.0	8.7	7.4	1.3	2.7	6.5	3.5	0.0	0.0	0.0	0.0	0.0	30.1	2단계
2010	0.0	0.0	7.7	7.1	1.2	2.9	6.0	3.5	0.0	0.0	0.0	0.0	0.0	28.3	2단계
2011	0.0	0.0	7.7	4.8	0.5	3.1	6.0	3.0	0.0	0.0	0.0	0.0	0.0	25.0	2단계
2012	0.0	0.0	6.6	5.0	0.9	3.3	6.0	3.0	0.0	0.0	0.0	0.0	0.0	24.7	2단계
2013	0.0	0.0	7.2	3.0	1.3	1.9	4.1	4.5	0.0	0.0	0.0	0.0	0.0	22.0	2단계
2014	0.0	0.0	7.5	5.3	0.6	3.4	6.0	3.5	0.0	0.0	0.0	0.0	0.0	26.2	2단계
2015	0.0	0.0	6.8	6.8	0.4	3.4	6.0	3.5	0.0	0.0	0.0	0.0	0.0	26.9	2단계
2016	0.0	0.0	6.8	1.1	0.2	0.4	0.7	3.0	0.0	0.0	0.0	0.0	0.0	12.1	1단계
2017	0.0	0.0	7.6	0.0	0.2	0.0	0.0	3.0	0.0	0.0	0.0	0.0	0.0	10.8	1단계

〈그림 2-2〉 경제영역 구조통합지수 연도별 추이



[참조 1] 북한소득 자료를 구매력 평가지수(Purchasing Power Parity: PPP) 기준으로 할 경우 경제통합지수 산정

- 북한의 국민소득 자료를 김병연·김석진·이근(2007)과 김병연(2008)⁸⁾이 추정한 구매력평가지수(Purchasing Power Parity: PPP) 국민소득(GDP) 통계를 사용할 경우 경제통합지수는 다음과 같이 산정된다.
- 구매력평가 소득자료를 기준으로 지수를 산정할 경우 '투자부문'과 '소득수령 부문'에서 UN명목소득 기준으로 산정한 지수와 차이를 나타내게 된다.
- 우선 2017년 투자부문에서는 2016년과 동일한 0.1점을 부여한다.⁹⁾

8) Byung-Yeon Kim, Suk Jin Kim and Keun Lee, "Assessing the economic performance of North Korea, 1954-1989: Estimates and growth accounting analysis", Journal of Comparative Economics, vol. 35 (2007), pp. 564~582 ; 김병연, "북한의 국민소득: 추정치와 평가", 『수은해외경제』, 2008 가을호, pp. 19~42.

9) 소수점 둘째자리까지 표시할 경우 0.14점에서 0.11점으로 0.03점 감소.

〈표 2-12〉 투자부문 상대점수 (구매력 평가소득 기준)

(단위: 백만 달러, %)

연도	정부투자(남북협력기금) ^{a)}		민간 투자액 ^{b)}	남한 전체 투자액 (A)	북한의 국민소득 ^{c)} (B)	남한투자 비중 C=(A/B)*100	상대점수 D=(C*14)/5.87
	경제협력분야기반조성(경상지출)	남북교류협력지원(용자)					
1989					45,160	0.00	0.0
1990					41,979	0.00	0.0
1991					40,437	0.00	0.0
1992					36,293	0.00	0.0
1993					34,198	0.00	0.0
1994					34,272	0.00	0.0
1995					31,065	0.00	0.0
1996	4.9		5.0	9.9	30,206	0.03	0.1
1997			1.0	1.0	26,826	0.00	0.0
1998			1.0	1.0	27,801	0.00	0.0
1999			125.0	125.0	30,407	0.41	1.4
2000	14.6		22.0	36.6	28,539	0.13	0.4
2001	89.9	46.0	28.0	163.9	30,442	0.54	1.8
2002	36.8	35.7	12.0	84.5	30,757	0.27	0.9
2003	76.3	54.7	8.0	139.0	31,643	0.44	1.5
2004	76.0	81.4	12.0	169.4	32,020	0.53	1.8
2005	204.5	56.8	45.0	306.3	33,567	0.91	3.1
2006	152.1	71.0		223.1	33,718	0.66	2.3
2007	172.5	140.0		312.5	32,294	0.97	3.3
2008	110.0	36.6		146.6	33,295 ^{d)}	0.44	1.5
2009	41.5	24.0		65.5	32,995	0.20	0.7
2010	17.7	45.2		62.9	32,830	0.19	0.7
2011	12.4	13.0		25.4	33,093	0.08	0.3
2012	23.8	22.1		45.9	33,523	0.14	0.5
2013	11.5	74.6		86.1	33,892	0.25	0.9
2014	20	22.3		42.3	34,231	0.12	0.4
2015	20.6	3.6		24.2	33,854	0.07	0.2

연도	정부투자(남북협력기금) ^a		민간 투자액 ^b	남한 전체 투자액 (A)	북한의 국민소득 ^c (B)	남한투자 비중 C=(A/B)*100	상대점수 D=(C*14)/5.87
	경제협력분야기반조성(경상지출)	남북교류협력지원(용자)					
2016	11.5	3.2		14.7	35,175	0.04	0.1
2017	8.64	2.66		11.3	33,944	0.03	0.1

a. 통일부, 『남북협력기금 통계』, 각년호 (1,000원 = 1달러 적용).
b. 김영훈, 2006, "남북경협 현황과 평가", 『금융경제연구』, 제281호.
c. Byung-Yeon Kim, Suk Jin Kim and Keun Lee(2007).
d. 2008년 이후의 북한국민소득은 전년도 통계에 매년 한국은행에서 산출한 북한 경제 성장률을 곱하여 구함.

○ 소득수준 수렴부문에서는 구매력평가 자료에서도 북한소득이 남한소득의 대비 10% 미만으로 상대점수는 0점을 부여한다.

〈표 2-13〉 소득수준 수렴부문 상대점수(구매력평가 소득 기준)

(단위: 달러, %)

	북한 ^a	남한 ^b	비율	상대점수
1990	2,076	8,260	25.1%	3.5
1991	1,973	9,330	21.1%	2.6
1992	1,745	10,020	17.4%	2.0
1993	1,619	10,850	14.9%	1.3
1994	1,605	11,970	13.4%	1.1
1995	1,442	13,240	10.9%	0.4
1996	1,393	14,370	9.7%	0.0
1997	1,230	15,300	8.0%	0.0
1998	1,267	14,410	8.8%	0.0
1999	1,377	16,200	8.5%	0.0
2000	1,287	17,950	7.2%	0.0
2001	1,368	19,050	7.2%	0.0
2002	1,375	20,690	6.6%	0.0
2003	1,405	21,290	6.6%	0.0
2004	1,410	22,900	6.2%	0.0

	북한 ^a	남한 ^b	비율	상대점수
2005	1,464	24,010	6.1%	0.0
2006	1,461	25,730	5.7%	0.0
2007	1,392	27,740	5.0%	0.0
2008	1,430	28,650	5.0%	0.0
2009	1,410	28,250	5.0%	0.0
2010	1,395	30,410	4.6%	0.0
2011	1,399	31,410	4.5%	0.0
2012	1,411	32,430	4.4%	0.0
2013	1,420	32,850	4.3%	0.0
2014	1,427	33,690	4.2%	0.0
2015	1,404	35,300	4.0%	0.0
2016	1,453	36,730	4.0%	0.0
2017	1,395	38,340	3.6%	0.0

a. Byung-Yeon Kim, Suk Jin Kim and Keun Lee(2007) ; Byung-Yeon Kim(2008).
b. World bank, "GNI per capita, PPP (current international \$)", <https://data.worldbank.org/indicator/NY.GNP.PCAP.PP.CD, 검색일 2018.10.05>.
c. 2008년 이후 북한의 소득은 전년도 소득에 매년 한국은행에서 산출한 북한 경제 성장률을 곱하여 구함.

■ 구매력평가 소득을 기준으로 한 2017년 경제영역 구조통합지수는 전년 대비 1.4점 하락한 10.7점을 기록하였고, 이는 통합단계로 1단계에 해당 하는 수치이다.

〈표 2-14〉 경제영역 구조통합지수 종합(구매력평가 소득기준)

연도	제도통합 (90)			관계통합 (160)										합계 (250)	통합 단계
	공동 제도와 정책 (30)	동일 화폐 사용 (30)	법제의 시장 경제화 (30)	교역 (20)	투자 (20)	노동 (20)	무역 자유화 (20)	제도 장치 (20)	소득 수렴 (20)	이자율 수렴 (10)	인플레이션 수렴 (10)	경기 변동 동조화 (10)	자본 시장 통합 정도 (10)		
1989	0.0	0.0	1.0	0.1	0.0	0.0	5.0	0.0	1.7	0.0	0.0	0.0	0.0	7.8	0단계
1990	0.0	0.0	1.0	0.1	0.0	0.0	5.0	0.0	1.1	0.0	0.0	0.0	0.0	7.2	0단계
1991	0.0	0.0	1.0	0.9	0.0	0.0	5.0	0.0	0.4	0.0	0.0	0.0	0.0	7.3	0단계
1992	0.0	0.0	2.0	1.4	0.0	0.0	5.0	0.0	0.0	0.0	0.0	0.0	0.0	8.4	0단계

연도	제도통합 (90)			관계통합 (160)									합계 (250)	통합 단계	
	공동 제도와 정책 (30)	동일 화폐 사용 (30)	법제의 시장 경제화 (30)	교역 (20)	투자 (20)	노동 (20)	무역 자유화 (20)	제도 장치 (20)	소득 수렴 (20)	이자율 수렴 (10)	인플레이션 수렴 (10)	경기 변동 동조화 (10)			자본 시장 통합 정도 (10)
1993	0.0	0.0	2.0	1.5	0.0	0.0	5.0	0.0	0.0	0.0	0.0	0.0	0.0	8.5	0단계
1994	0.0	0.0	2.0	1.9	0.0	0.0	5.0	0.0	0.0	0.0	0.0	0.0	0.0	8.9	0단계
1995	0.0	0.0	2.0	2.8	0.0	0.0	5.0	0.0	0.0	0.0	0.0	0.0	0.0	9.8	0단계
1996	0.0	0.0	2.0	2.5	0.2	0.0	5.0	0.0	0.0	0.0	0.0	0.0	0.0	9.8	0단계
1997	0.0	0.0	2.0	2.8	0.0	0.0	5.0	0.0	0.0	0.0	0.0	0.0	0.0	9.8	0단계
1998	0.0	0.0	5.0	3.0	0.0	0.0	5.0	0.0	0.0	0.0	0.0	0.0	0.0	13.0	1단계
1999	0.0	0.0	5.0	4.1	1.4	0.0	5.0	0.0	0.0	0.0	0.0	0.0	0.0	15.5	1단계
2000	0.0	0.0	5.0	4.0	0.4	0.0	5.0	5.5	0.0	0.0	0.0	0.0	0.0	19.9	1단계
2001	0.0	0.0	5.0	3.4	1.8	0.0	5.0	3.5	0.0	0.0	0.0	0.0	0.0	18.7	1단계
2002	0.0	0.0	5.5	5.0	0.9	0.0	5.0	6.5	0.0	0.0	0.0	0.0	0.0	22.9	2단계
2003	0.0	0.0	5.5	5.2	1.5	0.0	5.0	7.0	0.0	0.0	0.0	0.0	0.0	24.2	2단계
2004	0.0	0.0	6.0	4.4	1.8	0.0	6.0	6.5	0.0	0.0	0.0	0.0	0.0	24.7	2단계
2005	0.0	0.0	6.0	5.8	3.1	0.5	7.0	6.5	0.0	0.0	0.0	0.0	0.0	28.9	2단계
2006	0.0	0.0	6.5	7.0	2.3	0.7	7.0	6.0	0.0	0.0	0.0	0.0	0.0	29.4	2단계
2007	0.0	0.0	8.3	8.5	3.3	1.4	7.0	7.5	0.0	0.0	0.0	0.0	0.0	36.0	3단계
2008	0.0	0.0	8.3	7.2	1.5	2.4	7.0	3.5	0.0	0.0	0.0	0.0	0.0	30.0	2단계
2009	0.0	0.0	8.7	7.4	0.6	2.7	6.5	3.5	0.0	0.0	0.0	0.0	0.0	29.4	2단계
2010	0.0	0.0	7.7	7.1	0.6	2.9	6.0	3.5	0.0	0.0	0.0	0.0	0.0	27.8	2단계
2011	0.0	0.0	7.7	4.8	0.3	3.1	6.0	3.0	0.0	0.0	0.0	0.0	0.0	24.9	2단계
2012	0.0	0.0	6.6	5.0	0.5	3.3	6.0	3.0	0.0	0.0	0.0	0.0	0.0	24.5	2단계
2013	0.0	0.0	7.2	3.0	0.9	1.9	4.1	4.5	0.0	0.0	0.0	0.0	0.0	21.6	2단계
2014	0.0	0.0	7.5	5.3	0.4	3.4	6.0	3.5	0.0	0.0	0.0	0.0	0.0	26.1	2단계
2015	0.0	0.0	6.8	6.8	0.2	3.4	6.0	3.5	0.0	0.0	0.0	0.0	0.0	26.8	2단계
2016	0.0	0.0	6.8	1.1	0.1	0.4	0.7	3.0	0.0	0.0	0.0	0.0	0.0	12.1	1단계
2017	0.0	0.0	7.6	0.0	0.1	0.0	0.0	3.0	0.0	0.0	0.0	0.0	0.0	10.7	1단계

2. 정치

가. 지수구성

- 정치영역의 구조통합지수를 구성하는 변인과 배점은 아래와 같다.

〈표 2-15〉 정치영역 변인들의 분류와 배점

영역	변인	배점
제도적 통합	· 정치·군사의 공동집행기구	30
	· 정치제도의 단일화	30
	· 정치분야 남북 법제화	30
소계		90
관계적 통합	· 실무정치회담	20
	· 고위급 정치회담	20
	· 군사회담	20
	· 의회회담	20
	· 대화·회담의 정례화	10
	· 매개제도의 구성과 활성화	20
	· 정치분야 공동행사	10
	· 국제사회에서 외교군사적 협력	10
	· 군비축소	10
	· 군사적 긴장완화 및 신뢰구축	10
· 상대체제인정 행위	10	
소계		160
합계		250

- 이상의 변인들에 부여된 점수를 가산하여 정치통합의 단계를 다음과 같이 11단계로 구분한다.
 - 0단계 (정치적 대화·회담 등 교류가 없거나 있더라도 미미한 수준): 10점 이하
 - 1단계 (대화·회담 등 교류가 있으나 빈도 및 비중이 낮음): 11-20점
 - 2단계 (대화·회담 등 교류의 빈도·비중이 높음): 21-40
 - 3단계 (대화·회담 등 교류의 비중이 높으며, 교류의 의제가 포괄적): 41-60

- 4단계 (3단계+매개제도의 구성과 활동): 61-80
- 5단계 (4단계+매개제도의 정례화·제도화 진행): 81-100
- 6단계 (5단계+매개제도의 역할 최대화): 101-130
- 7단계 (6단계+남북공동집행기구 구성과 활동): 131-160
- 8단계 (7단계+대부분의 정치활동을 공동집행기구 및 제도에 위임): 161-190
- 9단계 (8단계+모든 정치활동을 공동집행기구 및 제도에 위임): 191-220
- 10단계 (9단계+실질적인 정치통합): 221-250

■ 남북통합 수준을 단계로 구분하면, 남북 접촉·교류기(0~2단계), 남북 협력도약기(3~5단계), 남북연합기(6~8단계), 통일 완성기(9~10단계)로 구분된다. 남북통합은 3단계, 6단계, 9단계에서 질적으로 도약(take-off)한다. 마지막의 실질적인 통일 시기는 남북 간 정치분야에서 민주화·제도화·단일화 등이 실질적으로 완전하게 실현되는 단계를 의미한다.

나. 제도통합지수

- 정치통합은 구조통합과 의식통합으로 구분하며, 구조통합은 다시 제도통합과 관계통합의 두 차원으로 구성한다.
- 먼저 제도적 측면의 정치통합, 즉 제도통합은 남북의 정치행위를 규제·규정하는 공동의 집행기구가 구성되어 있는가, 그리고 그 공동기구가 실질적인 통치기능을 발휘하는가 하는 측면에 초점을 맞춘다. 또 남북한의 정치제도가 상호 동질화되어 있는가 하는 부분도 제도통합의 중요한 변인으로 설정한다. 정치제도의 동질화는 현실적으로 북한의 정치제도가 다원주의 정치체제로 변화하는 방향으로 남북의 정치제도가 동질화될 것

으로 예상하여 구체적으로는 북한 정치제도의 민주화 정도를 측정변인으로 설정한다. 따라서 제도적 통합은 남북한간 공동집행기구(정치·군사)의 구성과 활성화, 남북 정치제도의 단일화, 정치 분야의 남북 공동법제화 등의 변인을 포함한다.

〈표 2-16〉 정치영역 제도적 통합의 지표와 배점

통합영역	지표	세부지표	배점
제도적 통합 (총 90점)	남북공동집행기구	남북정치공동기구	15
		남북군사공동기구	15
	남북정치제도의 단일화	북한 유일지도체계의 변화 북한의 복수후보 선거 북한 정당결성의 자유	10 10 10
남북한 공동법제화	남북한 공동법제화	북한 정치법제의 실효성	15
		남북한 공동법제화 수준	15

1) 남북공동정치기구의 구성과 활성화

- 정치와 군사 영역에서 각 15점씩 배정하고, 점수부여 방식은 기구구성 논의 5점, 기구구성 추진 5점, 기구의 활성화 5점으로 배정하며 각각의 요소에 대해 진전 정도와 수준에 따라 1~5점을 차별적으로 부여한다.
- 2017년 정치영역이나 군사영역에서 남북한 간에 공동집행기구의 구성이나 활동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2016년과 마찬가지로 0점이다.

2) 남북한 정치제도의 단일화

- 남북한 정치제도의 단일화 변인은 수령과 당의 유일지도체계가 변화하는가(10점), 복수후보에 의한 선거가 이루어지는가(10점), 자유로운 정당결

성의 자유가 존재하는가(10점) 등을 기준으로 30점을 배정하고, 각각의 논의가 진행되는 정도, 즉 당이나 정치권에서 논의 및 토론 시작(2.5점), 부분적인 변화 발생(2.5점), 광범위한 변화 발생(2.5점), 법제화 (2.5점)의 진전에 따라 점수를 부여한다.

- 2017년의 북한의 정치제도는 2016년과 비교할 때 별다른 변화는 없다. 병진노선의 추진과 함께 '유일영도체계'를 엄격하게 집행하는 북한의 정치관행이 지속되고 있어, 2017년 정치제도의 변화는 작년과 동일한 0.5점이다.

3) 남북한 공동법제화

- 남북한 정치 관련 공동법제화는 크게 법제화의 수준(15점)과 법제의 실효성(15점)으로 구분된다. 정치분야 공동 법제화 수준은 다시 북한의 법제화 수준(5점), 남북한 간 법제의 수렴도(5점), 남북한 공동법제의 구속력 수준(5점) 등 세 항목으로 구성하며, 이를 측정하기 위해 2018년 5월~8월 10명의 북한법 전문가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전문가 조사를 실시한 결과, 2017년 정치분야 남북한 법제화 수준은 15점 만점 중 5.8점이다.

〈표 2-17〉 북한 정치관련 법제화 정도

세부 지표	평균점수 (항목별 10점 만점)	상대점수 (항목별 5점 만점)	법제화 수준 (합계/15점 만점)
정치분야 북한의 법제화 수준	5.3	2.7	5.8/15
정치분야 남북간 법제의 수렴도	3.1	1.6	
정치분야 남북 공동법제의 구속력	3.2	1.6	

- 법제의 실효성은 북한헌법에 명시된 정치적 민주화 관련 기본법 조항들이 실제로 현실사회에서 어느 정도 보장되는가의 여부로 판단한다. 측정 지표와 배점은 아래와 같다. 문헌조사와 북한이탈주민(탈북자) 면접조사를 실시한 결과 15점 만점 중 피선거권이나 정치적 자유에서는 여전히 억압적인 반면, 구속과 체포의 법적 보장 측면에서는 형법과 관련법이 개정되어 2004년부터 조금 나아진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2016년과 비교할 때 특별히 나아진 것으로 없으므로 2017년에도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이 부분에서는 1.0점을 부여한다.

〈표 2-18〉 북한 정치관련 법제의 실효성 정도

구분	헌법조항(98년)	실효성 점수
피선거권	17살 이상의 모든 국민은 성별, 민족별, 직업, 거주기간, 재산과 지식정도, 당별, 정견, 신앙에 관계없이 선거할 권리와 선거받을 권리를 가진다(제66조)	0/5
정치적 자유	국민은 언론, 출판, 집회, 시위와 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국가는 민주주의적 정당, 사회단체의 자유로운 활동조건을 보장한다(제67조)	0/5
구속·체포의 법적 보장	국민은 인신과 주택의 불가침, 서신의 비밀을 보장받는다. 법에 근거하지 않고는 국민을 구속하거나 체포할 수 없으며 살림집을 수색할 수 없다(79조)	1/5
합계		1/15

※ 실효성 점수는 실효성이 '전혀 없다'=0점, '거의 없다'=1점, '약간 있다'=2점, '보통 이상이다'=3점, '상당히 크다'=4점, '전면적 효력이 있다'=5점으로 구분

- 이상으로 남북한의 공동법제화 변인에 대한 점수를 종합해 보면 다음의 〈표2-19〉와 같다. 북한의 법제화 수준, 남북한 법제의 수렴도 및 공동법제의 구속력에 대해 법학자들이 평가한 점수에 북한법제의 실효성을 합한 점수를 산출한다. 2017년의 경우, 남북한 공동법제화 수준은 남북의 법제화 점수 5.8점과 북한법제의 실효성 1점을 합하여 최종 점수는 6.8점이 된다. (1989~2007년 기간의 점수 산출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남북통합지수 1989~2007」 참고, 2008년 이후는 연도별 남북통합지수 보고서 참고)

〈표 2-19〉 남북한 공동법제화 수준

	법제화 수준 (15)	북한법제 실효성 (15)	가중치 총점
1989	1.0	0	1
1990	1.0	0	1
1991	1.0	0	1
1992	2.0	0	2
1993	2.5	0	2.5
1994	2.6	0	2.6
1995	3.1	0	3.1
1996	3.2	0	3.2
1997	3.3	0	3.3
1998	3.8	0	3.8
1999	4.3	0	4.3
2000	4.4	0	4.4
2001	4.5	0	4.5
2002	4.6	0	4.6
2003	4.7	0	4.7
2004	5.0	1	6.0
2005	5.1	1	6.1
2006	5.2	1	6.2
2007	5.3	1	6.3
2008	5.3	1	6.3
2009	5.4	1	6.4
2010	4.8	1	5.8
2011	4.8	1	5.8
2012	4.5	1	5.5
2013	4.9	1	5.9
2014	4.9	1	5.9
2015	4.5	1	5.5
2016	4.8	1	5.8
2017	5.8	1	6.8

4) 제도통합지수 종합

- 정치영역의 제도통합지수는 남북공동집행기구 및 남북한 정치제도의 단일화, 남북한 공동법제화 수준의 합계로 산정된다. 2017년에는 정치분야나 군사분야의 남북공동집행기구가 존재하지 않았고 기구구성의 논의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 항목의 점수는 0점이다.
- 2017년 남북한 정치제도의 단일화 정도는 작년과 동일한 0.5점을 부여한다. 남북한 공동법제화 수준은 법제화 측면과 실효성 측면을 합한 7.3점을 부여한다. 위의 점수를 나타낸 제도통합지수는 아래 〈표 2-20〉과 같다.

〈표 2-20〉 정치영역 제도통합지수 종합

	공동집행기구 (30)	단일제도화 (30)	공동법제화 (30)	합계 (90)
1989	0	0	1.0	1.0
1990	0	0	1.0	1.0
1991	0	0	1.0	1.0
1992	0	0	2.0	2.0
1993	0	0	2.5	2.5
1994	0	0	2.6	2.6
1995	0	0	3.1	3.1
1996	0	0	3.2	3.2
1997	0	0	3.3	3.3
1998	0	0	3.8	3.8
1999	0	0	4.3	4.3
2000	0	0	4.4	4.4
2001	0	0	4.5	4.5
2002	0	0	4.6	4.6
2003	0	0	4.7	4.7
2004	0	0	6.0	6.0
2005	0	0	6.1	6.1

	공동집행기구 (30)	단일제도화 (30)	공동법제화 (30)	합계 (90)
2006	0	0	6.2	6.2
2007	0	0	6.3	6.3
2008	0	0	6.3	6.3
2009	0	0.5	6.4	6.9
2010	0	1.0	5.8	6.8
2011	0	1.0	5.8	6.8
2012	0	1.0	5.5	6.5
2013	0	0.5	5.9	6.4
2014	0	0.5	5.9	6.4
2015	0	0.5	5.5	6.0
2016	0	0.5	5.8	6.3
2017	0	0.5	6.8	7.3

다. 관계통합지수

- 정치영역의 관계통합은 남북 간의 실무정치회담, 고위급정치회담, 군사 회담, 의회회담, 정치분야 공동행사, 위원회 존재 및 합의문·공동선언 발표 등 매개제도의 구성과 활성화, 대화·회담의 정례화, 국제사회에서의 외교군사적 협력, 군비축소, 군사적 긴장완화 및 군사통합 정도, 상대 체제 인정행위 등의 변인을 포함한다.
- 각종 정치회담이 관계통합의 변인으로 많이 포함된 것은 다양한 수준에서의 정치대화와 협상, 합의 등의 활동이 남북 간 정치관계를 안정적으로 형성함으로써 공동정치기구의 구성으로까지 발전할 수 있는 유력한 행위가 되기 때문이다. 정치, 외교, 군사 분야에서 이러한 대화와 회담이 어느 정도 활성화되어 있는가 하는 측면과 그러한 대화와 회담이 위원회 구성 및 정례화 등으로 어느 정도 제도화되어 가고 있는지를 측정할 수 있는 변인을 포함한다.

1) 실무정치회담

- 2017년도에는 실무정치회담이 개최되지 않았다.

〈표 2-21〉 실무정치회담 연도별 개최 횟수 및 점수

	실무정치회담(횟수)	가중치(×0.2점)
1989	5	1.0
1990	11	2.2
1991	10	2.0
1992	77	15.4
1993	4	0.8
1994	10	2.0
1995	0	0.0
1996	0	0.0
1997	0	0.0
1998	2	0.4
1999	3	0.6
2000	13	2.6
2001	0	0.0
2002	2	0.4
2003	1	0.2
2004	0	0.0
2005	6	1.2
2006	3	0.6
2007	9	1.8
2008	0.2	0.0
2009	4	0.8
2010	0	0.0
2011	0	0.0
2012	0	0.0
2013	1	0.2
2014	1	0.2
2015	0	0.0
2016	0	0.0
2017	0	0.0

※ 자료 출처 : 남북회담 홈페이지 <http://dialogue.unikorea.go.kr>

2) 고위급 정치회담

- 2017년도에는 고위급 정치회담이 개최되지 않았다.

〈표 2-22〉 고위급 정치회담 연도별 횟수 및 점수

	정상회담	총리회담	장관급회담	차관급회담	횟수 총계	가중치 총점
가중치	×5점	×2점	×1.5점	×0.8점		
1989					0	0
1990		3			3	6
1991		2			2	4
1992		3			3	6
1993					0	0
1994					0	0
1995					0	0
1996					0	0
1997					0	0
1998					0	0
1999				2	2	1.6
2000	1		4		5	11
2001			2		2	3.0
2002			2		2	3.0
2003			4		4	6
2004			2		2	3.0
2005			3	1	4	5.3
2006			2		2	3.0
2007	1	1	2		4	10
2008	0	0	0	0	0	0
2009	0	0	0	0	0	0
2010	0	0	0	0	0	0
2011	0	0	0	0	0	0
2012	0	0	0	0	0	0
2013	0	0	0	0	0	0
2014	0	0	1	0	1	1.5

	정상회담	총리회담	장관급회담	차관급회담	횟수 총계	가중치 총점
2015	0	0	1	1	2	2.3
2016	0	0	0	0	0	0
2017	0	0	0	0	0	0

3) 군사회담

- 2017년도에는 남북 군사당국자 접촉이 추진되지 않았으며, 개최되지 않았다.

〈표 2-23〉 군사분야 회담 연도별 개최 횟수 및 점수

	국방장관회담	장성급군사회담	군사실무회담	횟수 총계	가중치 총점
가중치	×2점	×1점	×0.4점		
1989				0	0
1990				0	0
1991				0	0
1992				0	0
1993				0	0
1994				0	0
1995				0	0
1996				0	0
1997				0	0
1998				0	0
1999				0	0
2000	1		3	4	3.2
2001			2	2	0.8
2002			9	9	3.6
2003			6	6	2.4
2004		2	3	5	3.2
2005			3	3	1.2
2006		2	2	4	2.8

2007	1	3	7	11	7.8
2008	0	0	2	2	0.8
2009	0	0	0	0	0
2010	0	0	2	2	0.8
2011	0	0	1	1	0.4
2012	0	0	0	0	0
2013	0	0	0	0	0
2014	0	0	1	1	0.4
2015	0	0	0	0	0
2016	0	0	0	0	0
2017	0	0	0	0	0

※ 자료: 통일부 홈페이지 unikorea.go.kr

4) 의회회담

- 2017년 의회회담은 개최되지 않았으므로 점수는 0점이며, 정당 교류와 정치인 교류도 없었으므로 총 점수는 0점이다.

〈표 2-24〉 의회회담 연도별 개최 횟수 및 점수

	국회회담	의회교류	정당간 회담	정당교류 정치단체 교류	실무회담 실무접촉	정치인 교류	가중치 총점
가중치	×4점	×3점	×2점	×1점	×0.4점	×0.2점	
1989					2		0.8
1990					1		0.4
1991						1	0.2
1992							0
1993							0
1994							0
1995							0
1996							0
1997							0

	국회회담	의회교류	정당간 회담	정당교류 정치단체 교류	실무회담 실무접촉	정치인 교류	가중치 총점
1998							0
1999						1	0.2
2000						3	0.6
2001						2	0.4
2002						3	0.6
2003						2	0.4
2004					1	4	1.2
2005				1		2	1.4
2006			1			3	2.6
2007						9	1.8
2008	0	0	0	0	0	0	0
2009	0	0	0	0	0	1	0.2
2010	0	0	0	1	0	0	0.2
2011	0	0	0	0	0	0	0
2012	0	0	0	0	0	0	0
2013	0	0	0	0	0	0	0
2014	0	0	0	0	0	0	0
2015	0	0	0	0	0	0	0
2016	0	0	0	0	0	0	0
2017	0	0	0	0	0	0	0

〈표 2-25〉 정당교류 정치단체 교류 관련 점수

정당교류 정치단체 교류	가중치
1. 집권여당 간 교류	×1점
2. 제1야당 간 교류	×0.4점
3. 군소정당 간 교류	×0.2점

5) 정치분야 공동행사

- 2017년 정치분야 공동행사가 개최된 바 없으므로 0점이다.

〈표 2-26〉 정치분야 공동행사

	3·1절 공동행사	6·15 공동행사	8·15 공동행사	10·3 개천절 공동행사	가중치 총점
2001	-	(민간)	(민간)-평양		0
2002	-	(민간)	(민간)-서울		0
2003	(민간)- 서울	미개최	(민간)-평양		0
2004	-	(민간)-인천	조문파동 무산		0
2005	-	남측 당국대표단 (40명)-평양	북측 당국대표단 (17명) -서울		5
2006	-	북측 당국대표단 (19명), 남측 당국대표단 (13명)-광주	수해로 미개최		2.5
2007	-	남측 국회의원 10명- 평양	을지훈련 등 이유 북한불참-미개최		2.5
2008	-	-	-	-	0
2009	-	-	-	-	0
2010	-	남측 공동행사 불허 각기 공동행사	-	-	0
2011	-	-	-	-	0
2012	-	-	-	-	0
2013	-	-	-	-	0
2014	-	-	-	-	0
2015	-	-	-	-	0
2016	-	-	-	-	0
2017	-	-	-	-	0

※ 자료 : 김치관, 「6.15 공동선언 이후 남북공동행사에 관한 연구」 경남대 북한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7; 통일부, 「통일백서」 2006, 2007, 2008; 2009년-2017년 공동행사 참여여부는 통일부 홈페이지 (<http://www.unikorea.go.kr>) 보도자료와 신문기사 참조.

6) 매개제도의 구성과 활성화

- 매개제도의 구성과 활성화는 위원회, 회담체 등 매개제도의 존재(10점), 매개제도의 활동 결과로 나타난 합의서 및 공동보도문의 횟수(10점)로 평가한다. 우선, 남북 정치교류를 촉진하기 위해 구성할 수 있는 매개제도는 정치, 군사, 외교(핵통제)의 세 영역에 대한 위원회나 회담체의 존재를 의미한다. 정치공동위원회, 군사공동위원회, 외교공동위원회의 형태로 매개기구가 존재할 수 있고, 혹은 장관급회담, 장성급회담 등의 회담체 형태로 존재할 수도 있다.
- 따라서 매개제도의 영역을 정치회담, 군사회담, 외교회담의 3영역으로 구분하고 각 영역에서 회담기구(위원회 또는 회담체)의 존재 유무로 점수를 부여한다. 매개기구의 배점은 정치, 군사, 외교의 영역에서 각각 3점씩 부여하여 총 9점을 주고, 나머지 1점을 매개기구의 존재가 안정적으로 제도화되어 있다고 판단되면 추가로 1점을 부여하는 방식을 취한다.
- 2017년도는 매개제도 영역의 평가는 정치, 군사, 외교 모두에서 구성 및 활동이 없었기 때문에 0점이다.

〈표 2-27〉 매개제도의 구성과 활동 부문 점수

	공동위원회	합의서	공동보도문	가중치 총점
가중치	×3점	×0.5점	×0.3점	
1989	0	0	0	0
1990	0	1	0	0.5
1991	0	1	2	1.1
1992	3	10	1	14.3
1993	0	0	0	0

	공동위원회	합의서	공동보도문	가중치 총점
1994	0	2	0	1
1995	0	1	0	0.5
1996	0	0	0	0
1997	0	0	0	0
1998	0	0	0	0
1999	0	1	0	0.5
2000	2	7	5	11
2001	2	0	1	6.3
2002	2	0	4	7.2
2003	2	0	4	7.2
2004	2	1	2	7.1
2005	2	2	4	8.2
2006	2	1	1	6.8
2007	2	5	3	9.4
2008	1	0	0	3
2009	0	0	1	0.3
2010	0	0	0	0
2011	0	0	0	0
2012	0	0	0	0
2013	0	0	0	0
2014	0	0	1	0.3
2015	0	0	2	0.6
2016	0	0	0	0
2017	0	0	0	0

7) 대화·회담의 정례화

- 2017년에는 정치분야 회담이 개최되지 않았다. 이에 대화·회담의 정례화 부문에 대한 평가점수는 0점이다.

〈표 2-28〉 대화·회담의 정례화 수준 평가 방법 (2010년 수정)

점수	정례화 수준	설명
0점	전혀 되어있지 않음	회담이 정기적으로 개최되지 않으며 다음 회담 일정도 잡혀 있지 않음. 빠른 시일 내에 혹은 몇 개월 안에 접촉을 재개하기로 하는 방식
2.5점	약간 정례화	정기적 회담 개최가 문서로 약속되어 있으나 실행되지는 않으며 다음 회담 일정을 문서화하는 방식으로 진행
5점	중간정도(보통) 정례화	회담이 정기적으로 개최되는 편이며 다음 회담 일정이 문서화되어 있음
7.5점	상당한 수준으로 정례화	정기적 개최 방식으로 회담이 진행되는 비중이 높음
10점	완벽한 수준으로 정례화	정례화된 회담 개최 방식이 안정적으로 진행됨

※ 2010년부터 이 변인에 대한 배점을 20점에서 10점으로 줄였음.

〈표 2-29〉 대화·회담의 정례화 부문 점수

정례화 수준 (10)		정례화 수준 (10)	
1989	0	2004	2.5
1990	2.5	2005	2.5
1991	2.5	2006	2.5
1992	2.5	2007	2.5
1993	0	2008	0
1994	0	2009	0
1995	0	2010	0
1996	0	2011	0
1997	0	2012	0
1998	0	2013	0
1999	0	2014	0
2000	2.5	2015	0
2001	2.5	2016	0
2002	2.5	2017	0
2003	5		

8) 국제사회에서의 외교군사적 협력

- 국제사회에서 남북 외교군사적 협력은 4자회담이나 6자회담,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제네바군축회의(CD) 등의 국제적 외교·군사회담에 남북이 함께 참여한 경우, 그리고 유엔이나 국제기구의 회의에서 남북한이 상대방을 지지하는 발언이나 선거지원 등을 포함한다. 외교군사 분야의 협력은 1회당 1점을 부과하고 비군사외교 분야에서 남북의 국제협력은 0.5점으로 처리하며 총 10점을 만점으로 한다.
- 2017년 국제사회에서의 남북한의 외교군사적 협력 횟수가 없었다. 이에 국제사회에서 외교군사적 협력 점수는 0점이다.

〈표 2-30〉 국제사회에서 외교군사적 협력 횟수 및 점수

	4자회담	6자회담	ARF	CD	기타	가중치 총점
가중치	×0.5점	×0.5점	×0.5점	×0.5점	×0.2점	
1989						0
1990						0
1991					2	0.4
1992					2	0.4
1993					3	0.6
1994					1	0.2
1995						0
1996				1	1	0.7
1997	7				1	3.7
1998	4				1	2.2
1999	5					2.5
2000			1		1	0.7
2001			1			0.5
2002			1			0.5
2003		1	1			1.0
2004		4	1			2.5
2005		3	1		2	2.4

	4자회담	6자회담	ARF	CD	기타	가중치 총점
2006		1	1			1.0
2007		4	1		2	2.9
2008		2	1		0	1.5
2009			0			0
2010			0			0
2011			2		1	1.2
2012			0			0
2013	0	0	0	0	0	0
2014	0	0	0	0	0	0
2015	0	0	0	0	0	0
2016	0	0	0	0	0	0
2017	0	0	0	0	0	0

※ 자료 : 『1999년 국방백서』, 245~246쪽; 『2003참여정부국장정책』, 165~170쪽;

※ 자료 : 『2004 국방백서』, 46~47쪽.

9) 군축

- 군축변인은 남북한 병력 수 190만 명 이상을 0점으로 하고 40만 명을 10점으로 하여 병력감축 수에 따라 비례로 점수를 부여한다. 공식적으로 공개된 2017년 남북한 통합병력 수는 187.9만여 명으로 2016년과 비교했을 때, 약 2.6만여 명 감소하였다. 따라서 2017년 병력감축 수준은 0.1점으로 계산된다.

〈표 2-31〉 남북한의 연도별 병력 수 및 병력감축 수준 부문 점수

	남한 병력	북한 병력	병력 합계 (a)	190만명-a (b)	b÷15만
1989	65만명	98만명	163만명	27.0	1.8
1990	65.5만명	99만명	164.5만명	25.5	1.7
1991	65.5만명	99.5만명	165만명	25.0	1.7
1992	65.5만명	101만명	166.5만명	23.5	1.6
1993	65.5만명	103만명	168.5만명	21.5	1.4
1994	65.5천명	104만명	169만명	21.0	1.4

	남한 병력	북한 병력	병력 합계 (a)	190만명-a (b)	b÷15만
1995	65.5천명	104만명	169만명	21.0	1.4
1996	69만명	105.5만명	174.5만명	15.5	1.0
1997	69만명	114.7만명	183.7만명	6.3	0.4
1998	69만명	116만명	185만명	5.0	0.3
1999	69만여명	117만여명	186만여명	4.0	0.3
2000	69만여명	117만여명	186만여명	4.0	0.3
2001	69만여명*	117만여명*	186만여명	4.0	0.3
2002	69.1만여명	117만여명	186.1만여명	3.9	0.3
2003	69.1만여명*	117만여명*	186.1만여명	3.9	0.3
2004	68.1만여명	117만여명	185.1만여명	4.9	0.3
2005	68.1만여명*	117만여명*	185.1만여명	4.9	0.3
2006	67.4만여명	117만여명	184.4만여명	5.6	0.4
2007	67.4만여명*	117만여명*	184.4만여명	5.6	0.4
2008	65.5만여명	119만여명	184.5만여명	5.5	0.4
2009	65만여명*	122만여명	187만여명	3.0	0.2
2010	65만여명	119만여명	184만여명	6.0	0.4
2011	65만여명	119만여명	184만여명	6.0	0.4
2012	63.9만여명	119만여명	182.9만여명	7.1	0.5
2013	63.3만명	119만여명	182.3만여명	7.7	0.5
2014	63만여명	120만여명	183만여명	7.0	0.5
2015	63만여명	120만여명	183만여명	7.0	0.5
2016	62.5만여명	128만여명	190.5만여명	- .05	0.0
2017	59.9만여명	128만여명	187.9만여명	2.1	0.1

※ 자료 : 2012년 국방백서; 2011년 국방백서 미발간, 국방부 기본정책과에서 구두로 자료 제공; 2010년 국방백서 부록 참고; 현재 국방백서 미발간(10월 발간 예정)→국방부 기본정책과 (02-748-6231)에서 구두로 자료 제공; 1996년 남한의 병력 3만 5천 증가는 방위병 제도 폐지에 따른 방위병 현역화로 인한 것임.¹⁰⁾; 『국방백서』, 1988~2000년 각 연도, 2004, 2006년도; 2001~2003년은 국방백서 발간 중단으로 국방정책 소개책자; 2008년 자료 출처: 2008국방백서 부록 참고 (2008년 12월 기준)

※ 2013년 자료 출처:

1. 남한 병력-『국방개혁 기본계획 14~30』 13쪽, 2014년 발행. '국방부 홈페이지-정보공개-간행물-정책자료집'에서 열람. 국방부 홈페이지 안에서 2013년 말 병력이 '63.3만명'으로 표기된 e-book 『국방개혁 기본계획 14~30』을 찾아서 위 표에 반영하였음.
2. 북한 병력-『북한이해 2013』 108쪽, 통일교육원 교육개발과. 이 자료는 사실 <2012 국방백서>의 자료를 그대로 가져온 것.

※ 2014년 자료 출처: 2014년 국방백서, 239쪽, 2014년 12월 발간.

※ 2015년 자료 출처: 북한이해 2016, 145쪽, 2016년

※ 2016년 자료 출처: 2016년 국방백서, <남북 군사력 현황>, 236쪽, 2016년 12월 발간.

※ 2017년 자료 출처: 2018 국방백서, <남북 군사력 현황>, 244쪽, 2019년

10) 군사적 긴장완화와 신뢰구축

- 군사적 긴장완화와 신뢰구축 점수는 상호 군사적 대결 혹은 긴장고조를 기준으로 한 평가로 2010년에 새로 만들어진 항목이다. 신설한 군사적 긴장완화 관련부문 점수는 다음 <표 2-33>와 같이 배점을 정한다.
- 군사적 긴장완화와 신뢰구축 점수는 군사적 긴장 및 상호 대치가 없는 상태에 기본점수 5점을 부여하고 긴장의 고조에 따라 점수를 낮추고 상호 통합의 정도가 증가하는 데 따라 점수를 높이는 방식으로 계산된다. 전면전에 돌입한 상태를 최저점인 0점으로 계산하고 군사적 대결과 불신이 해소된 상호통합도가 완벽한 상태를 최고점인 10점으로 기록한다. 이 항목은 시간의 추이에 따라 긴장완화 혹은 긴장고조로 상호통합의 정도가 순행 또는 역행할 수 있는 현실을 반영할 수 있다. 1989년부터 2010년까지 이 부문의 점수가 추가되었으며 신설 항목을 위해 정례화 점수를 10점으로 축소하고 새롭게 10점을 확보하였다. 또한 점수가 새롭게 변화되면서 정치분야의 관계적 통합지수 역시 총점이 변화되었다.
- 군사적 긴장완화 및 신뢰구축 항목을 새롭게 개발한 것은 상대체제 인정 행위를 전적으로 법률에 근거하여 평가해오던 기존의 평가가 현실과 괴리가 있던 점을 보완하기 위한 것이다. 실제로 신설된 항목을 통해 2008년부터 상대체제에 대한 불인정을 바탕으로 군사적 충돌의 수준이 증가한 현상을 평가에 반영할 수 있다. 예를 들어, 2017년에는 북한의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 미국과의 호전적인 외교 갈등 등 유례없이 한반도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었다는 점에서 군사적 긴장완화 점수는 1점으로 계산한다.

10) 국방부, 『1996~1997년 국방백서』 (서울: 국방부, 1996), 64쪽.

〈표 2-32〉 군사적 긴장완화 및 신뢰구축의 배점 (2010년 신설)

점수	내용
10점	군사적 협력이 완벽히 이루어진 상태임
9.5점	군사적 협력이 거의 이루어진 상태임
9점	군사적 대처 상태가 현저히 완화되고 군사적 협력이 추진되어 중요한 성과를 보이고 있는 상태임
8.5점	군사적 대처 상태가 완화되고 군사적 협력이 추진되어 일부 성과를 보이고 있는 상태임
8점	군사적 대처 상태의 완화를 위한 제도화가 추진되어 현저한 성과를 보이고 있으며 군사적 협력이 시도되는 상태임
7.5점	군사적 대처 상태의 완화를 위한 제도화가 추진되어 중요한 성과를 보이고 있는 상태임
7점	군사적 대처 상태의 완화를 위한 제도화가 추진되어 일부 성과를 보이고 있는 상태임
6.5점	군사적 대처 상태의 완화를 위한 제도화가 보다 집중적으로 시도되는 상태임
6점	군사적 대처 상태의 완화를 위한 제도화가 시도되는 초기 상태임
5.5점	군사적 대처 상황은 지속되나 상대방에 대한 의도적 긴장 유발 행위는 전혀 일어나고 있지 않은 상태임
5점	군사적 대처 상황은 지속되나 상대방에 대한 의도적 긴장 유발 행위는 거의 일어나고 있지 않은 상태임
4.5점	라디오, 신문, 화성기 방송, 전단 살포 등을 통한 상대방에 대한 심리전을 전개하는 긴장 상태임
4점	공식 성명, 기자회견 등을 통한 상호 구두위협을 통한 긴장 조성의 상태임
3.5점	선박 나포, 억류 등과 같은 사건을 통해 보다 직접적인 일방적 행위가 일어나는 긴장 상태임
3점	전방에서의 전투부대 재배치 등 군사 이동 및 동원이 일어나고 상호 경계선에 대한 침범과 핵공격 위협이 벌어지는 긴장 상태임
2.5점	상대방 영토에 대한 총격 및 포격이 일어나는 긴장 상태임
2점	일방적 사격 및 포격이 아닌 공격 및 대응에 의한 교전이 벌어지는 긴장 상태로, 사상자가 0~10명에 이르는 경우임. 미사일 발사 등 긴장 조성 행위를 포함
1.5점	일방적 사격 및 포격이 아닌 공격 및 대응에 의한 교전이 벌어지는 긴장 상태로, 사상자가 10~50명에 이르는 경우임
1점	일방적 사격 및 포격이 아닌 공격 및 대응에 의한 교전이 벌어지는 긴장 상태로, 사상자가 50명 이상에 이르는 경우임. 핵실험 등 긴장 조성 행위를 포함
0.5점	생화학무기의 제한적인 사용, 전쟁 선언, 영토의 일부 점령 등이 일어나며 기간 내 (지속적인) 국지적 충돌 및 전투가 벌어지는 상태임
0점	군사적 긴장과 대처에서 전면적인 전쟁 국면에 돌입한 상태임

〈표 2-33〉 군사적 긴장완화 및 신뢰구축 부문 점수

연도	군사적 긴장완화 및 신뢰구축(10점)
1989	4
1990	4
1991	4
1992	2
1993	3
1994	3
1995	3.5
1996	1
1997	2.5
1998	3.5
1999	1.5
2000	4
2001	4
2002	2
2003	4
2004	4.5
2005	5
2006	4
2007	4.5
2008	2
2009	1.5
2010	1
2011	2.5
2012	2.5
2013	1
2014	2
2015	2
2016	1
2017	1

※ 자료: 군사적 긴장완화 및 신뢰구축 점수의 근거에 대해서는 연도별 남북통합지수 보고서 참고. 연도별 군사적 긴장완화 및 신뢰구축의 내용에 대해서는 통일부, 남북관계 주요일지, 통일연구원, 남북관계 연표 참고.

■ 2017년도에도 작년과 마찬가지로 기존의 남북 간 정치, 군사적 대립이 지속되었으며 아래의 정황을 고려한 군사적 긴장완화 및 신뢰구축 부문 점수는 1점이다.

■ 1.0점은 “일방적 사격 및 포격이 아닌 공격 및 대응에 의한 교전이 벌어지는 긴장 상태로, 사상자가 50명 이상에 이르는 경우임, 핵실험 등 긴장 조성 행위를 포함”하는 상태이다. 2016년에는 1월과 9월에 북핵 실험이 있어 전년도에 비해 남북간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었다.

〈표 2-34〉 2017년 군사적 긴장완화 및 신뢰구축 부문 내용

일자	군사적 긴장완화 및 신뢰구축
1.1	北, 대륙간탄도미사일 시험발사 준비사업이 마감단계에 이르렀다고 주장하고 차대통령 실명비난(김정은 신년사 발표)
1.8	北, 대륙간탄도미사일은 북한 최고수뇌부가 결심하는 임의의 시각, 임의의 장소에서 발사되게 될 것이라고 위협(北 외무성 조선중앙통신 기자문답)
1.22	韓美, 청와대·백악관 고위급 채널을 첫 가동하고 북핵문제 시급성에 대한 공동인식 확인(김관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마이클 플라너 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전화통화)
1.25	北, 대륙간탄도미사일 시험발사가 시간·장소를 불문하고 가능하다고 주장하고 핵미사일 개발 및 시험발사에 대한 북한 당국의 의지를 거듭 확인(최광일 北 외무성 미주 부국장, 美 NBC 인터뷰)
2.2	정부, 북한의 연례적 한미 방어훈련 왜곡 및 핵 무력·선제공격 등을 거론한 대남위협(2.1)에 대해 강력히 규탄(통일부 대변인 정례브리핑)
2.12	北, 평안북도 방현 일대에서 탄도미사일 1발 발사
2.12	정부, 북한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해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며 한반도 및 국제사회 평화와 안전에 대한 위협이라고 규정하고 강력히 규탄(북한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한 외교부 성명)
2.13	김정남 사망(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2.16	韓美日, 북핵 위협의 시급성과 엄중성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고, 북한의 선행을 바꾸기 위하여 전방위적인 대북 제재·압박을 강화하는 방안 등에 대해 협의하고 북핵 관련 공동성명 채택(한미일 외교장관 회담, 獨 분)
3.1	대통령 권한대행, 북한에 대한 전방위 압박·제재 기초 재확인(3·1절 기념사) 北, 한미연합훈련을 비난하며 초강경 대응조치로 맞서겠다고 위협(北 인민군 총참모부 대변인 담화)
3.6	北, 탄도미사일 4발 발사(합동참모본부 확인, 국방부 정례브리핑)

일자	군사적 긴장완화 및 신뢰구축
3.26	北, 한미연합훈련에 미국 특수부대 투입 관련 반발·위협(北 인민군 총참모부 대변인 경고)
3.26	軍, 北 인민군 총참모부 대변인 경고(3.26) 관련 북한의 도발에 대해 단호하게 응징하여 북한 정권이 자멸하도록 할 것이라고 경고(합동참모본부 입장)
4.5	정부, 北 미사일 발사(4.5)를 강력 규탄하고 북한 정권의 무모한 도발이 결국은 자멸을 앞당기게 될 것을 직시해야할 것임을 지적(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한 외교부 대변인 논평)
4.14	北, 주한 미군기지 및 청와대 등을 거론하며 초토화 위협(北 인민군 총참모부 대변인 성명)
4.14	軍, 北 총참모부 대변인 성명(4.14) 관련 우리 군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도발을 자행한다면 한미 동맹의 강력하고 단호한 응징으로 북한 정권은 파멸에 이르게 될 것이라고 경고(합동참모본부 입장자료)
4.16	정부, 북한 미사일 발사(4.16) 상황 분석 및 대응책 논의(국가안전보장회의 상임위원회)
4.16	정부, 열병식에 갖가지 공격용 미사일을 내보인데 이어 탄도미사일 발사를 감행한 것은 전 세계를 상대로 한 위협 시위라고 비판하고, 고강도 전략도발시 북한 정권이 감내하기 어려운 강력한 징벌적 조치가 반드시 있을 것임을 거듭 경고(외교부 대변인 논평)
4.29	軍, 北 탄도미사일 발사(4.29) 관련, 북한의 지속적 도발 행위에 대해 거듭 강력 경고하고, 이러한 경고에도 도발을 계속할 경우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분명히 치르게 될 것 강조(북한 탄도미사일 발사와 관련한 우리 군의 입장, 합동참모본부)
5.14	정부, 北 탄도미사일 발사(5.14) 관련 국가안전보장회의 상임위원회 개최
5.14	정부, 北 탄도미사일 발사를 강력 규탄하고, 북한에 일체의 도발을 중단하고 비핵화를 위한 대화의 길로 나올 것을 거듭 촉구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한 정부 성명)
5.21	정부, 北 탄도미사일 발사(5.21) 관련 국가안전보장회의 상임위원회 개최
5.21	정부, 북한의 도발을 강력 규탄하고 북한이 유엔 안보리 관련 결의를 위반한 일체의 도발 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비핵화의 길로 나올 것을 촉구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한 외교부 대변인 성명)
6.1	대통령, 평화로운 한반도는 더는 꿈이 아니며, 임기 내에 한반도 평화의 획기적인 전기를 만들 것임을 강조 (제12회 제주포럼 개막식 영상축사)
6.15	대통령, 역대 남북합의는 정권이 바뀌어도 반드시 존중되어야 하는 중요한 자산을 밝히고, 북한이 핵 포기 결단을 실천한다면 적극 도울 것임을 강조하며 북한의 호응을 촉구 (김대중평화센터 6.15 남북정상회담 17주년 기념식 축사)
6.30	韓美, 북핵 문제 해결에 최우선 순위를 두고 북한을 비핵화 대화로 유도하기 위해 최대의 압박을 가하는 동시에 올바른 여건 하에서 북한과의 대화에 열린 입장을 유지하기로 합의 (한·미 공동성명)
7.4	정부, 北 탄도미사일 발사(7.4)를 강력 규탄하고, 도발을 즉각 중단하고 조속히 비핵화 대화의 길로 나올 것을 촉구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한 정부 성명, 외교부)
7.5	韓美, 北 탄도미사일 대응훈련 실시
7.6	대통령, '베를린 구상' 발표

일자	군사적 긴장완화 및 신뢰구축
7.17	정부, '베를린 구상' 후속조치로 7.21 판문점 북측지역 「통일각」에서 남북군사당국회담 개최를 북측에 제의 (군사분계선에서 일체의 적대행위 중지를 위한 남북군사당국회담 개최 제의, 국방부 차관)
7.29	정부, 北 탄도미사일 발사(7.28) 관련 국가안전보장회의 전체회의 개최
7.29	정부, 북한의 ICBM급 미사일 발사(7.28)를 강력 규탄하고, △비핵화 및 평화 구축 △ '베를린 구상' 후속조치의 대북제안에 호응할 것을 촉구 (북한의 ICBM급 미사일 발사에 대한 정부성명, 외교부) 韓美, 북한의 ICBM급 미사일 발사 도발에 대응해 연합 탄도미사일 사격훈련 실시
8.5	유엔 안보리, 북한 탄도미사일 도발(7.4, 7.28)에 대응하여 결의 2371호 채택
8.7	北, 안보리 결의 제2371호(8.5)를 '美 압살책동의 산물', '자주권 침해', '정면 도전'이라며 '전면 배격·천백배로 결산' 등 위협 (北 정부 성명)
8.8	北, 미국의 대북 '군사옵션' 언급·전략자산 한반도 전개 계획 등을 비난하며 군사적 대응 위협 (北 조선인민군 총참모부 대변인성명)
8.15	대통령, △북한에 즉각 도발을 중단하고 대화의 장으로 나올 것을 촉구 △이산가족 상봉, 평창올림픽 등 쉬운 일부터 시작할 것을 다시 한 번 북한에 제안 (제72주년 광복절 경축사)
8.17	대통령, △북한이 레드라인 임계치에 다가서고 있음 △적어도 북한이 추가적인 도발을 멈춰야만 대화의 분위기가 조성될 수 있음 (취임 100일 기자회견)
8.26	北, 동해상으로 단거리탄도미사일(SRBM) 수발 발사
8.29	北, 중거리탄도미사일(IRBM) 발사
8.30	유엔 안보리, '北 미사일 발사 규탄' 성명 만장일치로 채택
8.31	北, 우리 언론 北 관련 보도에 대해 '공화국 모독 특대형 반국가범죄'라며 '임의의 시각 임의의 장소에서 추가적인 절차 없이 즉시 집행' 위협 (北 중앙재판소 대변인 담화)
9.3	北, 6차 핵실험 (함경북도 길주군 풍계리 일대, 5.7규모 인공지진파 감지) 정부, "북한이 핵과 미사일 개발을 고도해 나가고 있는 것을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 (국가안전보장회의 결과 관련 국가안보실장 브리핑)
9.4	韓美, △모든 수단을 동원해 대북 압박 극대화 △한미 미사일지침상 한국의 미사일 탄두 중량 제한 해제 합의 (정상간 전화통화)
9.11	유엔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2375호 만장일치로 채택
9.15	北, '화성-12형' 탄도미사일 1발 발사 (평양 순안공항, 동해상)
9.21	한미일, '최고강도 제재·압박'에 공감 (3국정상 오찬, 미국 뉴욕)
9.22	北, (김정은 성명 관련) "태평양상 역대급 수소탄 시험할 것" (리용호 외무상 기자회견)
9.26	美, 행정명령 관련 제재대상으로 北은행(10개) 및 해외근무 북한인(26명) 지정
10.4	정부, "이산가족 문제부터 풀어나갈 것을 다시금 북한에 촉구" (통일부장관, 제48회 합동경모대회 격려사)

일자	군사적 긴장완화 및 신뢰구축
10.7	北, 美 전략자산 순환배치 확대 관련, '초강경 조치' 위협 (북침전쟁연습반대 국민족위대변인 담화)
10.11	北, △핵무기 대상 협상 불가 △美와 힘의 균형에 압박 △러시아 제안(로드맵) 불수용 등 입장 표명 (리용호 외무상, 러 타스통신 대표단 면담)
10.16	北, "한반도 정세는 일촉즉발의 상황, 핵전쟁이 언제라도 터질 수 있어", "미국의 적대적 정책과 핵 위협이 완전히 제거되지 않는 한, 핵무기와 탄도 로켓 문제를 협상 테이블에 올리지 않을 것"(UN주재 북한대표부 차석대사)
10.20	北 최선희 외무성 국장, "미국이 핵을 가진 조선과 공존할 준비가 돼 있지 않은 한 조선의 핵무기는 협상 대상이 될 수 없다", "미국과의 문제가 해결되기 전까지 6자회담으로 복귀하지 않을 것" (러 국제핵비확산회의)
10.22	대통령, "우리 민주주의는 북의 미사일보다 백배 천배 강하다", "생사 확인, 서신교환, 상봉과 고향 방문이라는 이산가족의 간절한 바람들을 정치적·군사적 상황과 분리해 풀어가겠다" (제35회 대통령기 이북도민 체육대회 축사)
10.31	정부, "우리 정부와 미국은 북한의 비핵화를 목표로 하되 비핵화 자체에 대한 의지가 확인되면 그 전이라도 북한과 대화·협상을 할 수 있다고 보고 (그렇게) 접근하고 있음." (통일부 장관, 국회 국정감사)
11.1	대통령 '한반도 문제 5대원칙' 표명 (국회 시정연설) △한반도 평화정착 △한반도 비핵화 △남북문제의 주도적 해결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 △북한의 도발에 대한 단호한 대응
11.3	대통령, "현 시점에서 한미연합훈련 중단을 말할 수 없음. 北 도발 중단이 우선임." (싱가포르 채널뉴스 아시아(CNA) 인터뷰, 11.12~13 방영)
11.8	美 트럼프 대통령, 국제사회에 北 압박 동참 촉구 및 北과의 대화조건(공격 종료, 미사일 개발 중단, 총체적 비핵화) 제시 (국회 연설)
11.11	정부, 비핵화 협상에 앞서 북한의 '도발 중단' 상황이 이어져야 함을 강조하면서 '노선 전환의 분명한 신호'를 보여줄 것을 북한에 촉구 (외교부 장관, 블룸버그 통신 인터뷰, 13일 보도)
11.14	통일부, (UN 총회 평창올림픽 휴전결의 관련) "북한이 조속히 평창올림픽 참가를 확정 짓고, 남북이 만나 평창올림픽을 평화올림픽으로 개최하기 위한 제반 문제들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논의해 나갈 수 있기를 바램."
11.14	대통령, "북핵을 동결하고 완전한 폐기로 나아가는 식의 협의가 되면 그에 상응해 우리와 미국과 국제사회가 북한에 무엇을 해줄 수 있을지 협의할 수 있을 것" (동남아 순방 수행 취재기자단 필리핀 현지 간담회)
11.20	美 트럼프 대통령, 北 테러지원국 재지정 발표
11.29	北, 장거리 탄도 미사일 발사(평양 평성) * 고도 4,475km, 비행거리 950km(北 발표) 12:30, 北, '화성-15형 발사 성공, 국가핵무력 완성' 정부 성명 발표
11.30	한미 정상간 재통화, 대북 최대압박 등 대응조치 논의

일자	군사적 긴장완화 및 신뢰구축
12.2	北, 한미공중연합훈련(12.4~8) 관련, '핵선제공격의 구실 마련', '핵전쟁의 전주곡' 등 비난 (외무성 대변인 성명)
12.6	北, 전쟁을 바라지 않지만 결코 피하지 않을 것이라고 위협 (외무성 대변인 기자회견)
12.8	대통령, 안보와 평화를 지키기 위해 북한에 대한 압도적 '힘의 우위'를 달성해야 한다고 강조 (全軍 주요 지휘관 초청 청와대 오찬간담회)
12.11	정부, 화성-15형 발사(11.29) 대응 추가 독자 대북제재 - 北 금융기관·선박회사 등 20개 단체, 개인 12명 추가 지정
12.12	北 자성남 UN대사, 조건이 갖춰지면 미국과 대화할 수 있다고 언급 (NHK 보도)
12.12	美 톨러슨 국무장관, 전제조건 없이 북한과 만날 용의가 있다고 발언 (애틀랜틱카운슬·국제교류재단 공동 주최 토론회 기조연설)
12.12	美, (톨러슨 발언 관련) 북한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견해는 바뀌지 않았다고 해명 (백악관 대변인 성명)
12.14	한중 정상회담(베이징) △한반도 전쟁 절대 불가 △한반도 비핵화 원칙 확고한 견지 △비핵화를 포함한 모든 문제의 대화·협상을 통한 평화적 해결 △남북관계 개선이 한반도 문제 해결에 도움 등 '한반도 평화·안정을 위한 4대 원칙' 합의
12.20	대통령, 북한이 평창올림픽 기간까지 도발을 멈추면 한미 합동군사훈련을 연기할 가능성이 있으며, 이미 미국 측에 그런 제안을 했다고 언급 (NBC 인터뷰)
12.22	UN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2397호 채택

※ 자료 출처: 통일부 홈페이지, <남북관계 주요일지>.

11) 상호체제인정

- 상호체제인정은 기존에 남한과 북한에서 교류와 접촉의 대상을 규제하는 법을 기준으로 한 평가이다. 2011년에 체제 간 상호비방의 강도를 기준으로 남북 정치통합의 정도를 반영하려 하였으나 보다 과학적인 방법론을 체계적으로 도입하지 않는 한 이러한 비방의 수준과 강도를 정확히 반영하기 어렵다는 판단 하에 기존의 방식대로 상호체제를 법과 제도의 틀 속에서 어느 정도 인정하고 있는가 하는 영역으로 제한하여 평가하였다. 법 개정 관련부문 점수는 남북교류 관련법과 국가보안법(남한), 형법

(북한) 등 남한과 북한에서 각각 두 개의 법률을 선택하여 총 4개의 법률에 각 2.5점씩 총 10점을 만점으로 한다.

(표 2-35) 상호체제인정 정도(법 개정)

점수	내용
0점	남북관계 관련 법제도 제정 및 개정에 대한 논의가 전혀 없음
0.5점	남북관계 관련 법제도 제정 및 개정에 대한 논의가 진행 중
1.0점	남북관계 관련 법제도 제정 및 개정이 이루어짐
1.5점	남북관계 관련 법제도 재개정 및 보완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짐
2점	남북관계 관련 법제도 재개정 및 보완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상당 수준으로 법제도가 확립됨.
2.5점	남북관계 관련 법제도가 완벽한 수준으로 제정(개정)되어 있음

- 먼저 기존의 남북한 법 개정 관련부문 상호인정 점수는 다음과 같다. 상대체제 인정행위 중 법 개정 관련점수는 5점을 기준으로 환산했다. 남한의 경우, 2015년 남북교류협력 관련법은 “남북관계 관련 법제도 재개정 및 보완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짐”에 해당하는 1.5점을 부여한다. 2005~2010년 기간에 2점으로 올라갔던 남북교류관련법은 2011년 이후 5.24조치와 2016년 개성공단 폐쇄의 영향으로 1.5점에서 한 단계 더 떨어져 1점으로 하락했다. 국가보안법은 법개정에 대한 논의가 진행 중이지는 않으며 간헐적으로 개정에 대한 논의가 제기되는 상황이어서 1991년 이후 0.1점을 부여하였다. 북한의 경우, 교류협력 관련법은 전무하여 0점으로 처리하고, 남한의 국가보안법에 대비되는 형법이 지속적으로 개정되는 현실을 반영하여 2015년 현재 0.3점을 부여하였다. 이를 종합하면 법률적 측면에서 2017년 점수는 전년보다 0.5점이 하락한 1.4점으로 평가한다.

〈표 2-36〉 남북한의 상호체제인정 부문 점수

	상호체제인정(법 개정)				가중치 총점 (10점)
	남한		북한		
	교류협력 관련법 (2.5점)	국가보안법 (2.5점)	교류협력 관련법 (2.5점)	형법 (2.5점)	
1989	0.5	0	0	0	0.5
1990	1.0	0	0	0	1.0
1991	1.0	0.1	0	0	1.1
1992	1.0	0.1	0	0	1.1
1993	1.0	0.1	0	0	1.1
1994	1.0	0.1	0	0	1.1
1995	1.0	0.1	0	0.1	1.2
1996	1.0	0.1	0	0.1	1.2
1997	1.0	0.1	0	0.1	1.2
1998	1.0	0.1	0	0.1	1.2
1999	1.0	0.1	0	0.2	1.3
2000	1.0	0.1	0	0.2	1.3
2001	1.0	0.1	0	0.2	1.3
2002	1.5	0.1	0	0.2	1.8
2003	1.5	0.1	0	0.2	1.8
2004	1.5	0.1	0	0.3	1.9
2005	2.0	0.1	0	0.3	2.4
2006	2.0	0.1	0	0.3	2.4
2007	2.0	0.1	0	0.3	2.4
2008	2.0	0.1	0	0.3	2.4
2009	2.0	0.1	0	0.3	2.4
2010	2.0	0.1	0	0.3	2.4
2011	1.5	0.1	0	0.3	1.9
2012	1.5	0.1	0	0.3	1.9
2013	1.5	0.1	0	0.3	1.9
2014	1.5	0.1	0	0.3	1.9
2015	1.5	0.1	0	0.3	1.9
2016	1.5	0.1	0	0.3	1.9
2017	1.0	0.1	0	0.3	1.4

12) 관계통합지수 종합

- 정치영역의 관계통합지수는 지수를 구성하는 10개의 변인의 점수를 합계로 산정된다.

2017년에는 남북 간의 회담이 개최되지 않아 고위급 정치회담 점수는 전년과 마찬가지로 0점이다. 또한, 남북 회담이 개최되지 않아 정치, 군사, 외교 영역에서 구성 및 활동이 없었다. 이에 2017년 매개제도 구성과 활동 점수는 전년과 마찬가지로 0점이다. 군축 부문 점수도 병력의 증가로 전년과 동일한 0점이다. 2017년 정치영역의 관계적 통합지수는 0.5점이 감소한 2.4점을 기록했다.

〈표 2-37〉 2016년/2017년 정치영역 관계통합지수 변화부문 지수 비교

	2016년	2017년	증감	요인
실무정치회담	0.0	0.0	0.0	남북 대화 단절 지속
고위급정치회담	0.0	0.0	0.0	남북 대화 단절 지속
군사분야회담	0.0	0.0	0.0	남북 대화 단절 지속
의회회담	0.0	0.0	0.0	남북 대화 단절 지속
정치분야공동행사	0.0	0.0	0.0	남북 교류 단절 지속
매개제도 구성과 활동	0.0	0.0	0.0	남북 교류 단절 지속
대화·회담 정례화	0.0	0.0	0.0	남북 교류 단절 지속
외교군사적 협력	0.0	0.0	0.0	남북 대화 단절 지속
군축	0.0	0.1	0.1	남북 병력수 소폭 감소
정치군사적 긴장완화	1.0	1.0	0.0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
상호체제인정	1.9	1.4	-0.5	개성공단 폐쇄, 상호 비방
계	2.9	2.5	-0.4	

라. 종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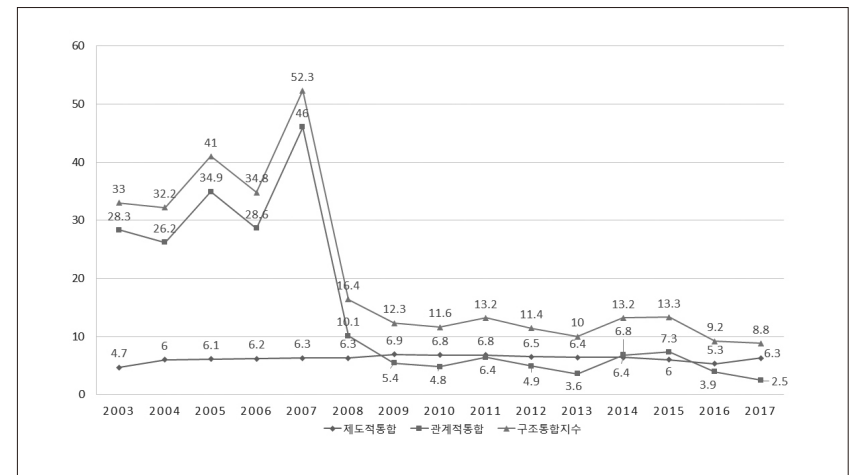
-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제도적 차원과 관계적 차원을 포함하는 정치영역 구조통합을 평가한 전체지수를 종합하면 다음 〈표 2-38〉와 같다.

〈표 2-38〉 정치영역 구조통합지수 종합

	제도적 통합(90)			관계적 통합(160)										합계 (250)	통합 단계	
	공동 집행 기구 (30)	단일 제도화 (30)	공동 법제화 (30)	실무정치 회담 (20)	고위급 정치 회담 (20)	군사 회담 (20)	의회 회담 (20)	남북공동 행사 (10)	매개 제도 (20)	정례화 (10)	국제 협력 (10)	군축 (10)	긴장 완화 및 신뢰 구축 (10)			상호 체제 인정 (10)
1989	0	0	1.0	1.0	0	0	0.8	0	0	0	0	1.8	4	0.5	9.1	0
1990	0	0	1.0	2.2	6	0	0.4	0	0.5	2.5	0	1.7	4	1.0	19.3	1
1991	0	0	1.0	2.0	4	0	0.2	0	1.1	2.5	0.4	1.7	4	1.1	18	1
1992	0	0	2.0	15.4	6	0	0	0	14.3	2.5	0.4	1.6	2	1.1	45.3	3
1993	0	0	2.5	0.8	0	0	0	0	0	0	0.6	1.4	3	1.1	9.4	0
1994	0	0	2.6	2.0	0	0	0	0	1	0	0.2	1.4	3	1.1	11.3	1
1995	0	0	3.1	0.0	0	0	0	0	0.5	0	0	1.4	3.5	1.2	9.7	0
1996	0	0	3.2	0.0	0	0	0	0	0	0	0.7	1.0	1	1.2	7.1	0
1997	0	0	3.3	0.0	0	0	0	0	0	0	3.7	0.4	2.5	1.2	11.1	1
1998	0	0	3.8	0.4	0	0	0	0	0	0	2.2	0.3	3.5	1.2	11.4	1
1999	0	0	4.3	0.6	1.6	0	0.2	0	0.5	0	2.5	0.3	1.5	1.3	12.8	1
2000	0	0	4.4	2.6	11	3.2	0.6	0	11	2.5	0.7	0.3	4	1.3	41.6	3
2001	0	0	4.5	0.0	3	0.8	0.4	0	6.3	2.5	0.5	0.3	4	1.3	23.6	2
2002	0	0	4.6	0.4	3	3.6	0.6	0	7.2	2.5	0.5	0.3	2	1.8	26.5	2
2003	0	0	4.7	0.2	6	2.4	0.4	0	7.2	5	1.0	0.3	4	1.8	33	2
2004	0	0	6	0.0	3	3.2	1.2	0	7.1	2.5	2.5	0.3	4.5	1.9	32.2	2
2005	0	0	6.1	1.2	5.3	1.2	1.4	5	8.2	2.5	2.4	0.3	5	2.4	41	3
2006	0	0	6.2	0.6	3	2.8	2.6	2.5	6.8	2.5	1.0	0.4	4	2.4	34.8	2
2007	0	0	6.3	1.8	10	7.8	1.8	2.5	9.4	2.5	2.9	0.4	4.5	2.4	52.3	3
2008	0	0	6.3	0	0	0.8	0	0	3	0	1.5	0.4	2	2.4	16.4	1
2009	0	0.5	6.4	0.8	0	0	0.2	0	0.3	0	0	0.2	1.5	2.4	12.3	1
2010	0	1.0	5.8	0	0	0.8	0.2	0	0	0	0	0.4	1	2.4	11.6	1
2011	0	1.0	5.8	0	0	0.4	0	0	0	0	1.2	0.4	2.5	1.9	13.2	1
2012	0	1.0	5.5	0	0	0	0	0	0	0	0	0.5	2.5	1.9	11.4	1
2013	0	0.5	5.9	0.2	0	0	0	0	0	0	0	0.5	1.0	1.9	10.0	0
2014	0	0.5	5.9	0.2	1.5	0.4	0	0	0.3	0	0	0.5	2	1.9	13.2	1
2015	0	0.5	5.5	0	2.3	0	0	0	0.6	0	0	0.5	2	1.9	13.3	1
2016	0	0.5	4.8	0	0	0	0	0	0	0	0	0	2	1.9	9.2	0
2017	0	0.5	5.8	0	0	0	0	0	0	0	0	0.1	1	1.4	8.8	0

- 2017년 정치영역의 남북한 구조통합지수는 8.8점으로 전년에 비해 0.4점이 감소하였다. 통합단계는 10점 이하로 0단계 수준으로 평가된다.
- 구조통합지수를 구성하는 한 축인 제도통합 부문은 1.0점 증가하였고, 다른 한 축인 관계통합 부문은 1.4점 하락하여 전체적으로 0.4점이 감소하였다.
- 제도통합 부문은 정치분야나 군사분야의 남북공동집행기구가 존재하지 않고 기구구성의 논의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남북한 정치체도의 단일화 정도는 0.5점으로 전년과 동일하다. 공동법제화 수준은 전년 대비 1.0점 증가하여 5.8점이다.
- 관계통합 부문은 각종 회담 부분에서 남북관계의 단절과 대립이 지속되었다. 군축부분은 남북한 병력의 소폭 감소로 0.1점이다. 군사적 긴장완화와 신뢰구축 부분은 작년보다 악화되어 1점이었다. 상호체제인정 부문에서는 전년보다 악화되어 1.4점으로 평가되었다.

〈그림 2-3〉 정치영역 구조통합지수 연도별 추이



3. 사회문화

가. 지수구성

- 사회문화영역의 구조통합지수를 구성하는 제도적 통합과 관계적 통합은 반드시 누적적 단계에 따라 실현되는 것이 아니라 동시에 실현될 수 있지만 현실적으로 제도적 통합은 관계적 통합이 일정한 수준까지 올랐을 때 관계적 통합을 제도적으로 보장 또는 확정하는 방식으로 뒤따르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 사회문화영역의 구조통합지수를 구성하는 변인과 배점은 아래와 같다.

〈표 2-39〉 사회문화영역 변인들의 분류와 배점

영역	변인	배점
제도통합	사회문화정책 공동집행기구	30
	사회문화분야 남북 법제화	30
	사회문화제도의 단일화	30
	소계	90
관계통합	사회문화 인적 왕래	20
	사회문화 교류협력사업(공동행사)	20
	사회문화 교류협력기금 조성 및 집행	20
	이산가족 상봉의 상시화	10
	인적 이동의 자유화	20
	언론·방송의 자유화	20
	국제대회 공동개최·단일팀 구성	20
	사회문화 교류협력 정례화 및 공동협의기구	30
	소계	160
합계	250	

- 이상의 변인들에 부여된 점수를 가산하여 사회문화적 통합의 단계를 아래와 같이 판단할 수 있다.
 - 0단계 (교류가 없거나 있더라도 미미한 수준): 10점 이하
 - 1단계 (비정기적인 교류, 접촉빈도 낮음(제한적 범위에서 진행)): 11-20점
 - 2단계 (비정기적인 교류, 접촉빈도 높음): 21-40점
 - 3단계 (정기적인 교류, 공동 협의기구(매개 제도) 구성): 41-70점
 - 4단계 (공동협의기구(매개제도)의 상시화): 71-90점
 - 5단계 (주요 대회 공동개최, 자유화 진행): 91점-110점
 - 6단계 (남북 사회문화 공동집행기구 구성): 111-130점
 - 7단계 (일부 사회문화제도 단일화·공동법제화): 131-160점
 - 8단계 (광범위한 사회문화제도 단일화·공동법제화): 161-190점
 - 9단계 (포괄적 사회문화정책 공동집행기구에 위임): 191-220점
 - 10단계 (남북 사회문화공동체 완성): 221-250점

- 남북통합 수준을 단계로 구분하면, 남북 접촉·교류기(0~2단계), 남북 협력도약기(3~5단계), 남북연합기(6~8단계), 통일 완성기(9~10단계)이다. 남북통합은 3단계, 6단계, 9단계에서 질적으로 도약(take-off)한다. 마지막의 실질적인 통일 시기는 남북한 간 사회문화 분야에서 자유화·제도화·단일화 등이 완전하게 실현되는 단계를 의미한다.

나. 제도통합지수

- 사회문화영역의 제도통합을 측정하는 지표와 배점은 아래와 같다. 단, 사회문화영역의 남북 공동 집행기구는 구성뿐만 아니라 기구의 활동이 활발히 이루어지는 수준까지 포함하며, 남북한 간 사회문화제도의 표준화/단일화의 영역은 대표적 측정지표로서 소통의 도구로서 언어와 방송 통신기술의 표준화, 삶의 만족도를 나타내는 사회복지제도의 단일화로 한정한다.

- 제도통합지수를 구성하는 지표와 배점의 세부 사항은 다음의 표와 같다.

〈표 2-40〉 사회문화영역 제도적 통합의 지표와 배점

통합 영역	지표	세부 지표	배점
제도적 통합 (총 90점)	남북 공동의 사회문화정책 집행기구 (30점)	공동의 집행기구 구성 논의	10
		공동의 집행기구 구성 추진	10
		공동의 집행기구 활성화	10
	남북한 사회문화제도 단일화 (30점)	언어의 표준화	10
		방송통신기술의 표준화	10
		사회복지제도의 단일화	10
	남북한 사회문화 법제화 (30점)	남북한 법제화 수준	15
		북한 법제의 실효성	15

1) 남북한 공동의 사회문화정책 집행기구

- 2017년에는 남북한 사회문화정책을 공동으로 집행할 기구 구성에 대한 논의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 변수에 해당되는 점수는 30점 만점 중 0점이다.

2) 남북한 사회문화제도의 단일화

- 2017년에는 남북한 당국 간 사회문화제도(언어, 방송통신기술, 사회복지 제도 등)를 표준화 또는 단일화하려는 조치는 전혀 논의되지 않고 있다. 이중 사회복지제도의 단일화에 대한 조치에 대해 부여하는 점수는 10점 만점 중 0점이다.
- 하지만 일부 영역에서는 남북한 간 사회문화제도의 표준화를 위한 노력이나 환경이 조성되고 있다. 특히, 남한과 마찬가지로 북한 방송통신기술의 보급이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다. 따라서 2015년부터는 방송통신기술의 표준화에 관한 지표를 세분화하여 반영기로 하였다.

- 방송통신기술의 표준화에 대한 배점은 방송통신기술 표준화의 환경조성 2점, 방송통신기술 표준화의 합의 도출 3점, 방송통신기술 표준화의 실행 5점으로 세분화되었다. 이중 방송통신기술 표준화의 환경조성의 경우 남한주민의 이동전화 이용률¹¹⁾과 북한주민의 손전화 이용률¹²⁾을 평균한 점수를 단계별로 구분하여 0~25%는 0.5점, 26~50%는 1.0점, 51~75%는 1.5점 76~100% 2.0점의 점수를 부여한다. 가장 최근 통계를 기준으로 남한주민 이동전화 이용률은 2017년 기준 99.9%이며, 북한주민의 손전화 이용률은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북한주민 통일의식조사”에 따르면 44.8%에 이른다. 따라서 방송통신기술 표준화의 환경조성에 대한 점수는 평균 이용률 72.3%으로 해당하는 점수는 1.5점이다. 결과적으로 2017년 방송통신기술의 표준화에 대한 조치에 대해 부여하는 점수는 10점 만점 중 1.5점이다.

- 한편 민간 차원에서 거래말큰사전 편찬사업을 통해 언어의 표준화가 시도되고 있다. 한국수출입은행에 따르면 거래말큰사전 편찬 공정률은 2010년 12월 기준으로 56.7%를 기록하여 절반을 넘어서었다.¹³⁾ 이후 남북 관계의 경색이 지속되면서 남북한 간 공동회의가 중단되었으나 2014년 7월에 재개되어 2015년 5월 5일~11일 중국 선양에서 북측 관계자와 만나 거래말큰사전 편찬회의와 집필회의를 하였다.¹⁴⁾ 2015년 12월 6일부터 13일까지 중국 대련에서 제25차 <<거래말큰사전>> 공동편찬회의를 개최

11) 통계청 국가통계포털 <http://kosis.kr/statisticsList/statisticsList_01List.jsp?vwcd=MT_ZTITLE&parentId=#SubCont>

12)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2018 북한 사회변동과 주민의식 변화: “다가오는 평화, 달라지는 통일의식”」,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주최 국내학술회의(2018년 10월 30일) 참조.

13) 이성규, “남북경색으로 ‘거래말큰사전’사업 차질”, 「연합뉴스」, 2011년 5월 29일.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1/05/27/0200000000AKR20110527043000002.HTML?did=1179m>)

14) 김호준, “거래말큰사전 남북 편찬회의 5~11일 중 선양서 개최”, 「연합뉴스」, 2015년 5월 5일.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5/05/05/0200000000AKR20150505049400043.HTML?input=1179m>)

하였다. 이번 회의에서는 올림말 집필 원고 24,076개를 검토하였으며, 이 중 19,799개의 원고를 합의하였다.¹⁵⁾ 하지만 2015년 회의 이후 남북 공동회의는 중단되었고, 남북한 간 언어 표준화 작업은 2010년 12월 수준에 머물러 있다. 따라서 남북한 간 언어 표준화에 부여하는 점수는 10점 만점 중 5.7점이다.

3) 남북한 사회문화 공동법제화 변수

- 남북한 사회문화 관련 공동법제화는 크게 법제화의 수준과 법제의 실효성으로 구분된다.
- 먼저, 사회문화영역의 법제화 수준은 북한의 법제화 수준, 남북간 법제의 수렴정도, 남북 공동법제의 구속력 수준으로 세분화하여 전문가조사를 통해 측정된다. 전문가조사는 2018년 6월에 10명의 북한법 전문가들이 세계의 지표를 10점 척도로 하여 점수를 부과하는 방식으로 실시되었다.
- 전문가조사를 실시한 결과, 사회문화영역에서 북한의 법제화 수준에 5.5점, 남북한 간 법제의 수렴도에 3.6점, 그리고 남북한 공동법제의 구속력에 3.6점이 부여되었다. 각 항목별 점수를 다시 5점 만점으로 환산한 후 합한 결과, 2017년 사회문화영역의 남북한 법제화 수준은 15점 만점 중 6.3점이다.

15) 김호준, “겨레말큰사전 남북 공동편찬회의 7~13일 중 다렌서 개최”, 「연합뉴스」, 2015년 12월 1일. (<http://m.yna.co.kr/amp/kr/contents/?cid=AKR20151201061900014>)

〈표 2-41〉 사회문화영역 남북한 법제화 정도

세부 지표	평균점수 (항목별 10점 만점)	상대점수 (항목별 5점 만점)	법제화 수준 (합계/15점 만점)
사회문화영역 북한의 법제화 수준	5.5	2.7	6.3/15
사회문화영역 남북 간 법제의 수렴도	3.6	1.8	
사회문화영역 남북 공동법제의 구속력	3.6	1.8	

〈표 2-42〉 사회문화영역 남북한 법제화 전문가 설문조사 연도별 추이

세부 지표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사회문화영역 북한의 법제화 수준	4.4	5.1	5.1	6.0	5.2	5.5	5.3	5.5
사회문화영역 남북 간 법제의 수렴도	3.2	3.4	3.3	3.8	3.8	3.3	3.3	3.6
사회문화영역 남북 공동법제의 구속력	3.8	3.1	3.1	3.4	3.7	2.8	2.9	3.6
평균	3.8	3.9	3.8	4.4	4.2	3.9	3.8	4.2

- 법제의 실효성은 북한헌법에 명시되어 있는 사회문화 자유화 관련 기본법 조항들이 실제로 현실사회에서 보장되고 있는가 여부로 판단한다. 측정지표와 배점은 아래의 표와 같다. 북한의 사회문화 자유화 법제의 실효성에 대한 점수는 문헌조사, 북한법 전문가의 자문, 그리고 북한주민(탈북자) 의식조사 등의 결과를 종합하여 판단한다.
- 2017년 기간 동안 사회문화 자유화와 관련된 북한 법제가 새롭게 제정되거나 개정된 바는 없으나,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이 실시한 『북한주민 통일의식조사 결과¹⁶⁾』를 보면, “북한에 살고 계실 때 얼마나 자주 다른 지

16)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2018 북한 사회변동과 주민의식 변화: “다가오는 평화, 달라지는 통일의식”,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주최 국내학술회의(2018년 10월 30일) 참조.

역(다른 군, 시, 도, 외국)에 가보셨습니까?” 질문에 “자주 가보았다” 또는 “가끔 가보았다”로 응답한 비율이 63.2%로 나타났다. 따라서 북한 헌법에 명시된 거주·여행의 자유가 전혀 실효성이 없다고는 할 수 없다. 해외여행의 자유가 인정되지 않는 상황에서 국내의 거주·여행의 자유 관련 법제의 부분적 실효성을 인정하여 2.5점을 부여한다. 나머지 언론, 출판, 집회, 시위와 결사의 자유 관련 법 조항과 신앙의 자유 관련 법 조항에 대한 실효성은 없다고 판단되어 각각 0점을 부여한다.

〈표 2-43〉 북한의 사회문화 자유화 법제의 실효성

헌법조항	실효성 수준*	실효성 점수*
모든 국민은 언론, 출판, 집회, 시위와 결사의 자유를 가짐	실효성 전혀 없음	0/5
국민은 신앙의 자유를 가짐	실효성 전혀 없음	0/5
모든 국민은 거주, 여행의 자유를 가짐	부분적 실효성 있음	2.5/5
합계 (15점 만점)		2.5

* 실효성 점수는 전면적 효력=5점, 부분적 효력=2.5점, 무효력=0점으로 구분

- 이상의 남북 사회문화 법제화 변인에 대한 점수를 종합해보면, 2017년 남북한 사회문화 법제화 점수는 남북 법제화 정도 6.3점과 북한의 자유화 법제의 실효성 2.5점을 합하여 30점 만점 중 8.8점으로 2016년보다 0.4점 상승하였다.

〈표 2-44〉 남북한 사회문화 법제화 변인에 대한 점수

구분 연도	법제의 실효성	남북한 법제화 정도	남북한 법제화 점수(합계)
1989	0	1.1	1.1
1990	0	1.1	1.1
1991	0	1.1	1.1
1992	0	1.3	1.3
1993	0	1.5	1.5
1994	0	1.6	1.6
1995	0	1.9	1.9
1996	0	2.2	2.2
1997	0	3.2	3.2
1998	2.5	4.4	6.9
1999	2.5	4.5	7.0
2000	2.5	4.6	7.1
2001	2.5	4.7	7.2
2002	2.5	4.7	7.2
2003	2.5	4.9	7.4
2004	2.5	5.0	7.5
2005	2.5	5.0	7.5
2006	2.5	5.0	7.5
2007	2.5	6.6	9.1
2008	2.5	6.6	9.1
2009	2.5	6.7	9.2
2010	2.5	5.7	8.2
2011	2.5	5.8	8.3
2012	2.5	5.8	8.3
2013	2.5	6.6	9.1
2014	2.5	6.4	8.9
2015	2.5	5.8	8.3
2016	2.5	5.9	8.4
2017	2.5	6.3	8.8

4) 제도통합지수 종합

- 사회문화영역 제도통합지수는 세 가지의 지표인 남북 공동의 사회문화정책 공동집행기구, 남북한 사회문화제도 단일화, 남북한 사회문화 법제화 각각에 부여된 점수를 합하여 산출하며, 2017년 사회문화영역 제도적 통합지수는 90점 만점 중 16점으로 2016년과 비교했을 때 0.4점 상승하였다.

〈표 2-45〉 사회문화영역 제도통합지수 종합

구분 연도	공동집행기구(30)	제도 단일화(30)	남북한 법제화	제도적 통합지수(합계)
1989	0	0	1.1	1.1
1990	0	0	1.1	1.1
1991	0	0	1.1	1.1
1992	0	0	1.3	1.3
1993	0	0	1.5	1.5
1994	0	0	1.6	1.6
1995	0	0	1.9	1.9
1996	0	0	2.2	2.2
1997	0	0	3.2	3.2
1998	0	0	6.9	6.9
1999	0	0	7.0	7.0
2000	0	0	7.1	7.1
2001	0	0	7.2	7.2
2002	0	0	7.2	7.2
2003	0	0	7.4	7.4
2004	0	0	7.5	7.5
2005	0	0.9	7.5	8.4
2006	0	1.7	7.5	9.2
2007	0	2.6	9.1	11.7
2008	0	3.5	9.1	12.6
2009	0	5.0	9.2	14.2
2010	0	5.7	8.2	13.9
2011	0	5.7	8.3	14.0

구분 연도	공동집행기구(30)	제도 단일화(30)	남북한 법제화	제도적 통합지수(합계)
2012	0	5.7	8.3	14.0
2013	0	5.7	9.1	14.8
2014	0	7.7	8.9	16.6
2015	0	7.2	8.3	15.5
2016	0	7.2	8.4	15.6
2017	0	7.2	8.8	16.0

다. 관계통합지수

- 사회문화영역의 관계통합을 측정하는 지표는 인적왕래의 규모, 사회문화 교류협력의 빈도, 남북교류협력기금 중 사회문화영역의 비중, 이산가족 상봉의 상시화, 이동의 자유화, 언론방송의 자유화, 국제대회에서의 민족적 단결성, 마지막으로 정책협치의 정례화와 공동성 등이 포함된다.
- 사회문화 관계통합을 구성하는 지표와 배점의 세부 사항은 아래의 표와 같다.

〈표 2-46〉 사회문화영역 관계적 통합 지표와 배점

통합영역	지표	배점
관계통합	사회문화 인적 왕래	20
	사회문화 교류협력사업(공동행사)	20
	사회문화 교류협력기금 조성 및 집행	20
	이산가족 상봉의 상시화	10
	인적 이동의 자유화	20
	언론·방송의 자유화	20
	국제대회 공동개최·단일팀 구성	20
	사회문화 교류협력 정례화 및 공동협의기구	30
	소계	160

1) 인적 왕래

- 인적왕래 변인의 경우, 북한주민의 남한방문이 상대적으로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북한주민이 방남한 경우에는 인원수에 2를 곱하는 가중치를 부여한다.
- 2017년 인적왕래는 통일부의 통계자료 분류 방식의 변경으로 분야별 남한주민의 북한방문 인원을 확인할 수 없고, 총 인원은 52명이다.
- 2009년 이후로 북한주민의 남한방문의 경우 통일부의 통계자료 분류 방식의 변경으로 분야별 남한방문 인원을 확인할 수 없고 2017년에는 63명이다.
- 이상의 남한주민의 북한방문 인원과 북한주민의 남한방문 인원 가중치를 부여한 결과, 방북 52명+방남 63명(X2)=178이 된다.
- 연간 인적왕래 수준의 기준점은 700만 명으로 하며, 상대점수는 인적왕래 비율이 1% 변화할 때마다 0.2점이 가산되는 방식으로 산정한다.¹⁷⁾
- 2017년 인적왕래 변인의 총점은 178으로 2016년에 비해 대폭으로 상승하였고, 기준점에 대한 비율은 0%로 이 수치는 지난해 보다 대폭 상승한 것이다. 2017년 인적왕래 변인에 부여된 상대점수는 20점 만점 중 0점이다. 상대점수가 0점인 이유는 기준점에 대한 비율이 0.1% 이하인 경우는 0점 처리하는 것으로 지수가 설계되어 있기 때문이다.

17) 본 수치에 활용하던 월간 남북교류협력 동향의 출판이 2017년 7월 이후로 중단되었다. 따라서 이전에 분야별로 표기하던 방북인원 수치는 확인하기 어렵고 총 인원 수로만 나타내기로 한다.

〈표 2-47〉 인적왕래 변인 상대점수

구분 연도	이산 가족 (A)	교육 학술 (B)	문화 예술 (C)	체육 (D)	종교 (F)	언론 출판 (G)	대북 지원 (H)	관광 (I)	가중치 총점*	비율 (%) **	상대 점수
1989									1	0	0
1990									1,056	0	0
1991									762	0	0
1992									566	0	0
1993									36	0	0
1994									12	0	0
1995									536	0	0
1996									146	0	0
1997	0	1	0	0	4	11	151	-	167	0	0
1998	1	21	87	0	51	48	129	10,554	10,891	0.2	0
1999	5	1	106	125	39	4	364	148,008	148,652	2.1	0.4
2000	348	5	697	446	47	143	751	212,247	214,684	3.1	0.6
2001	436	76	134	312	86	82	803	57,285	59,214	0.9	0.2
2002	1,479	68	513	2,182	195	84	1,975	84,347	90,843	1.3	0.2
2003	233	396	34	1,552	584	253	1,670	73,922	78,644	1.1	0.2
2004	1,632	797	784	161	376	107	2,067	266,223	272,147	3.9	0.8
2005	247	273	286	955	1,231	1,242	6,669	301,153	312,056	4.5	0.9
2006	2,127	378	138	274	788	487	7,658	234,446	246,296	3.5	0.8
2007	3,207	865	331	1,624	4,779	289	13,119	345,006	369,220	5.3	1
2008	2,267	663	46	424	685	308	4,812	303,088	312,293	4.5	0.9
2009***	1,449	112	0	23	103	0	761	0	2,574	0.04	0
	방남 63명(가중치 x2점)										
2010	754	95	0	3	77	7	684	0	1,620	0.02	0
	방남 0명										
2011	0	44	3	0	133	2	946	0	1,156	0.02	0
	방남 14명 (사회문화 1명, 대북 지원 13명)										
2012	1	0	2	0	77	2	117	33	232	0	0
	방남 0명										
2013	0	9	0	41	53	0	35	74	292	0	0
	방남 40명 (사회문화 40명 가중치 x2점)										

구분 연도	이산 가족 (A)	교육 학술 (B)	문화 예술 (C)	체육 (D)	종교 (F)	언론 출판 (G)	대북 지원 (H)	관광 (I)	가중치 총점*	비율 (%) **	상대 점수
2014	760	100	6	0	186	0	63	33	1,880	0.03	0
	방남 366명 (사회문화 366명 가중치 x2점)										
2015	1,491	840	15	100	354	0	295	43	3,138	0.04	0
	방남 0명										
2016	방북 0명								0	0	0
	방남 0명										
2017	방북 52명								178	0	0
	방남 63명 (사회문화 63명 가중치 x2점)										

* 1989~1996년 기간은 분야별 통계가 없고 합계 통계만 있어 가중치 총점만 산출함

** 비율이 0.1% 이하인 경우는 0으로 처리하였음

*** 2009년부터 북한주민의 남한방문 자료에는 분야별 인원이 누락되고, 총 인원만 표시되어 있음

**** 2017년부터 남한주민의 북한방문 또한 분야별 인원이 누락되고, 총 인원만 표시 되어 있음

※ 자료출처 : 통일부, 주요사업 통계 참조

2) 공동 행사(교류협력사업)

- 공동행사 변인 상대점수는 방문 성사 1건당 1점을 부여하여 산출하되, 인적왕래와 마찬가지로 북한의 남한방문이 상대적으로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남한방문의 경우에는 건수에 2를 곱하는 가중치를 부여한다.
- 2017년 남북한 사회문화 공동행사는 방북 행사의 경우 0건, 0건, 종교 0건으로 총 0건이 성사되었다. 방남 행사 역시 0건으로 나타났다.
- 이상의 방북 행사 건수와 방남 행사 건수에 가중치를 부여한 결과, 총점은 0점이다.
- 연간 남북공동행사의 개최 건수의 기준점은 600건으로 하며, 상대점수는 공동행사 비율이 1% 변화할 때마다 0.2점이 가산되는 방식으로 산정한다.

- 따라서 2017년 공동행사 변인의 총점은 0점으로 전년과 같으며, 기준점 대비 비율은 0%이다. 최종적으로 상대점수로 전환했을 경우 2017년 공동행사 변인에 부여된 상대점수는 0점이다.

(표 2-48) 공동행사 변인 상대점수

구분 연도	교육 학술	문화 예술	체육	종교	언론 출판	가중치 총점	비율 (%)	상대 점수	
1989	0	0	0	0	0	0	0	0	
1990	0	0	0	0	0	0	0	0	
1991	0	0	0	0	0	0	0	0	
1992	0	0	0	0	0	0	0	0	
1993	0	0	0	0	0	0	0	0	
1994	0	0	0	0	0	0	0	0	
1995	0	0	0	0	0	0	0	0	
1996	0	0	0	0	0	0	0	0	
1997	1	0	0	3	3	7	1.2	0.2	
1998	6	6	0	10	10	32	5.3	1	
1999	1	7	65	9	2	84	14	2.8	
2000	2	9	51	9	12	83	13.8	2.8	
2001	13	10	39	11	11	84	14	2.8	
2002	15	19	45	17	9	105	17.5	3.6	
2003	24	11	24	22	21	102	17	3.4	
2004	19	12	6	24	21	82	13.7	2.8	
2005	32	19	29	68	75	223	37.2	7.4	
2006	37	25	36	58	61	217	36.2	7.2	
2007	85	32	77	119	44	357	59.5	12	
2008	57	14	30	58	35	194	32.3	6.4	
2009	9	0	2	15	0	(26)	36	6	1.1
	방남 5건(가중치 x2점)*					(10)			
2010	8	0	1	15	3	(27)	27	4.5	0.9
	방남 0건					0			
2011	7	1	0	13	1	(22)	24	4	0.8
	방남 1건(가중치 x2점)*					(2)			
2012	0	1	0	8	1	(10)	10	1.7	0.3
	방남 0건					(0)			

구분 연도	교육 학술	문화 예술	체육	종교	언론 출판	가중치 총점	비율 (%)	상대 점수	
2013	1	0	1	3	0	(4)	8	1.3	0.2
	방남 2건(가중치 x2점)*					(4)			
2014	8	2	0	12	0	(22)	32	5.3	1.0
	방남 5건(가중치 x2점)*					(10)			
2015	0	0	0	0	0	0	0	0	0
	방남 5건(가중치 x2점)*								
2016	0	0	0	0	0	0	0	0	0
	0								
2017	0					0	0	0	0
	0								

* 자료출처 : 통일부, 주요사업 통계 참조

3) 사회문화 교류협력 기금

- 2017년 사회문화영역에 정부가 지출한 남북협력기금¹⁸⁾은 인적왕래지원에 7,400만원, 사회문화협력지원에 36억 7,400만원, 이산가족교류지원에 6억 8,900만원, 인도적 지원(무상)에 13억 2,100만원으로 총 57억 5,800만원이다.
- 한국은행의 자료에 의하면¹⁹⁾, 2017년 한국의 실질 국내총소득(GNI)은 약 1,730.4조원으로 2017년 대비 사회문화영역에 지출한 남북협력기금의 비율은 0.000351311% 수준에 불과하다.

18) 통일부, “2017년 12월 남북협력기금 통계”, <http://www.korea.kr/archive/expDocView.do?docId=37857&group=S&pageIndex=1&pageUnit=20&startDate=&endDate=&srchKeyword=&srchCode=EDS0403003&codeLevel1=EDS04&codeLevel2=EDS0403&allChkYN=&srchStartDate=&srchEndDate=&srchWord=>

19) 한국은행, “2016년 국민계정(확정) 및 2017년 국민계정(잠정)”, <https://www.bok.or.kr/portal/bbs/P0000598/view.do?nttid=236729&menuNo=200454>

- 국민총소득(GNI) 대비 교류협력기금이 차지하는 비중 0.1%를 연간 사회문화 교류협력 기금의 기준점으로 하며, 상대점수는 교류협력기금 지출비율이 1% 변화할 때마다 0.2점이 가산되는 방식으로 산정된다.
- 기준점 대비 2017년 사회문화 교류협력 기금의 비율은 0.292%로 2016년 0.225%에 비해 0.0067%p 상승하였다. 최종적으로 2017년 사회문화 남북협력기금 변인에 부여된 상대점수는 0점이다.

(표 2-49) 사회문화 교류협력기금 변인 상대점수

구분 연도	남북교류협력기금 중 사회문화영역 지출액(억원)	GNI에서 차지하는 비중(%)	기준점과의 비교(%) (0.12=100)	상대점수
1989	0	0	0	0
1990	0	0	0	0
1991	0	0	0	0
1992	0	0	0	0
1993	0	0	0	0
1994	0	0	0	0
1995	1,824	0.03	25.0	3
1996	55	0.001	0.8	0
1997	191	0.003	2.5	0.6
1998	199	0.003	2.5	0.6
1999	343	0.005	4.2	0.8
2000	1,896	0.03	25.0	3
2001	1,182	0.02	16.7	3.4
2002	2,450	0.04	33.3	6.6
2003	3,110	0.05	41.7	8.4
2004	2,319	0.04	33.3	6.6
2005	3,904	0.06	50.0	10
2006	2,391	0.04	33.3	6.6
2007	4,032	0.06	50.0	10
2008	845	0.005	4.2	0.8
2009	345	0.003	2.5	0.6

구분 연도	남북교류협력기금 중 사회문화영역 지출액(억원)	GNI에서 차지하는 비중(%)	기준점과의 비교(%) (0.12=100)	상대점수
2010	233	0.002	1.7	0.3
2011	129	0.001	0.8	0
2012	52	0.0002	0.2	0
2013	174	0.0012	1.0	0
2014	212	0.0015	1.3	0
2015	133	0.00088	0.7	0
2016	46	0.00027	0.225	0
2017	58	0.00035	0.292	0

※ 출처 : 국가통계포털(www.kosis.kr), 통일부의 남북협력기금 통계, 한국은행의 2017년 국민계정(잠정)을 활용하여 재구성함.

4) 이산가족 상봉 상시화

- 연간 이산가족 상봉 인원수의 기준점은 13,000명으로 하며, 상대점수는 이산가족 상봉 비율이 1% 변화할 때마다 0.1점이 가산되는 방식으로 산정된다.
- 2017년에는 이산가족 교류가 없었다. 이산가족 상봉 수는 0명으로 상대점수(10점 만점)는 전년도와 동일하게 0점이다.

〈표 2-50〉 이산가족 상봉 변인 상대점수

구분 연도	이산가족 상봉 인원수	비율(%)	상대점수
1989	0	0	0
1990	0	0	0
1991	0	0	0
1992	0	0	0
1993	0	0	0
1994	0	0	0

구분 연도	이산가족 상봉 인원수	비율(%)	상대점수
1995	0	0	0
1996	0	0	0
1997	0	0	0
1998	1	0.01	0
1999	5	0.04	0
2000	348	2.7	0.3
2001	296	2.3	0.2
2002	1,479	11.4	1
2003	233	1.8	0.2
2004	1,624	12.5	1.2
2005	239	1.8	0.2
2006	2,127	16.4	1.6
2007	3,207	24.7	2.5
2008	2,267	17.4	1.7
2009	1,449	11.1	1.1
2010	754	5.8	0.6
2011	0	0	0
2012	1	0.01	0
2013	0	0	0
2014	760	5.8	0.6
2015	976	7.5	0.8
2016	0	0	0
2017	0	0	0

※ 출처 : 통일부, 『월간 이산가족현황』 각 해당 연호.

5) 인적 이동의 자유화

- 기존의 관광자유화 변인은 2009년 남북통합지수부터 인적 이동의 자유화 변인으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기존의 인적 이동의 자유화 변인은 관광분야의 인적 이동과 경제분야의 인적 이동을 합한 것이었으나, 2014년부터는 탈북자 입국 수가 추가되었다.

- 인적 이동의 자유화는 남북한 주민의 지역 간 인적 이동이 얼마나 자유롭게 이루어지는가를 측정한다.
- 남한주민의 북한 방문에 비해 북한주민의 남한 방문은 상대적으로 힘들기 때문에 가중치(×2)를 부여한다.
- 2017년 남북 인적교류는 115명으로 전년의 14,787명 대비 99.2% 감소하였으며, 남북화물 물동량은 0톤으로 전년 53.2만톤 대비 100% 감소하였다. 이는 2016년 2월 개성공단 가동 중단 이후 이를 통한 남북간 인적 및 물적 왕래의 통로가 봉쇄된 것에 기인한다.
- 관광 분야의 인적 이동은 2008년 금강산 관광객의 피살 사건으로 금강산 관광이 중단되고 그해 11월에 개성관광마져 중단된 이후 2009년~2011년 기간 동안 3년 연속 0명이었다가 2012년 이후 다시 수십명 수준으로 증가하였으나 2016년 다시 0명이 되었다. 2017년도 0명이다.
- 탈북자 입국 수의 경우 2012년부터 감소하여 2017년에는 1,127명이다.
- 연간 인적 이동의 자유화 기준점은 700만 명으로 하며, 상대점수는 이동 인원의 비율이 1% 변화할 때마다 0.2점이 가산되는 방식으로 산정된다. 따라서 2017년 인적 이동 자유화 변인의 상대점수는 2017년과 동일하게 0점이다.

〈표 2-51〉 인적 이동 자유화 변인 상대점수

연도	구분	관광분야 인적 이동	경제분야 인적 이동		탈북자 입국 수	소계	비율(%)	상대점수
			방북	방남*				
1989		0	-	-	-	-	0	0
1990		0	-	-	-	-	0	0
1991		0	-	-	-	-	0	0
1992		0	-	-	-	-	0	0
1993		0	-	-	-	-	0	0
1994		0	-	-	-	-	0	0
1995		0	-	-	-	-	0	0
1996		0	-	-	-	-	0	0
1997		0	-	-	-	-	0	0
1998		10,554	2,193	0	-	12,747	0	0
1999		148,008	2,288	0	-	150,296	0	0
2000		212,247	2,800	15	-	215,062	0	0
2001		57,285	1,162	19	-	58,466	0	0
2002		84,347	2,762	115	1,142	88,366	1.3	0.2
2003		73,922	5,208	82	1,285	80,497	1.2	0.2
2004		266,223	18,250	120	1,898	286,491	4.1	0.8
2005		301,153	69,682	50	1,384	372,269	5.3	1.1
2006		234,446	87,845	13	2,028	324,332	4.6	0.9
2007		352,433	130,006	213	2,554	485,206	6.9	1.3
2008		303,088	176,970	78	2,803	482,939	6.9	1.3
2009		0	118,303	183	2,914	121,583	1.7	0.3
2010		0	128,346	132	2,402	131,012	1.9	0.3
2011		0	114,919	0	2,706	117,625	1.7	0.3
2012		33	120,128	0	1,502	121,664	1.7	0.3
2013		74	75,990	0	1,514	77,578	1.1	0.2
2014		33	126,014	0	1,397	127,444	1.8	0.3
2015		0	128,566	0	1,276	129,842	1.9	0.3
2016		0	14,786	0	1,418	16,204	0	0
2017		0	52	63	1,127	1,242	0	0

* 북한의 남한방문은 x2점 가중치 부여

** 2017년 8월 이후 「월간 남북교류협력동향」의 폐간으로 분야별 방문인원을 파악하기 어려움.

※ 자료출처 : 통일부, 주요사업 통계 참조

6) 언론·방송의 자유화

- 남북한 사회문화 통합에서 언론·방송부문의 자유화 변인은 일방향 교류, 쌍방향 교류, 제한적 자유화, 전면적 자유화로 나뉘며, 또 각 세부 지표는 모색, 제도화, 활성화로 하위 평가 단계를 가진다. 각 지표와 배점에 대한 세부 사항은 아래의 표와 같다.
- 2008년 10월에 제4차 남북언론인대표자회의에서 기사교류에 관한 합의서를 채택하여 쌍방향 교류의 제도화 단계에 진입하였지만, 이후 남북관계의 경색으로 제도를 활성화시키는 단계까지는 진전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2017년 언론방송의 자유화 변인의 상대점수는 2008년 이후 9년 연속 8점을 유지하고 있다.

〈표 2-52〉 언론·방송의 자유화 변인 지표와 배점

언론·방송의 자유화 (20점)	세부지표	일방향 교류	쌍방향 교류	제한적 자유화	전면적 자유화
	배점	5	10	15	20
	세부배점	모색(1) 제도화(3) 활성화(5)	모색(6) 제도화(8) 활성화(10)	모색(11) 제도화(13) 활성화(15)	모색(16) 제도화(18) 활성화(20)

〈표 2-53〉 언론·방송의 자유화 변인 점수

구분 연도	언론·방송의 자유화 수준		자유화 점수
1989	방송, 신문에서 북한·통일 관련 고정 프로그램, 지면 마련 (예: KBS의 '남북의 창' 등)	일방향 교류의 모색 단계	1
1990		"	1
1991		"	1
1992		"	1
1993		"	1
1994		"	1

구분 연도	언론·방송의 자유화 수준		자유화 점수
1995		"	1
1996		"	1
1997		"	1
1998	통일부 '남북교류협력법' 시행령 개정, 북한 영상물의 국내 반입 허가	일방향 교류의 제도화 단계	3
1999		"	3
2000	6.15남북공동선언 채택, 언론·방송 교류 활성화	일방향 교류의 활성화 단계	5
2001		"	5
2002		"	5
2003		"	5
2004		"	5
2005	남북언론교류협력위원회 공식 발족	쌍방향 교류의 모색 단계	6
2006		"	6
2007		"	6
2008	남북언론인대표자회의 개최: 기사교류합의	쌍방향 교류의 제도화 단계	8
2009		"	8
2010		"	8
2011		"	8
2012		"	8
2013		"	8
2014		"	8
2015		"	8
2016		"	8
2017		"	8

7) 국제대회 공동개최·단일팀 구성

- 2017년에 남북한이 공동으로 개최하거나 단일팀으로 참가한 국제대회는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 2016년과 마찬가지로 전혀 없어 0점이 부여된다.

〈표 2-54〉 주요 국제대회 공동개최·단일팀 구성 변인 상대점수

구분 연도	국제대회 공동개최	단일팀·공동입장	총점	상대점수
1989	0	0	0	0
1990	0	0	0	0
1991	0	2	2	2
1992	0	0	0	0
1993	0	0	0	0
1994	0	0	0	0
1995	0	0	0	0
1996	0	0	0	0
1997	0	0	0	0
1998	0	0	0	0
1999	0	0	0	0
2000	0	1	1	1
2001	0	0	0	0
2002	0	0	0	0
2003	0	0	0	0
2004	0	1	1	1
2005	0	0	0	0
2006	0	0	0	0
2007	0	0	0	0
2008	0	0	0	0
2009	0	0	0	0
2010	0	0	0	0
2011	0	0	0	0
2012	0	0	0	0
2013	0	0	0	0
2014	0	0	0	0
2015	0	0	0	0
2016	0	0	0	0
2017	0	0	0	0

※ 자료출처 : 통일부, 주요사업 통계 참조

8) 사회문화 교류협력 정례화 및 공동협의기구

- 사회문화 교류협력 정례화 및 공동협의기구 변인은 사회문화 교류협력 관련 당국자 회담(10점 만점), 공동협의기구[매개기구] 구성(10점 만점), 공동협의기구의 상시적 운용(10점 만점)으로 구성된다.
- 단, 합의서의 경우는 구속력을 가지기 때문에 가중치 2점을, 공동보도문의 경우는 구속력이 약하기 때문에 1.5점의 가중치를 부여한다. 따라서 당국자 회담 총점의 산출방식은 “회담 수+합의서 채택수×2+공동보도문×1.5”이다.
- 2017년에는 사회문화분야의 당국자 회담이 개최되지 않았다. 당국자 회담 총점은 0점이다.
- 남북당국자 회담의 상대점수는 연간 남북 당국자 간 회담의 기준점을 24 회로 하고 상대점수를 회담 비율 1%가 변화할 때마다 0.1점이 가산되는 방식으로 산정한다. 당국자 간 회담 상대점수는 0점으로 2016년과 동일하다.

〈표 2-55〉 사회문화 교류협력 당국자 회담 상대점수

구분 연도	회담 (A)	합의서 (B)	합의서 가중치 (C=B*2)	공동보도문 (D)	공동보도문 가중치 (E=D*1.5)	총점 (A+C+E)	비율 (%)	상대 점수
1989	9	0	0	0	0	9	37.5	3.8
1990	7	0	0	0	0	7	29.2	3
1991	7	4	8	0	0	15	62.5	6.3
1992	0	0	0	0	0	0	0	0
1993	0	0	0	0	0	0	0	0
1994	0	0	0	0	0	0	0	0
1995	0	0	0	0	0	0	0	0

구분 연도	회담 (A)	합의서 (B)	합의서 가중치 (C=B*2)	공동보도문 (D)	공동보도문 가중치 (E=D*1.5)	총점 (A+C+E)	비율 (%)	상대 점수
1996	0	0	0	0	0	0	0	0
1997	0	0	0	0	0	0	0	0
1998	0	0	0	0	0	0	0	0
1999	0	0	0	0	0	0	0	0
2000	0	0	0	0	0	0	0	0
2001	0	0	0	0	0	0	0	0
2002	2	1	2	0	0	4	16.7	1.7
2003	1	1	2	0	0	3	12.5	1.3
2004	1	1	2	0	0	3	12.5	1.3
2005	6	2	4	1	1.5	11.5	47.9	4.8
2006	3	0	0	0	0	3	12.5	1.3
2007	6	0	0	3	4.5	10.5	43.8	4.4
2008	1	1	2	0	0	3	12.5	1.3
2009	2	1	2	0	0	4	16.7	1.7
2010	4	1	2	0	0	6	25	2.5
2011	0	0	0	0	0	0	0	0
2012	0	0	0	0	0	0	0	0
2013	1	1	2	0	0	3	12.5	1.3
2014	2	0	0	0	0	2	8.3	0.9
2015	1	1	2	0	0	3	12.5	1.3
2016	0	0	0	0	0	0	0	0
2017	0	0	0	0	0	0	0	0

* 출처 : 통일부 남북회담본부, "회담통계" (<http://dialogue.unikorea.go.kr>)

- 공동협의기구의 경우는 구성에 10점이 배점되고, 기구가 상시적으로 운영될 경우 10점이 추가 배점된다.
- 최종적으로, 2017년 사회문화 교류협력 정례화 및 공동협의기구 변인에 부여되는 상대점수는 10점이다.

〈표 2-56〉 사회문화 교류협력 정례화 및 공동협의기구 변인 종합점수

구분 연도	당국자 회담 (10점 만점)	공동협의기구 구성 (10점 만점)	공동협의기구의 상시적 운용 (10점 만점)	종합점수 (30점 만점)
1989	3.8	0	0	3.8
1990	3	0	0	3
1991	6.3	0	0	6.3
1992	0	10	5*	15
1993	0	0	0	0
1994	0	0	0	0
1995	0	0	0	0
1996	0	0	0	0
1997	0	0	0	0
1998	0	0	0	0
1999	0	0	0	0
2000	0	0	0	0
2001	0	0	0	0
2002	1.7	0	0	1.7
2003	1.3	0	0	1.3
2004	1.3	0	0	1.3
2005	4.8	0	0	4.8
2006	1.3	0	0	1.3
2007	4.4	10	0	14.4
2008	1.3	10	0	11.3
2009	1.7	10	0	11.7
2010	2.5	10	0	12.5
2011	0	10	0	10
2012	0	10	0	10
2013	1.3	10	0	11.3
2014	0.9	10	0	10.9
2015	1.3	10	0	11.3
2016	0	10	0	10
2017	0	10	0	10

* 1992년 공동협의기구의 상시적 운용에서 5점을 부여한 것은 1992년 3월~10월까지 총 6차례의 '사회문화교류협력공동위원회'가 개최된 바 있어 매년 12회(10점 만점) 개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함

라. 종합

- 최종적으로 사회문화영역 구조통합지수는 제도통합지수와 관계통합지수를 합하여 산출한다. 그리고 앞에서 제시한 단계별 배점 기준에 따라 사회문화영역의 구조통합 수준을 단계로 제시한다.
- 제도적 통합지수 16점과 관계적 통합지수 18점을 합하여 최종적으로 산출한 2017 사회문화영역 구조통합지수는 34 이다. 이 수치는 단계별 배점 기준에 따라 2단계(21-40점)에 해당된다. 2단계는 교류가 비정기적으로 이루어지지만 상대적으로 1단계에 비해 접촉빈도가 높은 상태를 의미한다.
- 2017년 구조통합지수는 2016년 33.6점에 비해 0.4점 상승하였다.

〈표 2-57〉 사회문화영역 구조통합지수 종합

연도	제도적 통합 (90)			관계적 통합 (160)								제도 · 관계 통합 지수 (합계)	통합 단계 (250)
	공동 집행 기구 (30)	단일 제도 화 (30)	공동 법제 화 (30)	인적 왕래 (20)	공동 행사 (20)	교류 협력 기금 (20)	이산 가족 상봉 상시화 (10)	인적 이동 자유 화 (20)	언론/ 방송 자유화 (20)	국제대회 공동개최 · 단일팀 (20)	정 례 화 (30)		
1989	0	0	1.1	0	0	0	0	0	1	0	3.8	5.9	0단계
1990	0	0	1.1	0	0	0	0	0	1	0	3	5.1	0단계
1991	0	0	1.1	0	0	0	0	0	1	2	6.3	10.4	0단계
1992	0	0	1.3	0	0	0	0	0	1	0	15	17.3	1단계
1993	0	0	1.5	0	0	0	0	0	1	0	0	2.5	0단계
1994	0	0	1.6	0	0	0	0	0	1	0	0	2.6	0단계
1995	0	0	1.9	0	0	3	0	0	1	0	0	5.9	0단계
1996	0	0	2.2	0	0	0	0	0	1	0	0	3.2	0단계
1997	0	0	3.2	0	0.2	0.6	0	0	1	0	0	5.0	0단계

연도	제도적 통합 (90)			관계적 통합 (160)								제도 · 관계 통합 지수 (합계)	통합 단계 (250)
	공동 집행 기구 (30)	단일 제도 화 (30)	공동 법제 화 (30)	인적 왕래 (20)	공동 행사 (20)	교류 협력 기금 (20)	이산 가족 상봉 상시화 (10)	인적 이동 자유 화 (20)	언론/ 방송 자유화 (20)	국제대회 공동개최 · 단일팀 (20)	정 례 화 (30)		
1998	0	0	6.9	0	1	0.6	0	0	3	0	0	11.5	1단계
1999	0	0	7.0	0.4	2.8	0.8	0	0	3	0	0	14	1단계
2000	0	0	7.1	0.6	2.8	3	0.3	0	5	1	0	19.8	1단계
2001	0	0	7.2	0.2	2.8	3.4	0.2	0	5	0	0	18.8	1단계
2002	0	0	7.2	0.2	3.6	6.6	1	0	5	0	1.7	25.3	2단계
2003	0	0	7.4	0.2	3.4	8.4	0.2	0	5	0	1.3	25.9	2단계
2004	0	0	7.5	0.8	2.8	6.6	1.2	0.8	5	1	1.3	27.0	2단계
2005	0	0.9	7.5	0.9	7.4	10	0.2	1.1	6	0	4.8	38.8	2단계
2006	0	1.7	7.5	0.8	7.2	6.6	1.5	0.9	6	0	1.3	33.5	2단계
2007	0	2.6	9.1	1	12	10	2.5	1.4	6	0	14.4	59.0	3단계
2008	0	3.5	9.1	0.9	6.4	0.8	1.7	1.4	8	0	11.3	43.1	3단계
2009	0	5	9.2	0	1.1	0.6	1.1	0.3	8	0	11.7	37.0	2단계
2010	0	5.7	8.2	0	0.9	0.3	0.6	0.3	8	0	12.5	36.6	2단계
2011	0	5.7	8.3	0	0.8	0	0	0.3	8	0	10	33.1	2단계
2012	0	5.7	8.3	0	0.3	0	0	0.3	8	0	10	32.6	2단계
2013	0	5.7	9.1	0	0.2	0	0	0.4	8	0	11.3	34.7	2단계
2014	0	7.7	8.9	0	1.0	0	0.6	0.5	8	0	10.9	37.6	2단계
2015	0	7.2	8.3	0	0	0	0.8	0.3	8	0	11.3	35.9	2단계
2016	0	7.2	8.4	0	0	0	0	0	8	0	10	33.6	2단계
2017	0	7.2	8.8	0	0	0	0	0	8	0	10	34.0	2단계

※ 주 : 괄호 ()안의 수치는 각 지표의 만점의 수치를 나타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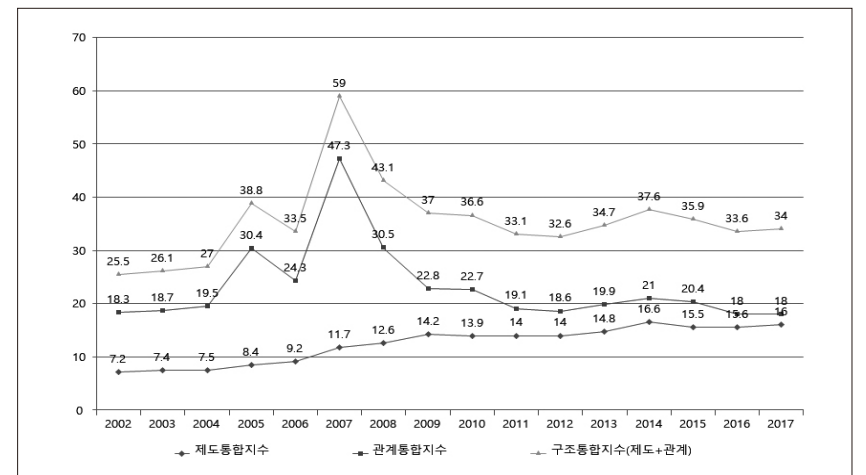
〈표 2-58〉 사회문화영역 구조통합지수 연도별 추이

연도	제도적 통합	관계적 통합	구조통합지수
1989	1.1	4.8	5.9
1990	1.1	4	5.1
1991	1.1	9.3	10.4
1992	1.3	16	17.3
1993	1.5	1	2.5
1994	1.6	1	2.6
1995	1.9	4	5.9
1996	2.2	1	3.2
1997	3.2	1.8	5.0
1998	6.9	4.6	11.5
1999	7.0	7.4	14.4
2000	7.1	13.3	20.4
2001	7.2	11.6	18.8
2002	7.2	18.3	25.5
2003	7.4	18.7	26.1
2004	7.5	19.5	27.0
2005	8.4	30.4	38.8
2006	9.2	24.3	33.5
2007	11.7	47.3	59.0
2008	12.6	30.5	43.1
2009	14.2	22.8	37.0
2010	13.9	22.7	36.6
2011	14.0	19.1	33.1
2012	14.0	18.6	32.6
2013	14.8	19.9	34.7
2014	16.6	21.0	37.6
2015	15.5	20.4	35.9
2016	15.6	18.0	33.6
2017	16.0	18.0	34.0

〈표 2-59〉 2017년 사회문화 구조통합지수 변화부문 지수 비교

통합영역	지표	2016년	2017년	증감	요인
제도적 통합	공동집행기구	0	0		전년대비 변화 없음
	단일 제도화	7.2	7.2		방송통신기술의 표준화 수준 변화없음
	공동 법제화	8.4	8.8	+0.4	전문가조사 결과 공동법제화 수준 상승함
관계적 통합	인적 왕래	0	0		전년대비 변화 없음
	공동행사	0	0		공동행사가 전혀 없었음
	사회문화교류 협력기금집행	0	0		전년대비 변화 없음
	이산가족 상봉의 상시화	0	0		이산가족 상봉이 없었음
	인적 이동의 자유화	0	0		전년대비 변화 없음
	언론방송의 자유화	8	8		전년대비 변화 없음
	국제대회 공동개최, 단일팀 구성	0	0		전년대비 변화 없음
	교류협력 정례화 및 공동협의기구	10	10		전년대비 변화 없음
	계		33.6	34	+0.4

〈그림 2-4〉 사회문화 구조통합지수 연도별 추이



2장. 의식통합지수

1. 지수구성

의식통합지수는 정치, 경제, 사회문화영역으로 나뉘고, 총배점은 250점이다. 정치영역과 경제영역의 의식통합에는 각각 80점씩 부과되고 사회문화영역의 의식통합에는 90점이 부과된다. 사회문화영역의 배점이 더 큰 이유는 사회문화영역이 사회통합의 본질이자 정치·경제영역의 통합의 결과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각 영역별 의식통합지수의 변인과 배점에 대한 세부 사항은 아래의 표와 같다.

〈표 3-1〉 의식통합지수 변인과 배점

영역	변인	배점	
정치 영역	남북한 공통	통일의 필요성	20
		상대방에 대한 관계 인식	10
		상대방의 무력도발 가능성 인식	20
		남북간 정치제도(선거방식, 법률제도) 차이 인식	20
		상대방에 대한 인지도	10
	소계	80	
경제 영역	남한	통일이 남한 혹은 자신에게 이익이 되는 정도	20
		인도적 자원과 남북한 경제협력의 통일기여도	10
		대북 지원의 증감에 대한 의견	10
경제 영역	북한	북한 체제에 대한 평가와 시장경제에 대한 우호도	15
		개혁의 성과와 대북 지원 대한 인지도	15
		대북 투자와 사업에 대한 우호도	10
	소계	80	

영역	변인	배점	
사회 문화 영역	남북한 공통	상대방의 사회문화에 대한 인지수준	10
		상대방의 사회문화에 대한 수용의식	20
		상대방에 대한 적대감 해소	20
		사회문화양식의 동질성	20
		통일 이후 사회평등 기대수준	20
	소계	90	
합계		250	

남북한 주민의 의식통합 수준을 측정하기 위한 방법으로 남북한 주민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다. 2018년 남북통합지수에 활용한 설문조사 데이터는 남한주민의 경우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이 2018년 7월 3일~7월 28일에 전국 16개 시도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 75세 이하의 성인남녀 1,200명을 유효표본으로 실시한 “2018 통일의식조사”의 자료이고,²⁰⁾ 북한주민의 경우 동 기관이 2018년에 남한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만 18세 이상의 북한이탈주민 87명을 유효표본으로 실시한 “2018 북한이탈주민 의식조사”의 자료이다.²¹⁾

북한주민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는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간접 조사 방식으로 실시된다. 북한주민 통일의식조사는 2008년부터 시작되어 2018년까지 총 10차례(2008년, 2009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에 걸쳐 실시되었다.

2008년과 2009년의 조사는 하나월에 입소해 있는 북한이탈주민(만 19세 이상의 성인남녀)을 대상으로 진행되었다. 하지만 2008년과 2009년 조사의 경우 설문조사에 참여하는 북한이탈주민들의 탈북연도가 일치되지 않고

20) 정근식 외 공저, 「2017 통일의식조사」 (서울: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2018) 참조

21) 북한주민(탈북자) 의식조사에 대해서는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2018 북한사회변동과 주민의식」,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주최 국내학술회의(2018년 10월 30일) 참조. 이 조사는 탈북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설문지 준거 시점을 조사 시기보다 1년 전으로 설정하고 있다. 예를 들어, 2017년에 실시된 조사의 경우 설문지 준거 시점은 2016년이다.

다양하다는 점에서 측정되는 의식의 기준연도 편차가 크다는 한계점을 갖고 있다.

기존 조사의 표본이 갖고 있는 한계점을 극복하기 위해 2011년의 조사부터는 직전 연도에 북한을 나온 사람들로 한정하여 표본을 구성하였다. 따라서 2018년의 조사에 참여한 북한이탈주민 87명 모두는 2017년 1월~12월까지 북한지역에 거주하다 남한에 입국한 북한주민들이다.

2. 영역별 지수

가. 경제

경제영역의 의식통합지수의 변인과 배점은 다음과 같다.

〈표 3-2〉 경제영역 의식통합 변인과 배점

변인		배점(남한)
남한주민 설문내용	통일이 남한 혹은 자신에게 이익이 되는 정도	20
	인도적 지원과 남북한 경제협력의 통일기여도	10
	대북 지원에 대한 선호도	10
북한주민 설문내용	북한 체제에 대한 평가와 시장경제에 대한 우호도	15
	대북 지원에 대한 인지도 및 우호도	15
	대북 투자와 사업에 대한 우호도	10

1) 남한주민 지표별 응답율과 상대점수

가) 통일이 남한과 자신에게 이익이 되는 정도

통일에 대한 집단적 이익 기대감의 긍정 응답률은 2017년 52.1%으로 전년대비 0.9% 포인트 감소하였다 2014년과 2015년에 큰 폭으로 상승하여 50% 후반까지 기록하였던 긍정 응답률은 2016년에 하락세로 돌아선 후 2년 연속 하락하여 50% 초반대를 유지하고 있다.

개인적 이익 기대감의 긍정 응답률 역시 23.9%를 기록하여 2016년 24.6%에 비해 0.7% 포인트 감소하였다. 최근의 추세는 집단적 이익 기대감의 응답률과 유사한 패턴을 보이고 있다. 2013년 21.8%로 최저점을 기록한 뒤 2014년과 2015년에 2년 연속 상승하였으나 2016년과 2017년에 다시 2년 연속 하락하여 최저점에 근접하고 있다.

정리하면, 통일 편익에 대한 기대감은 2016년의 하락세를 이어갔으며 상대점수는 2016년 대비 0.2점 하락한 7.6점이다.

〈표 3-3〉 통일이 남한과 자신에게 이익이 되는 정도에 대한 응답률과 상대점수

	질문과 응답	응답률(%)	상대점수
2012	질문: "통일이 남한에 얼마나 이익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응답: "매우 이익이 될 것이다"와 "다소 이익이 될 것이다" 택	51.6	7.8/20
	질문: "통일이 자신에게 얼마나 이익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응답: "매우 이익이 될 것이다"와 "다소 이익이 될 것이다" 선택	26.0	
2013	"	48.6	7.0/20
	"	21.8	
2014	"	55.5	8.2/20
	"	26.7	
2015	"	57.4	8.5/20
	"	28.0	
2016	"	53.0	7.8/20
	"	24.6	
2017	"	52.1	7.6/20
	"	23.9	

나) 남한 주민의 남북 경제교류에 대한 평가

2016년 조사에서 금강산 관광, 개성공단 등 ‘남북경제협력’에 대해서는 52.5%가 ‘통일에 도움이 된다’고 답하였고, 쌀, 비료, 의약품 지원 등 ‘인도적 지원’에 대해서는 41.8%가 ‘통일에 도움이 된다’고 답하여, 두 질문 모두에서 긍정적 응답이 2015년 대비 큰 폭으로 감소하였다.

2017년 조사에서는 각 정책이 ‘통일에 도움이 되는’ 정도를 묻는 질문에서 각 정책이 ‘통일을 위해 시급한’ 정도를 묻는 질문으로 바뀌었다. 동 조사에서 ‘남북경제협력’, ‘인도적 지원’에 대한 긍정 응답비율은 62.5%, 43.3%로 전년대비 각각 10.0% 포인트, 1.5% 포인트씩 증가하였으며, 이에 따라 상대점수도 전년대비 0.6점 상승한 5.3점을 기록하였다.

북한이 2017년 수 차례에 걸쳐 핵 실험과 미사일 실험을 감행하여 남북 관계가 악화 일로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남북 경제 교류에 대한 긍정적 평가가 증가한 것은 인상적이다. 그러나 2016년까지의 질문과 2017년의 질문의 의미상 차이가 존재하기 때문에 이 결과만으로 남북 경제 교류에 대한 지지도가 증가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표 3-4〉 남한 주민의 남북 경제교류에 대한 평가

	질문과 응답	응답률(%)	상대점수
2012	질문: “금강산 관광, 개성공단 사업 등 남북한 경제협력이 통일을 이루는 데 얼마나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응답: “매우 도움이 된다”와 “다소 도움이 된다” 선택	65.3	5.9/10
	질문: “쌀, 비료, 의약품 지원 등 인도적 대북 지원이 통일을 이루는데 얼마나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응답: “매우 도움이 된다”와 “다소 도움이 된다” 선택	53.4	
2013	“	61.8	5.4/10
	“	46.3	
2014	“	62.2	5.5/10
	“	46.9	

2015	“	65.4	5.8/10
	“	50.3	
2016	“	52.5	4.7/10
	“	41.8	
2017	질문: “남북한 경제협력이 통일을 이루기 위해 얼마나 시급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응답: “매우 시급하다”와 “다소 시급하다” 선택	62.5	5.3/10
	질문: “인도적 대북 지원이 통일을 이루기 위해 얼마나 시급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응답: “매우 시급하다”와 “다소 시급하다” 선택	43.3	

다) 대북 지원에 대한 선호

과거에 지수 산출을 위해 사용되었던 설문 문항이 통일외교조사에서 다른 문항으로 변경됨에 따라 2017년에는 본 항목을 “대북지원이 북한의 개혁 개방에 도움이 되는지의 여부”에 대한 긍정적 응답과 “북핵문제가 해결되기 전에는 남북교류협력을 중단해야 한다”는 질문에 대한 부정적 응답의 비중의 평균을 구하여 산출한다.

2013년부터 본 항목은 “대북지원이 북한주민의 생활에 도움이 되는지의 여부”에 관한 질문과 “대북 지원을 위해서는 북핵문제 해결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질문을 활용하여 지수를 산출하여 왔다.

그러나 2016년에는 “대북지원을 위해서는 북핵문제 해결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질문이 “북핵문제가 해결되기 전에는 남북교류협력을 중단해야 한다”는 질문으로 대체되었으며, 뒤이어 2017년에는 “대북지원이 북한주민의 생활에 도움이 되는지의 여부”에 대한 질문이 “대북지원이 북한의 개혁개방에 도움이 되는지의 여부”에 대한 질문으로 대체되었다.

2017년 대북 지원 선호 정도에 대한 점수는 3.7점으로 2016년보다 0.3점 증가하였다. 그러나 2016년까지의 질문과 2017년의 점수가 서로 다른 질문을 사용하여 산출되었으므로 이 결과만으로 대북 지원에 대한 선호도가 증가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표 3-5〉 대북 지원의 선호 정도에 대한 응답률과 상대점수

	질문과 응답	응답률(%)	상대점수
2012	질문: "현재의 대북 지원을 얼마나 늘려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혹은 줄여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응답: "대폭 늘려야 한다"와 "조금 늘려야 한다" 선택	22.3	2.2/10
2013 ^a	질문: (1) "대북 지원이 북한주민의 생활에 얼마나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혹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십니까?" (2) "북핵문제가 해결되기 전에는 대북지원을 하지 말아야 한다는 의견에 얼마나 찬성 또는 반대하십니까?" 응답: (1)에서 "매우 도움이 된다"와 "약간 도움이 된다" 선택한 사람과 (2)에서 "다소 반대"와 "매우 반대"를 택한 사람의 평균을 구함	27.4	2.7/10
2014	"	32.8	3.3/10
2015	"	32.5	3.3/10
2016	질문: (1) 상동, (2) "북핵 문제가 해결되기 전에는 남북 교류협력을 중단해야 한다는 의견에 얼마나 찬성 또는 반대하십니까?" 응답: (1)에서 "매우 도움이 된다"와 "약간 도움이 된다" 선택한 사람과 (2)에서 "다소 반대"와 "매우 반대"를 택한 사람의 평균을 구함	34.2	3.4/10
2017	질문: (1) "북한의 개혁 개방에 인도적 대북지원이 얼마나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2) 상동 응답: (1)에서 "매우 도움이 된다"와 "약간 도움이 된다" 선택한 사람과 (2)에서 "다소 반대"와 "매우 반대"를 택한 사람의 평균을 구함	37.1	3.7/10

a. 2009년부터 2012년까지 지수를 산출하는데 사용되었던 설문 문항이 2013년부터 '통일의식조사' 에서 삭제됨에 따라 해당 질문으로 대체. 2013년 때와 같은 방식으로 과거연도의 지수를 산출하였을 경우는 다음과 같음 : 2012년 3.2점

2) 북한주민 지표별 응답률과 상대점수

가) 북한 체제에 대한 평가와 시장경제에 대한 우호도

자본주의 체제에 대한 지지는 2017년 59.8%로 전년대비 12.2% point 감소하였다. 2014년 76.6%로 최고점을 기록한 뒤 2015년부터 하락하기 시작하여 3년 연속 하락 추세를 이어 갔으며 2017년에는 상당히 큰 폭으로 하락하여 조사 시작 이래 가장 낮은 자본주의 지지도를 나타내었다.

한편, 북한경제가 어려워진 이유로 '개혁·개방을 하지 않았기 때문'을 선택한 비율은 19.5%로 작년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였다. 이 역시 자본주의 지지도와 비슷한 추세를 보여 2014년 28.7%로 가장 높은 비율을 나타낸 뒤 3년 연속 하락하여 20% 안팎의 수치를 유지하고 있다.

2017년에 '시장경제에 대한 우호도'와 '북한 내부의 개혁·개방 필요성' 대한 답변이 모두 하락한 것은 북핵을 둘러싼 동북아 정세의 긴장과 제재의 심화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이 경제 정책이나 경제 체제의 실패에 기인하기 보다는 국제 정치적 상황에 의한 것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커진 것이라고 판단된다.

이에 따라, 북한체제 평가 및 시장경제 부문의 상대점수는 2016년의 6.9점에서 2017년 5.9점으로 1.0점 하락하였다.

〈표 3-6〉 북한체제 평가와 시장경제 우호도 응답률과 상대점수

	질문과 응답	응답률(%)	상대점수
경제영역	질문: "귀하는 북한에 계실 때 사회주의 경제(계획경제)와 자본주의 경제(시장경제, 개인소유경제) 중 어느 것을 더 지지했습니까?" 응답: "자본주의 지지" 선택	72.1	7.0/15
	질문: "귀하는 북한의 경제가 어렵게 된 이유가 무엇 때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응답: "개혁개방을 하지 않았기 때문" 선택	21.8	
2013	"	75.1	7.0/15
	"	18.1	
2014	"	76.6	7.9/15
	"	28.7	

	질문과 응답	응답률(%)	상대점수
2015	"	75.9	7.3/15
	"	21.3	
2016	"	72.0	6.9/15
	"	19.7	
2017	"	59.8	5.9/15
	"	19.5	

나) 대북지원에 대한 인지도와 우호도

‘남한의 지원여부에 대한 인지’ 및 ‘긍정적 평가’는 서로 상반된 경향을 보여주고 있다.

‘남한의 대북 지원 여부를 북한주민이 알고 있냐’는 설문에서는 56.3%가 있다고 답해 전년 53.1%보다 소폭 상승한 수치를 기록하였다. 남북 교류가 전면 중단된 현실에도 불구하고 2015년과 2016년 2년 연속 대북 지원 인지도가 큰 폭으로 하락했던 것의 기저효과로 인해 소폭 반등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 반해 남한의 대북 지원에 대한 긍정적 평가는 2016년 74.2%에서 2017년 65.5%로 대폭 하락하였다. 북한 주민들 역시 남북 관계 경색의 영향을 받았을 것으로 짐작되며, 대북지원 사실을 알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혜택이 주민들에게까지 주어진다고 인식하지 못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종합하면, ‘대북 지원에 대한 긍정적 평가’의 하락이 대북 지원에 대한 상대점수 하락을 주도하여 전년보다 0.4점 하락한 9.1점을 기록하였다.

〈표 3-7〉 대북 지원에 대한 응답률과 상대점수

	질문과 응답	응답률(%)	상대점수
2012	질문: “귀하는 북한주민들이 남한이 쌀, 비료 등을 북한에 지원 하는 있다는 것을 얼마나 알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응답: “매우 잘 알고 있다.” 혹은 “조금 잘 알고 있다.” 선택	66.2	10.8/15
	질문: “귀하는 북한 주민들이 남한의 대북 지원에 대해 어떻게 받아들인다고 생각하십니까?” 응답: “매우 긍정적으로 생각한다.” 혹은 “약간 긍정적으로 생각한다.” 선택	77.5	
2013	"	62.4	10.2/15
	"	73.0	
2014	"	71.3	10.9/15
	"	74.6	
2015	"	63.0	10.4/15
	"	75.0	
2016	"	53.1	9.5/15
	"	74.2	
2017	"	56.3	9.1/15
	"	65.5	

다) 남한기업의 대북 투자에 대한 우호도

남한기업의 대북 투자 사업에 대한 우호도는 2011년 첫 조사 당시 87.7%라는 높은 수치를 나타내었으나 이후 꾸준히 하락하여 2014년부터 70% 대를 기록하여 왔다. 2017년에도 이러한 추세는 계속되어 전년대비 3.7% 하락한 66.7%를 기록하였다. 남한의 대북투자에 대한 북한 주민들의 인식이 악화되는 원인은 2010년 이후 남한 민간 기업의 대북 사업이 전무한 상황에서 일반 북한 시민들에게 그 존재감이 미미한데다가 최근 대북제재 국면에서 전반적인 대남인식이 좋지 않기 때문인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이에 대북투자 우호도 부문의 상대점수는 전년 7.0점보다 0.3점 하락한 6.7점을 기록하였다.

〈표 3-8〉 대북 투자와 사업에 대한 우호도 응답률과 상대점수

	질문과 응답	응답률(%)	상대점수
2012	질문: "귀하는 북한에 대한 남한의 경제 투자를 북한 주민들이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응답: "매우 잘 긍정적으로 생각한다." 혹은 "약간 긍정적으로 생각한다." 선택	85.7	8.6/10
2013	"	85.2	8.5/10
2014	"	76.3	7.6/10
2015	"	73.1	7.3/10
2016	"	70.4	7.0/10
2017	"	66.7	6.7/10

3) 종합

지난 6년간 의식지수를 비교하면, 남한주민의 의식조사 점수의 흐름은 2015년까지 40점대 초반에서 안정적으로 유지되다가 2016년 조사에서 30점대로 내려앉은 후 2017년에도 연속으로 하락하였다.

경제분야 남한주민의 의식조사 상대점수는 2012년 16.1점→2013년 15.1→2014년 17.0점→2015년 17.6점→2016년 15.9점→2017년 16.6점으로 나타났다. 2014년과 2015년에 통일에 대한 긍정적 여론 조성의 효과를 거두면서 큰 폭으로 상승하였으나 2016년에는 북한의 핵 실험 등으로 남북관계가 급속도로 악화되면서 다시 크게 하락하였고, 2017년에 소폭 반등하였다.

그러나 2017년에 점수가 상승한 '남북 경제 교류에 대한 평가', '대북지원에 대한 선호도' 항목에서 2016년 까지의 질문 문항과 다른 문항이 적용되었기 때문에 남한 주민의 의식이 실제로 개선된 것인지 여부는 불확실하다. 2017년에도 북한의 핵 개발과 국제 사회의 제재 등 남북관계 악화 요인이 계속 발생했던 것을 생각하면 남한 주민의 통일 및 남북 교류에 대한 인식은 오히려 악화 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한편 북한주민(탈북자)의 의식조사 점수는 2015년 이후 3년 연속으로 하

락하여 20점대 초반으로 내려 앉았다.

북한주민의 의식조사 상대점수는 2012년 26.4점→2013년 25.7점→2014년 26.4점→2015년 25.0점→2016년 23.4→2017년 21.7점으로 2014년까지는 26점 안팎에서 소폭 등락하다가 2015년 1.4점, 2016년 1.6점 하락에 이어 2017년에도 1.7점 하락하면서 21점대를 기록하였다.

2017년 조사에서는 모든 문항에 대해 상대점수가 하락하였고, 특히 '시장경제에 대한 지지도' 항목에서 긍정 응답이 큰 폭으로 감소하면서 전반적인 지수 하락을 이끌었다. 이는 2017년 이후 북한 경제에 대북 제재의 영향력이 본격적으로 작용하면서, 경제적 어려움의 원인을 체제와 제도의 문제 보다는 외부적 요인에서 찾는 경향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이상을 남북한 의식지수를 종합한다면 경제영역의 의식통합지수는 2016년 39.3에서 2017년 38.3으로 1.0점 하락하였다.

〈표 3-9〉 경제분야 의식통합지수 종합

		질문과 응답	점수/만점	총점/만점
2012	남한 주민	통일이 남한 혹은 자신에게 이익이 되는 정도	7.8/20	16.1/40
		인도적 지원과 남북한 경제협력의 통일기여도	5.9/10	
		대북 지원에 대한 선호도	2.4/10	
	북한 주민	북한 체제에 대한 평가와 시장경제에 대한 지지도	7.0/15	26.4/40
		대북 지원에 대한 인지도 및 우호도	10.8/15	
		대북 투자와 사업에 대한 우호도	8.6/10	
총점			42.5	
2013	남한 주민	통일이 남한 혹은 자신에게 이익이 되는 정도	7.0/20	15.1/40
		인도적 지원과 남북한 경제협력의 통일기여도	5.4/10	
		대북 지원의 증감에 대한 의견	2.7/10	
2013	북한 주민	북한 체제에 대한 평가와 시장경제에 대한 우호도	7.0/15	25.7/40
		대북 지원에 대한 인지도 및 우호도	10.2/15	
		대북 투자와 사업에 대한 우호도	8.5/10	
총점			40.8	

		질문과 응답	점수/만점	총점/만점
2014	남한 주민	통일이 남한 혹은 자신에게 이익이 되는 정도	8.2/20	17.0/40
		인도적 지원과 남북한 경제협력의 통일기여도	5.5/10	
		대북 지원에 대한 선호도	3.3/10	
	북한 주민	북한 체제에 대한 평가와 시장경제에 대한 지지도	7.9/15	26.4/40
		대북 지원에 대한 인지도 및 우호도	10.9/15	
		대북 투자와 사업에 대한 우호도	7.6/10	
총점			43.4	
2015	남한 주민	통일이 남한 혹은 자신에게 이익이 되는 정도	8.5/20	17.6/40
		인도적 지원과 남북한 경제협력의 통일기여도	5.8/10	
		대북 지원에 대한 선호도	3.3/10	
	북한 주민	북한 체제에 대한 평가와 시장경제에 대한 지지도	7.3/15	25.0/40
		대북 지원에 대한 인지도 및 우호도	10.4/15	
		대북 투자와 사업에 대한 우호도	7.3/10	
총점			42.6	
2016	남한 주민	통일이 남한 혹은 자신에게 이익이 되는 정도	7.8/20	15.9/40
		인도적 지원과 남북한 경제협력의 통일기여도	4.7/10	
		대북 지원에 대한 선호도	3.4/10	
	북한 주민	북한 체제에 대한 평가와 시장경제에 대한 지지도	6.9/15	23.4/40
		대북 지원에 대한 인지도 및 우호도	9.5/15	
		대북 투자와 사업에 대한 우호도	7.0/10	
총점			39.3	
2017	남한 주민	통일이 남한 혹은 자신에게 이익이 되는 정도	7.6/20	16.6/40
		인도적 지원과 남북한 경제협력의 통일기여도	5.3/10	
		대북 지원에 대한 선호도	3.7/10	
	북한 주민	북한 체제에 대한 평가와 시장경제에 대한 지지도	5.9/15	21.7/40
		대북 지원에 대한 인지도 및 우호도	9.1/15	
		대북 투자와 사업에 대한 우호도	6.7/10	
총점			38.3	

나. 정치

- 정치영역의 의식통합지수의 변인과 배점은 다음과 같다.

〈표 3-10〉 정치영역 의식통합 변인과 배점

변인	배점(남한)	배점(북한)
통일의 필요성	10	10
남북간 정치체제의 동질성	10	10
상대방에 의한 무력도발 가능성	10	10
상대방에 대한 긍정인식	5	5
상대방에 대한 인지도	5	5

1) 지표별 응답률과 상대점수

가) 통일의 필요성

- 통일이 필요하다는 의식은 남북통합을 촉진하는 중요한 변인이다. 이에 따라 남북한 주민들이 통일을 얼마나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는가를 측정하기 위한 질문을 제기했다. 2017년 남한주민은 59.8%, 북한주민은 95.4%가 통일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남북주민의 응답률을 상대점수(10점)로 환산하면 각각 6.0점, 9.5점으로 총 15.5점(20점 만점)이 된다. 통일의 필요성에 대한 상대점수는 2008년 14.7점, 2009년 15.2점, 2010년 15.5점, 2011년 14.8점, 2012년 15.0점, 2013년 15.5점, 2014년 15.4점, 2015년 14.5점, 2016년 15.1점을 기록하였다.

〈표 3-11〉 통일의 필요성에 대한 응답률과 상대점수

		질문과 응답	응답률(%)	상대점수
2008	남한주민	질문: 귀하는 남북한 통일이 얼마나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51.6	5.2
	북한주민	응답: "필요하다" 선택	95.2	9.5
2009	남한주민	"	55.8	5.5
	북한주민		97.0	9.7
2010	남한주민	질문: OO님은 남북한 통일이 얼마나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혹은 필요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59.0	5.9
	북한주민	응답: "필요하다" 선택	95.5	9.6
2011	남한주민	"	53.7	5.4
	북한주민		93.8	9.4
2012	남한주민	"	57.0	5.7
	북한주민		93.3	9.3
2013	남한주민	"	54.8	5.5
	북한주민		100.0	10
2014	남한주민	"	55.9	5.6
	북한주민		98.3	9.8
2015	남한주민	"	51.0	5.1
	북한주민		93.5	9.4
2016	남한주민	"	53.4	5.3
	북한주민		97.8	9.8
2017	남한주민	"	59.8	6.0
	북한주민		95.4	9.5

나) 남북한 간 정치제도의 동질성

- 남북한 주민들이 남북의 정치제도가 동질적이라고 인식하면 의식통합에 긍정적 기여를 하게 될 것이다. 이에 따라 남북한 주민에게 남북한 간 선거제도 차이 여부에 대해 질문하였다. 남한주민의 경우, 남북의 선거방식에 차이가 없다고 응답한 사람들은 각각 6.6%였고, 북한주민은 3.4%의 응답률을 보였다. 이를 상대점수(10점)로 환산하면 각각 0.7점, 0.3

점이 된다. 이 둘을 합하면 남북 정치제도의 동질성에 대한 인식은 1.0점(20점 만점)이다. 2008년 0.8점, 2009년 0.7점, 2010년 1.3점, 2011년 1.0점, 2012년 0.9점, 2013년 1.8점, 2014년 1.2점, 2015년 1.4점, 2016년 1.1점으로 전년 대비 0.1점 하락한 수치이다.

〈표 3-12〉 남북 정치제도의 동질성에 대한 응답률과 상대점수

		질문과 응답	질문1 응답률 (%)	질문2 응답률 (%)	평균 응답률 (%)	상대 점수
2008	남한주민	질문: 귀하는 다음 측면에서 남북한 간의 차이가 얼마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응답: "없다" 선택	5.7	4.9	5.3	0.5
	북한주민		3.5	2.3	2.9	0.3
2009	남한주민	"	4.2	4.2	4.2	0.4
	북한주민		3.5	3.0	3.3	0.3
2010	남한주민	질문: OO님은 현재 다음 측면에서 남북한 간의 차이가 얼마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혹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응답: "없다" 선택	6.2	11.3	8.8	0.9
	북한주민		3.8	-	3.8	0.4
2011	남한주민	"	6.1	-	6.1	0.6
	북한주민		3.8	-	3.8	0.4
2012	남한주민	"	6.6	-	6.6	0.7
	북한주민		2.3	-	2.3	0.2
2013	남한주민	"	8.6	-	8.6	0.9
	북한주민		9.0	-	9.0	0.9
2014	남한주민	"	9.0	-	9.0	0.9
	북한주민		2.5	-	2.5	0.3
2015	남한주민	"	6.7	-	6.7	0.7
	북한주민		6.5	-	6.5	0.7
2016	남한주민	"	7.6	-	7.6	0.8
	북한주민		3.0	-	3.0	0.3
2017	남한주민	"	6.6	-	6.6	0.7
	북한주민		3.4	-	3.4	0.3

다) 상대방의 무력도발 가능성 “없음”

- 남북한이 상대방에 대해 무력도발 가능성이 없다고 생각하는 것은 남북의 정치통합을 위해 중요한 변인이 될 수 있다. 남한주민은 43.9%가 북한에 의한 무력도발 가능성이 없다고 응답하였고, 북한주민은 43.6%가 남한에 의한 무력도발 가능성이 없다고 응답하였다. 이를 상대점수(10점)로 환산하면 각각 4.4점, 4.4점으로 총 8.8점이 된다. 이 부문의 총 점수는 2008년 11.7점, 2009년 9.5점, 2010년 6.9점, 2011년 6.7점, 2012년 8.5점, 2013년 7.0점, 2014년 7.7점, 2015년 7.3점, 2016년 8.1점과 비교해 전년 대비 0.7점 증가한 수치이다.

〈표 3-13〉 상대방의 무력도발 가능성 “없음”에 대한 응답률과 상대점수

		질문과 응답	응답률(%)	상대점수
2008	남한주민	질문: 귀하는 앞으로 북한의(남한의) 무력도발 가능성이 얼마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응답: “없다” 선택	47.8	4.8
	북한주민		68.7	6.9
2009	남한주민	"	37.3	3.7
	북한주민		58.4	5.8
2010	남한주민	"	32.5	3.2
	북한주민		36.9	3.7
2011	남한주민	"	21.7	2.2
	북한주민		44.7	4.5
2012	남한주민	"	31.1	3.1
	북한주민		54.2	5.4
2013	남한주민	"	34.0	3.4
	북한주민		36.2	3.6
2014	남한주민	"	25.1	2.5
	북한주민		51.6	5.2
2015	남한주민	"	29.5	3.0
	북한주민		42.6	4.3

		질문과 응답	응답률(%)	상대점수
2016	남한주민	"	33.9	3.4
	북한주민		46.9	4.7
2017	남한주민	"	43.9	4.4
	북한주민		43.6	4.4

라) 상대방에 대한 긍정인식

- 남북한 주민이 상대방에 대해 어떻게 인식하는가 하는 문제도 통합을 촉진하거나 저해하는 데에 유용한 변인이다. 남한주민은 71.8%가 북한을 긍정적 대상으로 바라보았고, 북한주민은 65.5%가 남한을 긍정적 대상으로 인식하였다. 이를 상대점수(5점)로 환산하면 남북한이 각각 3.6점, 3.3점으로 총 6.9점이 된다. 남한주민의 북한에 대한 긍정인식은 전년 대비 0.8점 증가하였고, 북한주민의 남한에 대한 긍정인식은 0.2점 증가하였다. 총 점수는 2008년 7.4점, 2009년 7.2점, 2010년 6.2점, 2011년 6.7점, 2012년 6.9점, 2013년 6.1점, 2014년 6.3점, 2015년 5.8점, 2016년 5.9점으로 변화하였으며, 전년 대비 1.0점 증가했다.

〈표 3-14〉 상대방에 대한 긍정인식 응답률과 상대점수

		질문과 응답	응답률(%)	상대점수
2008	남한주민	질문: 귀하는 북한이(남한이) 귀하에게 어떤 대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응답: “지원대상” + “협력대상” 선택	79.5	4.0
	북한주민		67.8	3.4
2009	남한주민	"	68.1	3.4
	북한주민		75.7	3.8
2010	남한주민	"	64.0	3.2
	북한주민		60.2	3.0
2011	남한주민	"	63.7	3.2
	북한주민		70.0	3.5

2012	남한주민	"	62.9	3.1
	북한주민		76.7	3.8
2013	남한주민	"	56.8	2.8
	북한주민		66.6	3.3
2014	남한주민	"	58.8	2.9
	북한주민		68.1	3.4
2015	남한주민	"	52.5	2.6
	북한주민		64.9	3.2
2016	남한주민	"	55.3	2.8
	북한주민		62.1	3.1
2017	남한주민	"	71.8	3.6
	북한주민		65.5	3.3

마) 상대방에 대한 인지도

■ 남북통합을 위해서는 남북한 주민들이 상대에 대해 많이 알아야 한다는 점에서 상대방에 대한 인지도가 어떠한가를 질문하였다. 남한주민들은 선군정치(68.8%), 주체사상(81.9%), 천리마운동(82.5%), 고난의 행군(71.8%), 장마당(70.8%), 모란봉악단(92.5%)에 대해 괄호 안의 수치만큼 알고 있다고 응답했으며 평균 인지도는 78.0%였다. 북한주민들은 4.19 혁명(60.9%), 5.18 광주항쟁(85.1%), 88서울올림픽(54.0%), 2002 월드컵(52.9%), 세월호 사건(71.3%), 개성공업지구 운영(86.2%)에 대해 괄호 안의 수치만큼 알고 있다고 응답했으며 평균 인지도는 68.4%였다. 한편, 북한주민은 남한의 쌀과 비료에 대한 대북지원에 대해서 53.1%가 알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이 두 결과를 종합한 평균 인지도는 62.9%가 된다. 이를 상대점수(5점)로 환산하면 남한의 경우 3.9점, 북한의 경우 3.4점으로 총 7.3점이 된다. 남한주민들의 북한인지도는 2008년 2.9점, 2009년 2.6점, 2010년 3.0점, 2011년 3.2점, 2012년 3.0점, 2013년 3.0점, 2014년 3.1점, 2015년 3.5점, 2016년 3.5점으로 전년보다 0.4점

증가했으며, 북한주민들의 남한인지도는 2008년, 2010년 3.4점, 2009년, 2011, 2012년 3.5점, 2013년 3.2점, 2014년 3.6점, 2015년 3.5점, 2016년 3.2점으로 전년 대비 0.2점 증가하였다. 종합인지도는 2008년 6.3점, 2009년 6.1점, 2010년 6.4점, 2011년 6.7점, 2012년 6.5점, 2013년 6.2점, 2014년 6.7점, 2015년 7.0점, 2016년 6.7점으로 전년에 비해 0.6점 상승한 점수이다.

〈표 3-15〉 상대방 인지도에 대한 응답률과 상대점수

		질문과 응답	응답률(%)	상대점수
2008	남한주민	질문: 귀하는 다음의 사항에 대해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남한- 북한의 선군정치, 주체사상, 천리마운동, 고난의 행군, 꽃제비, 아리랑축전), (북한- 쌀, 비료 등 남한의 대북 지원) 응답: "알고 있다" 선택	58.6	2.9
	북한주민		68.7	3.4
2009	남한주민	질문: 귀하는 다음의 사항에 대해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남한- 북한의 선군정치, 주체사상, 천리마운동, 고난의 행군, 장마당, 아리랑축전), (북한- 쌀, 비료 등 남한의 대북 지원) 응답: "알고 있다" 선택	52.8	2.6
	북한주민		70.8	3.5
2010	남한주민	질문: 귀하는 다음의 사항에 대해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남한- 북한의 선군정치, 주체사상, 천리마운동, 고난의 행군, 장마당, 아리랑축전), (북한- 4.19 혁명, 5.18 광주항쟁, 88서울올림픽, 2002 월드컵, 쇠고기수입반대 촛불집회 / 쌀, 비료 등 남한의 대북 지원) 응답: "알고 있다" 선택	60.6	3.0
	북한주민		68.1	3.4
2011*	남한주민	2010년과 상동	63.2	3.2
	북한주민		70.1	3.5
2012	남한주민	2010년과 상동	60.7	3.0
	북한주민		70.7	3.5
2013	남한주민	2010년과 상동	59.8	3.0
	북한주민		63.5	3.2

2014*	남한주민	질문: 귀하는 다음의 사항에 대해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남한- 북한의 선군정치, 주체사상, 천리마운동, 고난의 행군, 장마당, 아리랑축전), (북한- 4.19 혁명, 5.18 광주항쟁, 88서울 올림픽, 2002 월드컵, 세월호 사건, 개성공업지구 운영 / 쌀, 비료 등 남한의 대북 지원) 응답: "알고 있다" 선택	62.5	3.1
	북한주민		73.2	3.6
2015	남한주민	질문: 귀하는 다음의 사항에 대해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남한- 북한의 선군정치, 주체사상, 천리마운동, 고난의 행군, 장마당, 아리랑축전), (북한- 4.19 혁명, 5.18 광주항쟁, 88서울 올림픽, 2002 월드컵, 세월호 사건, 개성공업지구 운영 / 쌀, 비료 등 남한의 대북 지원) 응답: "알고 있다" 선택	69.6	3.5
	북한주민		70.3	3.5
2016*	남한주민	질문: 귀하는 다음의 사항에 대해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남한- 북한의 선군정치, 주체사상, 천리마운동, 고난의 행군, 장마당, 모란봉악단), (북한- 4.19 혁명, 5.18 광주항쟁, 88서울 올림픽, 2002 월드컵, 세월호 사건, 개성공업지구 운영 / 쌀, 비료 등 남한의 대북 지원) 응답: "알고 있다" 선택	69.2	3.5
	북한주민		62.9	3.2
2017	남한주민	질문: 귀하는 다음의 사항에 대해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남한- 북한의 선군정치, 주체사상, 천리마운동, 고난의 행군, 장마당, 모란봉악단), (북한- 4.19 혁명, 5.18 광주항쟁, 88서울 올림픽, 2002 월드컵, 세월호 사건, 개성공업지구 운영 / 쌀, 비료 등 남한의 대북 지원) 응답: "알고 있다" 선택	78.0	3.9
	북한주민		68.4	3.4

*2011년 북한주민 점수 수정

*2014년 북한주민 질문 수정

*2016년 남한주민 질문 수정 (아리랑축전 삭제, 모란봉악단 추가)

2) 종합

- 정치영역 의식통합지수는 남한과 북한을 각각 50%씩 배정하여 총 80점 만점으로 구성하기 때문에 5개의 측정지표에 대한 남북한의 상대점수를 합하여 최종적으로 남북한 의식통합을 산출하였다. 2017년도 정치영역

의식통합지수는 80.0점 만점에 39.5점이다.

- 2017년의 정치영역 의식통합지수는 전년인 2016년과 비교하면 2.6점 상승, 2015년에 비해 3.5점 상승, 2014년에 비해 2.2점 상승, 2013년에 비해 3.3점 상승, 2012년에 비해 1.7점 상승, 2011년에 비해 3.6점 상승, 2010년에 비해 3.2점 상승, 2009년에 비해 0.3점 하락하였다. 항목별로 보면, 통일의 필요성, 상대방의 무력도발 가능성 없음, 상대방에 대한 긍정인식, 상대방에 대한 인지도 등이 전년 대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통일의 필요성은 2016년 15.1에서 15.5로 0.4점 높아졌고, 상대방의 무력도발 가능성 없음은 2016년 8.1에서 8.8로 0.7점 높아졌다. 마지막으로 상대방에 대한 긍정인식과 상대방에 대한 인지도는 각각 2016년 5.9에서 6.9로 1.0점, 6.7에서 7.3으로 0.6점 높아졌다.
- 반면, 남북한 간 정치제도 동질성 의식 점수가 0.1점 하락 하였다. 남북한 간 정치제도 동질성의 항목에서 남한주민의 의식 점수가 0.1점 하락했으며 북한주민의 의식 점수는 변동이 없었다.
- 남북한 주민의 정치영역 통합의식은 2008년부터 2011년까지 3년 연속 하락하다 2012년에는 소폭 상승하였으나, 2013년에는 다시 하락하였다. 2014년에 다시 소폭 상승하였으나, 2015년에는 다시 하락하였다. 그러다 다시 2016년에는 남북한의 정치통합의식이 전년 대비 0.9점 상승하였고 올해 2017년에는 재차 2.6점 상승하였다. 이는 주로 남한주민의 의식 점수가 상승한 결과이다. 남한주민의 통합의식은 2016년에 비해 2.8점 상승하여 18.6점을 보인 반면, 북한주민의 통합의식 점수는 20.9점으로 2016년에 비해 0.2점 하락하였다.
- 상대방의 무력도발 가능성이 없다는 신뢰도 항목은 2008년 11.7점에서 2009년 9.5점, 2010년 6.9점, 2011년 6.7점으로 하락하다가 2012년 소

폭 상승한 8.5점을 기록한 뒤 2013년에 7.0점으로 하락, 2014년은 7.7로 상승, 2015년은 7.3으로 소폭 하락, 2016년에 8.1점으로 다시 상승하였다. 2017년에도 8.8점으로 추가 상승하였다.

〈표 3-16〉 정치분야 의식통합지수 종합

	항목	남한 점수/만점	북한 점수/만점	합계
2008	통일의 필요성	5.2/10	9.5/10	14.7/20
	남북한 간 정치제도 동질성	0.5/10	0.3/10	0.8/20
	상대방의 무력도발 가능성 없음	4.8/10	6.9/10	11.7/20
	상대방에 대한 긍정인식	4.0/5	3.4/5	7.4/10
	상대방에 대한 인지도	2.9/5	3.4/5	6.3/10
	총점	17.4/40	23.5/40	40.9/80
2009	통일의 필요성	5.6/10	9.7/10	15.3/20
	남북한 간 정치제도 동질성	0.4/10	0.3/10	0.7/20
	상대방의 무력도발 가능성 없음	3.7/10	5.8/10	9.5/20
	상대방에 대한 긍정인식	3.4/ 5	3.8/ 5	7.2/10
	상대방에 대한 인지도	2.6/ 5	3.5/ 5	6.1/10
	총점	15.7/40	23.1/40	39.8/80
2010	통일의 필요성	5.9/10	9.6/10	15.5/20
	남북한 간 정치제도 동질성	0.9/10	0.4/10	1.3/20
	상대방의 무력도발 가능성 없음	3.2/10	3.7/10	6.9/20
	상대방에 대한 긍정인식	3.2/ 5	3.0/ 5	6.2/10
	상대방에 대한 인지도	3.0/ 5	3.4/ 5	6.4/10
	총점	16.2/40	20.1/40	36.3/80
2011	통일의 필요성	5.4/10	9.4/10	14.8/20
	남북한 간 정치제도 동질성	0.6/10	0.4/10	1/20
	상대방의 무력도발 가능성 없음	2.2/10	4.5/10	6.7/20
	상대방에 대한 긍정인식	3.2/ 5	3.5/ 5	6.7/10
	상대방에 대한 인지도	3.2/ 5	3.5/ 5	6.7/10
	총점	14.6/40	21.3/40	35.9/80

	항목	남한 점수/만점	북한 점수/만점	합계
2012	통일의 필요성	5.7/10	9.3/10	15.0/20
	남북한 간 정치제도 동질성	0.7/10	0.2/10	0.9/20
	상대방의 무력도발 가능성 없음	3.1/10	5.4/10	8.5/20
	상대방에 대한 긍정인식	3.1/ 5	3.8/ 5	6.9/10
	상대방에 대한 인지도	3.0/ 5	3.5/ 5	6.5/10
	총점	15.6/40	22.2/40	37.8/80
2013	통일의 필요성	5.5/10	10/10	15.5/20
	남북한 간 정치제도 동질성	0.9/10	0.9/10	1.8/20
	상대방의 무력도발 가능성 없음	3.4/10	3.6/10	7.0/20
	상대방에 대한 긍정인식	2.8/5	3.3/5	6.1/10
	상대방에 대한 인지도	3.0/5	3.2/5	6.2/10
	총점	15.6/40	21.0/40	36.6/80
2014	통일의 필요성	5.6/10	9.8/10	15.4/20
	남북한 간 정치제도 동질성	0.9/10	0.3/10	1.2/20
	상대방의 무력도발 가능성 없음	2.5/10	5.2/10	7.7/20
	상대방에 대한 긍정인식	2.9/5	3.4/5	6.3/10
	상대방에 대한 인지도	3.1/5	3.6/5	6.7/10
	총점	15.0/40	22.3/40	37.3/80
2015	통일의 필요성	5.1/10	9.4/10	14.5/20
	남북한 간 정치제도 동질성	0.7/10	0.7/10	1.4/20
	상대방의 무력도발 가능성 없음	3.0/10	4.3/10	7.3/20
	상대방에 대한 긍정인식	2.6/5	3.2/5	5.8/10
	상대방에 대한 인지도	3.5/5	3.5/5	7.0/10
	총점	14.9/40	21.1/40	36.0/80
2016	통일의 필요성	5.3/10	9.8/10	15.1/20
	남북한 간 정치제도 동질성	0.8/10	0.3/10	1.1/20
	상대방의 무력도발 가능성 없음	3.4/10	4.7/10	8.1/20
	상대방에 대한 긍정인식	2.8/5	3.1/5	5.9/10
	상대방에 대한 인지도	3.5/5	3.2/5	6.7/10
	총점	15.8/40	21.1/40	36.9/80

	항목	남한 점수/만점	북한 점수/만점	합계
2017	통일의 필요성	6.0/10	9.5/10	15.5/20
	남북한 간 정치제도 동질성	0.7/10	0.3/10	1.0/20
	상대방의 무력도발 가능성 없음	4.4/10	4.4/10	8.8/20
	상대방에 대한 긍정인식	3.6/5	3.3/5	6.9/10
	상대방에 대한 인지도	3.9/5	3.4/5	7.3/10
	총점	18.6/40	20.9/40	39.5/80

다. 사회문화

- 사회문화영역 의식통합의 측정 지표는 상대방의 사회문화에 대한 인지수준, 상대방에 대한 수용의식, 상대방에 대한 적대감 해소, 사회문화양식의 동질성, 통일 이후의 사회평등 기대수준 5가지이다.
- 사회문화영역의 의식통합지수를 구성하는 변인과 배점에 대한 세부사항은 아래의 표와 같다. 각 변인에 해당하는 최종점수는 남북한 주민 각각의 질문 응답 비율을 다시 각 변인에 해당하는 배점을 기준으로 하여 상대점수로 환산하여 산출된다.

〈표 3-17〉 사회문화영역 의식통합 변인과 배점

통합영역	변인	배점(남한)	배점(북한)
사회문화 의식의 통합 (총 90점)	상대방의 사회문화에 대한 인지수준	5	5
	상대방에 대한 수용의식	10	10
	상대방에 대한 적대감 해소	10	10
	사회문화양식의 동질성	10	10
	통일 이후 사회평등 기대수준	10	10
	소계	45	45

1) 지표별 응답률과 상대점수

가) 상대방의 사회문화에 대한 인지수준

- 상대방의 사회문화에 대한 인지수준을 측정하기 위해 상대방의 사회문화를 얼마나 접촉한 경험이 있는가를 질문하였다. 이에 대해 남한 주민은 31.2%, 북한주민은 81.6%가 상대방의 사회문화를 접해 본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남북 각각의 응답률을 상대점수(5점 만점)로 전환하면 남한주민의 경우 1.5점, 북한주민의 경우 4.1점이 부여된다. 남한주민의 경우 북한의 사회문화를 접해 보았다는 응답이 10% 정도 증가한 반면, 북한주민의 경우 4.8% 줄어든 수치를 보인다.

〈표 3-18〉 상대방의 사회문화에 대한 인지수준 응답률과 상대점수

		질문과 응답	응답률(%)	상대점수
2008	남한주민	질문: 귀하는 남한[북한] 방송, 영화, 드라마, 노래(음악) 등을 접해본 적이 있습니까?	31.2	1.6
	북한주민	응답: "접해봄" 또는 "있다" 선택	64.7	3.3
2009	남한주민	"	46.2	2.3
	북한주민	"	56.5	2.8
2010	남한주민	"	37.4	1.9
	북한주민	"	77.3	3.9
2011	남한주민	"	31.5	1.6
	북한주민	"	90.0	4.5
2012	남한주민	"	32.3	1.6
	북한주민	"	88.0	4.4
2013	남한주민	"	27.3	1.4
	북한주민	"	85.9	4.3
2014	남한주민	"	31.5	1.6
	북한주민	"	87.7	4.4
2015	남한주민	"	23.2	1.2
	북한주민	"	87.0	4.4

2016	남한주민	"	21.6	1.1
	북한주민		86.4	4.3
2017	남한주민	"	31.2	1.5
	북한주민		81.6	4.1

나) 상대방의 사회문화에 대한 수용의식

- 상대방의 사회문화에 대한 수용의식을 측정하기 위해 상대방(또는 상대방의 사회문화)을 접촉하였을 때 얼마나 친근감을 느꼈는가를 질문하였다. 2009년 조사까지는 남한주민과 북한주민 각각에게 질문한 내용이 상이했던 점을 보완하여 2010년 조사 때부터는 질문 문항의 표현을 아래의 표와 같이 동일하게 조정하였다.
- 2017년의 경우 남한 주민은 40.4%, 북한주민은 95.9%가 상대방에 대해 친근감을 느꼈다고 응답해, 남북한 주민 간의 큰 격차를 보였다. 남북 각각의 응답률을 상대점수(10점 만점)로 전환하면 남한주민의 경우 4.0점, 북한주민의 경우 9.6점이 부여된다.
- 남한주민의 탈북자에 대한 수용의식은 2012년에 4.0점에서 2013년 4.2점, 그리고 2014년 4.3점, 2015년 4.6점에서 2016년 2.9점으로 하락하였지만 2017년 4.0으로 상승하였다. 반면에 북한이탈주민의 남한출신 주민에 대한 수용의식은 2012년 8.9점, 2013년 8.0점으로 감소하였다가 2014년 9.0점으로 다소 상승 한 뒤, 2015년에도 동일하게 유지되었다가 2016년에 이어 2017년에도 상승하였다. 그 결과, 2017년 남북한 상호 수용의식의 격차는 5.6포인트로 나타났다. 양측 모두 서로에대한 수용의식이 증가하였으며, 특히 북한주민에 대한 남한주민의 수용의식이 크게 증가하면서 2016년 최저치를 기록했던 해당 수치를 예년 수준으로 회복하고 있다.

〈표 3-19〉 상대방에 대한 수용의식 응답률과 상대점수

		질문과 응답	응답률(%)	상대점수
2008	남한주민	질문: 귀하는 탈북자(새터민)가 얼마나 친근하게 느껴지십니까? 응답: "친근하게 느껴진다" 선택	36.2	3.6
	북한주민	질문: 귀하는 남한[북한] 방송, 영화, 드라마, 노래(음악) 등을 접했을 때 어떤 느낌이셨습니까? 응답: "친숙했음" 선택	72.1	7.2
2009	남한주민	"	36.3	3.6
	북한주민	"	52.1	5.2
2010	남한주민	"	42.5	4.3
	북한주민 (변경 후)	질문: 귀하는 남한출신 주민이 얼마나 친근하게 느껴지십니까? 응답: "친근하게 느껴진다" 선택	91.9	9.2
2011	남한주민	2008년과 상동	40.9	4.1
	북한주민	2010년과 상동	90.0	9.0
2012	남한주민	2008년과 상동	39.5	4.0
	북한주민	2010년과 상동	89.1	8.9
2013	남한주민	2008년과 상동	42	4.2
	북한주민	2010년과 상동	79.9	8.0
2014	남한주민	2008년과 상동	42.5	4.3
	북한주민	2010년과 상동	90.2	9.0
2015	남한주민	2008년과 상동	45.9	4.6
	북한주민	2010년과 상동	89.8	9.0
2016	남한주민	2008년과 상동	29.0	2.9
	북한주민	2010년과 상동	92.4	9.2
2017	남한주민	2008년과 상동	40.4	4.0
	북한주민	2010년과 상동	95.9	9.6

※ 출처 :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2018 북한 사회변동과 주민의식 변화: "다가오는 평화, 달라지는 통일의식"」,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주최 국내학술회의(2018년 10월 30일) 참조.

다) 상대방에 대한 적대감 해소

- 남북한 주민에게 각각 상대방을 “적대대상”으로 인식하는 경우가 어느 정도인가를 질문하였다. 이에 남한 주민은 12.3%, 북한주민은 28.7%가 상대방을 적대대상으로 인식한다고 응답하였다. 통합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은 “적대감 해소” 정도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변인 점수는 적대감의 역응답률을 적용한다. 따라서 남한주민의 경우 역응답률 87.7%에 대한 상대점수는 8.7점, 북한주민의 역응답률 71.3%에 대한 상대점수는 7.1점이 부여된다.
- 남한주민의 경우 북한주민에 대한 적대감은 줄어든 반면, 북한주민의 남한주민에 대한 적대감은 오히려 증가했다는 특징을 보인다. 2017년 에 북극성 2형과 화성 14형 발사에 성공하며 북한의 핵개발이 완성단계에 들어선 것과 이러한 적대감 증가와의 관계는 앞으로의 추이를 살펴봐야 분석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표 3-20) 상대방에 대한 적대감 해소 응답률과 상대점수

		질문과 응답	응답률 (%)	역응답률 (%)	상대 점수
2008	남한주민	질문: 귀하는 남한[북한]이 북한[남한]에 어떤 대상이라고 생각하고 있으십니까?	5.3	94.7	9.5
	북한주민	응답: “적대대상” 선택	20.9	79.1	7.9
2009	남한주민	“ ”	9.0	91.0	9.1
	북한주민	“ ”	11.4	88.6	8.9
2010	남한주민	“ ”	12.0	88.0	8.8
	북한주민	“ ”	15.5	84.5	8.5
2011	남한주민	“ ”	16.8	83.2	8.3
	북한주민	“ ”	15.4	84.6	8.5

2012	남한주민	“ ”	10.9	89.1	8.9
	북한주민	“ ”	12.8	87.2	8.7
2013	남한주민	“ ”	16.4	83.6	8.4
	북한주민	“ ”	20.1	79.9	8.0
2014	남한주민	“ ”	13.9	86.1	8.6
	북한주민	“ ”	15.6	84.4	8.4
2015	남한주민	“ ”	16.5	83.5	8.4
	북한주민	“ ”	22.2	77.8	7.8
2016	남한주민	“ ”	16.2	83.8	8.4
	북한주민	“ ”	23.5	76.5	7.7
2017	남한주민	“ ”	12.3	87.7	8.7
	북한주민	“ ”	28.7	71.3	7.1

※ 출처 :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2018 북한 사회변동과 주민의식 변화: “다가오는 평화, 달라지는 통일외식”」,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주최 국내학술회의(2018년 10월 30일) 참조.

라) 사회문화양식의 동질성

- 남북한 간 사회문화양식의 동질성 수준을 측정하기 위해 남북한 간의 사회문화 양식(언어, 생활풍습)이 얼마나 차이가 난다고 생각하는가를 질문하였다. 이에 대해 남한주민은 14.9%, 북한주민은 13.8%가 상대방의 사회문화양식에 차이가 없다고 응답하였다. 남북 각각의 응답률을 상대점수(10점 만점)로 전환하면 남한주민의 경우 1.5점, 북한주민의 경우 1.4점이 부여된다.
- 앞서 살펴 본 상대방의 사회문화에 대한 접촉경험 정도를 감안할 때 여전히 서로에 대한 동질감을 느끼는 정도는 낮게 나타난다. 상대방의 사회문화에 대한 접촉이 동질감의 확인으로 연결되고 있지 않다는 점을 드러낸다.

〈표 3-21〉 남북 사회문화양식의 동질성 응답률과 상대점수

		질문과 응답	질문1 응답률 (%)	질문2 응답률 (%)	평균 응답률 (%)	상대 점수
2008	남한 주민	질문1: 언어사용에서 남북한 간의 차이가 얼마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응답1: “전혀 차이없음”과 “별로 차이없음” 선택	17.5	17.6	17.6	1.8
	북한 주민	질문2: 생활풍습에서 남북한 간의 차이가 얼마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응답2: “전혀 차이없음”과 “별로 차이없음” 선택	6.6	12.4	9.5	1.0
2009	남한주민	"	7.2	11.8	9.5	1.0
	북한주민		4.6	7.3	6.0	0.6
2010	남한주민	"	10.8	13.3	12.05	1.2
	북한주민		5.8	4.8	5.3	0.5
2011	남한주민	"	9.1	11.6	10.4	1.0
	북한주민		2.3	11.6	7.0	0.7
2012	남한주민	"	11.8	14.3	13.0	1.3
	북한주민		5.3	10.5	7.9	0.8
2013	남한주민	"	14.7	14.2	14.45	1.5
	북한주민		4.7	8.1	6.4	0.6
2014	남한주민	"	16.4	16.7	16.55	1.7
	북한주민		6.6	14.7	10.65	1.1
2015	남한주민	"	4.2	27.4	15.8	1.6
	북한주민		5.6	12.0	8.8	0.9
2016	남한주민	"	18.7	22.2	20.45	2.0
	북한주민		4.5	4.8	4.65	0.4
2017	남한주민	"	13.6	16.2	14.9	1.5
	북한주민		13.8	13.7	13.8	1.4

※ 출처 :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2018 북한 사회변동과 주민의식 변화: “다가오는 평화, 달라지는 통일외식”」,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주최 국내학술회의(2018년 10월 30일) 참조.

마) 통일 이후의 사회평등 기대수준

- 2009년까지는 남한주민 의식조사와 북한주민(탈북자) 의식조사 간에 ‘통일 이후의 사회평등 기대수준’을 측정할 수 있는 동일한 질문이 없어 그에 상응하는 각각의 질문을 추출하여 사용하였다. 남한주민 의식조사의 경우에는 통일이 된 후 빈부격차가 통일 전에 비해 얼마나 개선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가를, 북한주민 의식조사의 경우에는 통일이 되면 북한주민이 남한 주민과 비교해서 어떤 대우를 받을 것으로 생각하는가를 질문하였다.
- 하지만 2010년부터는 남북한 주민 모두에게 “귀하는 통일이 되면 빈부격차가 통일 전에 비해 얼마나 개선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라는 동일한 질문을 제시했다. 그 결과, 2017년에는 남한주민 14.5%, 북한주민 86.2%가 통일 이후에 빈부의 격차 문제가 개선될 것이라고 응답하여 남북한 주민 간의 큰 인식의 차이를 보였다. 남북 각각의 응답률을 상대점수(10점 만점)로 전환하면 남한주민의 경우 1.5점, 북한주민의 경우 8.6점이 부여된다.
- 남한주민의 경우 통일 이후 사회평등에 대한 기대수준이 전년대비 0.3점이 상승하여 1.5점을 나타냈으며, 북한주민의 경우 역시 전년대비 0.5점이 상승한 8.6점으로 나타났다. 통일 이후 빈부격차가 개선될 것이라는 기대는 계속해서 북한주민에게서 매우 높은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남한주민은 훨씬 낮은 기대수준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양측의 온도차는 통일비용과 통일편익에 대한 기대감의 차이가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다.

〈표 3-22〉 통일 이후의 사회평등 기대수준 응답률과 상대점수

		질문과 응답	응답률(%)	상대점수
2008	남한주민	질문: 귀하는 통일이 되면 빈부격차가 통일 전에 비해 얼마나 개선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응답: "크게 개선"과 "약간 개선" 선택	10.6	1.1
	북한주민	질문: 귀하는 통일이 되면 북쪽 주민이 남쪽 주민과 비교해서 어떤 대우를 받을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응답: "출신지역과 상관없이 똑같은 대우를 받을 것임" 선택	38.5	3.9
2009	남한주민	"	14.7	1.5
	북한주민	"	44.0	4.4
2010	남한주민	"	15.9	1.6
	북한주민 (변경 후)	질문: 귀하는 통일이 되면 빈부격차가 통일 전에 비해 얼마나 개선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응답: "크게 개선"과 "약간 개선" 선택	81.4	8.1
2011	남한주민	2008년과 상동	13.1	1.3
	북한주민 (변경 후)	2010년과 상동	78.4	7.8
2012	남한주민	2008년과 상동	12.3	1.2
	북한주민 (변경 후)	2010년과 상동	86.5	8.7
2013	남한주민	2008년과 상동	14.8	1.5
	북한주민 (변경 후)	2010년과 상동	85.3	8.5
2014	남한주민	2008년과 상동	13.6	1.4
	북한주민 (변경 후)	2010년과 상동	81.2	8.1
2015	남한주민	2008년과 상동	19.7	2.0
	북한주민 (변경 후)	2010년과 상동	87.1	8.7
2016	남한주민	2008년과 상동	12.3	1.2
	북한주민 (변경 후)	2010년과 상동	81.0	8.1
2017	남한주민	2008년과 상동	14.5	1.5
	북한주민 (변경 후)	2010년과 상동	86.2	8.6

2) 종합

- 2017년 사회문화영역 의식통합지수는 90점 만점 중 48점으로 2016년 45.3점 보다 상승하였다. 남한주민의 의식통합지수는 전년대비 1.6점이 상승하였으며, 북한주민의 의식통합지수는 전년대비 1.1점 상승하였다.
- 사회문화영역 의식통합지수가 측정되기 시작한 2008년 이후부터 2017년까지 10년간의 사회문화영역 의식통합지수의 변동 추이는 2008년 40.9→2009년 39.4→2010년 47.9→2011년 46.8→2012년 48.5→2013년 46.4→2014년 48.6→2015년 48.6→2016년 45.3→2017년 48로 2010년 이후로 큰 변동 없이 일정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사회문화영역 의식통합에서 보이는 부동성(不動性)은 남북한 주민 모두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특징이다.
- 항목별 남북한 주민의 비중을 비교해 보면, 상대방의 사회문화에 대한 인지수준(남 1.5 vs. 북 4.1), 상대방에 대한 수용의식(남 4.0 vs. 북 9.6), 통일 이후 사회평등 기대수준(남 8.7 vs. 북 7.1) 항목들에서는 남북한 주민의 의식 간에 격차가 크다. 반면에 상대방에 대한 적대감 해소(남 1.5 vs. 북 1.4)와 사회문화양식의 동질성(남 1.5 vs. 북 8.6) 항목들에서는 남북한 주민의 의식 간에 격차가 크지 않다.

〈표 3-23〉 사회문화영역 의식통합지수 종합

	항목	남한 상대점수 /배점	북한 상대점수 /배점	합계 /만점
2008	상대방의 사회문화에 대한 인지수준	1.6/5	3.3/5	4.9/10
	상대방에 대한 수용의식	3.6/10	7.2/10	10.8/20
	상대방에 대한 적대감 해소	9.5/10	7.9/10	17.4/20
	사회문화양식의 동질성	1.8/10	1.0/10	2.8/20
	통일 이후 사회평등 기대수준	1.1/10	3.9/10	5/20
	총점	17.6/45	23.3/45	40.9/90

	항목	남한 상대점수 /배점	북한 상대점수 /배점	합계 /만점
2009	상대방의 사회문화에 대한 인지수준	2.3/5	2.8/5	5.1/10
	상대방에 대한 수용의식	3.6/10	5.2/10	8.8/20
	상대방에 대한 적대감 해소	9.1/10	8.9/10	18/20
	사회문화양식의 동질성	1.0/10	0.6/10	1.6/20
	통일 이후 사회평등 기대수준	1.5/10	4.4/10	5.9/20
	총점	17.5/45	21.9/45	39.4/90
2010	상대방의 사회문화에 대한 인지수준	1.9/5	3.9/5	5.8/10
	상대방에 대한 수용의식	4.3/10	9.1/10	13.4/20
	상대방에 대한 적대감 해소	8.8/10	8.5/10	17.3/20
	사회문화양식의 동질성	1.2/10	0.5/10	1.6/20
	통일 이후 사회평등 기대수준	1.6/10	8.1/10	9.7/20
	총점	17.8/45	30.1/45	47.9/90
2011	상대방의 사회문화에 대한 인지수준	1.6/5	4.5/5	6.1/10
	상대방에 대한 수용의식	4.1/10	9.0/10	13.1/20
	상대방에 대한 적대감 해소	8.3/10	8.5/10	16.8/20
	사회문화양식의 동질성	1.0/10	0.7/10	1.7/20
	통일 이후 사회평등 기대수준	1.3/10	7.8/10	9.1/20
	총점	16.3/45	30.5/45	46.8/90
2012	상대방의 사회문화에 대한 인지수준	1.6/5	4.4/5	6.0/10
	상대방에 대한 수용의식	4.0/10	8.9/10	12.9/20
	상대방에 대한 적대감 해소	8.9/10	8.7/10	17.6/20
	사회문화양식의 동질성	1.3/10	0.8/10	2.1/20
	통일 이후 사회평등 기대수준	1.2/10	8.7/10	9.9/20
	총점	17.0/45	31.5/45	48.5/90
2013	상대방의 사회문화에 대한 인지수준	1.4/5	4.3/5	5.7/10
	상대방에 대한 수용의식	4.2/10	8.0/10	12.2/20
	상대방에 대한 적대감 해소	8.4/10	8.0/10	16.4/20
	사회문화양식의 동질성	1.5/10	0.6/10	2.1/20
	통일 이후 사회평등 기대수준	1.5/10	8.5/10	10.0/20
	총점	17.0/45	29.4/45	46.4/90
2014	상대방의 사회문화에 대한 인지수준	1.6/5	4.4/5	6.0/10
	상대방에 대한 수용의식	4.3/10	9.0/10	13.3/20
	상대방에 대한 적대감 해소	8.6/10	8.4/10	17.0/20
	사회문화양식의 동질성	1.7/10	1.1/10	2.8/20
	통일 이후 사회평등 기대수준	1.4/10	8.1/10	9.5/20
	총점	17.6/45	31/45	48.6/90

	항목	남한 상대점수 /배점	북한 상대점수 /배점	합계 /만점
2015	상대방의 사회문화에 대한 인지수준	1.2/5	4.4/5	5.6/10
	상대방에 대한 수용의식	4.6/10	9.0/10	13.6/20
	상대방에 대한 적대감 해소	8.4/10	7.8/10	16.2/20
	사회문화양식의 동질성	1.6/10	0.9/10	2.5/20
	통일 이후 사회평등 기대수준	2.0/10	8.7/10	10.7/20
	총점	17.8/45	30.8/45	48.6/90
2016	상대방의 사회문화에 대한 인지수준	1.1/5	4.3/5	5.4/10
	상대방에 대한 수용의식	2.9/10	9.2/10	12.1/10
	상대방에 대한 적대감 해소	8.4/10	7.7/10	16.1/20
	사회문화양식의 동질성	2.0/10	0.4/10	2.4/20
	통일 이후 사회평등 기대수준	1.2/10	8.1/10	9.3/20
	총점	15.6/45	29.7/45	45.3/90
2017	상대방의 사회문화에 대한 인지수준	1.5/5	4.1/5	5.6/10
	상대방에 대한 수용의식	4.0/10	9.6/10	13.6/20
	상대방에 대한 적대감 해소	8.7/10	7.1/10	15.8/20
	사회문화양식의 동질성	1.5/10	1.4/10	2.9/20
	통일 이후 사회평등 기대수준	1.5/10	8.6/10	10.1/20
	총점	17.2/45	30.8/45	48/90

3. 종합

- 2017년 남북의식통합지수는 경제영역 38.3점, 정치영역 39.5점, 사회문화영역 48.0점을 합한 결과 총점 125.8점이다. 이 수치는 2016년의 121.5점에서 4.3점이 상승한 것이다. 이 변화는 경제영역이 1.0점 하락하고 정치영역과 사회문화영역에서 각각 2.6점과 2.7점 상승한 결과이다.
- 연도별 의식통합지수의 변동 추이를 살펴보면 2008년 123.7→2009년 120.5→2010년 124.8→2011년 124.2→2012년 128.8→2013년 124→2014년 129.3→2015년 127.2→2016년 121.5→2017년 125.8점으로 짧은 주기의 등락이 반복되는 경향을 보인다. 이는 남북한 주민의 의

식통합 수준이 남북관계의 상황적 요인에 영향을 받아 변동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그러나 최근 10년 간 120점대를 유지하고 있어 장기적으로는 큰 폭의 변화 없이 일관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 영역별로 연도별 추이를 요약해 보면, 먼저 경제영역 의식통합의 경우 2008년 41.9→2009년 41.3→2010년 40.6→2011년 41.5→2012년 42.5→2013년 40.8→2014년 43.4→2015년 42.6→2016년 39.3→2017년 38.3점으로 나타났다. 남한주민의 경우 남북경협 및 대북 지원에 대한 긍정평가 비율이 증가하면서 의식통합 점수가 소폭 상승하였으나, 북한주민의 경우 모든 항목의 긍정응답이 감소한 가운데 자본주의 지지도가 큰 폭으로 하락하면서 전반적인 지수 하락을 이끌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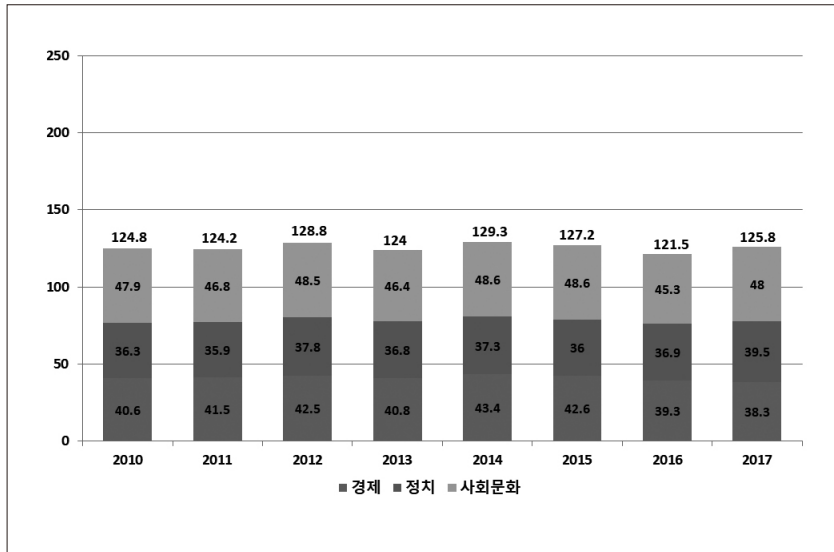
■ 다음으로, 정치영역 의식통합의 경우 2008년 40.9점→2009년 39.8점 →2010년 36.3점→2011년 35.9점→2012년 37.8점→2013년 36.8점 →2014년 37.3점→2015년 36.0점→2016년 36.9점→2017년 39.5점으로 변화했다. 정치제도 동질성을 제외한 통일의 필요성, 상대방의 무력도발 가능성 등 모든 항목에서 소폭 상승하면서 총 2.6점 상승하였다.

■ 2008년 이후부터 2016년까지 9년간의 사회문화영역 의식통합지수의 변동 추이는 2008년 40.9→2009년 39.4→2010년 47.9→2011년 46.8→2012년 48.5→2013년 46.4→2014년 48.6→2015년 48.6→2016년 45.3점→2017년 48.0점으로 2010년 이후로 큰 변동 없이 일정한 수준을 유지하였고 2017년 조사에서는 상대방의 사회문화에 대한 수용의식에서 2016년도의 하락 분을 만회하면서 전반적으로 상승하였다.

〈표 3-24〉 남북의식통합지수 연도별 변화

영역	변인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경제영역 (80)	남한	통일이 남한 혹은 자신에게 이익이 되는 정도	7.5	7.7	7.8	7.9	7.8	7.0	8.2	8.5	7.8	7.6	
		인도적 지원과 남북한 경제협력의 통일기여도	5.5	5.9	6.0	5.6	5.9	5.4	5.5	5.8	4.7	5.3	
		대북 지원의 증감에 대한 의견	1.5	1.9	2.5	2.2	2.4	2.4	3.3	3.3	3.4	3.7	
	북한	북한 체제에 대한 평가와 시장경제에 대한 우호도	8.2	7.9	6.3	6.2	7.0	7.0	7.9	7.3	6.9	5.9	
		개혁의 성과와 대북 지원에 대한 인지도	12	10.9	10.1	10.8	10.8	10.2	10.9	10.4	9.5	9.1	
		대북 투자와 사업에 대한 우호도	7.2	7.0	7.9	8.8	8.6	8.5	7.6	7.3	7.0	6.7	
	소계		41.9	41.3	40.6	41.5	42.5	40.8	43.4	42.6	39.3	38.3	
	정치영역 (80)	남북한 공통	통일의 필요성	14.7	15.3	15.5	14.8	15.0	15.5	15.4	14.5	15.1	15.5
			정치제도 동질성	0.8	0.7	1.3	1.0	0.9	1.8	1.2	1.4	1.1	1.0
			상대방의 무력도발 가능성 없음	11.7	9.5	6.9	6.7	8.5	7.0	7.7	7.3	8.1	8.8
상대방에 대한 긍정인식			7.4	8.2	6.2	6.7	6.9	6.1	6.3	5.8	5.9	6.9	
상대방에 대한 인지도			6.3	6.1	6.4	6.2	6.5	6.4	6.7	7.0	6.7	7.3	
소계		40.9	39.8	36.3	35.9	37.8	36.8	37.3	36.0	36.9	39.5		
사회문화영역 (90)	남북한 공통	상대방의 사회문화에 대한 인지도수준	4.9	5.1	5.8	6.1	6.0	5.7	6.0	5.6	5.4	5.6	
		상대방의 사회문화에 대한 수용의식	10.8	8.8	8.8	13.1	12.9	12.2	13.3	13.6	12.1	13.6	
		상대방에 대한 적대감 해소	17.4	18.0	17.3	16.8	17.6	16.4	17.0	16.2	16.1	15.8	
		사회문화양식의 동질성	2.8	1.6	1.6	1.7	2.1	2.1	2.8	2.5	2.4	2.9	
		통일 이후 사회평등 기대수준	5.0	5.9	9.7	9.1	9.9	10.0	9.5	10.7	9.3	10.1	
소계		40.9	39.4	47.9	46.8	48.5	46.4	48.6	48.6	45.3	48.0		
합계	만점 250점	123.7	120.5	124.8	124.2	128.8	124	129.3	127.2	121.5	125.8		

〈그림 3-1〉 의식통합지수 2010~2017년 변화 추이



3장. 남북통합지수 : 2010~2017

- 2017년 남북통합지수는 1,000점 만점에 179.4점이다. 남북한의 통합 수준을 백분율로 표시하면 17.9%이다.
- 2017년 남북통합지수는 2016년 176.4점에 비해 3.0점이 상승하여 2년 연속 하락 이후 약간 반등하였다. 그러나 2017년 종합지수의 상승 폭은 전년도의 하락 폭에 비해 미미한 수준이어서 여전히 지수 산출 이래 최저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였다. 통합률 역시 17.6%에서 17.9%로 0.3% 포인트 상승하는 데 그쳤다. 전년대비 구조통합지수는 하락하였으나 의식통합지수가 상승하여 종합지수 상승을 이끌었다.
- 제도적 통합지수는 270점 만점 중 29.9점으로 전년대비 2.2점 상승한 반면, 관계적 통합지수 480점 만점 중 23.6점으로 전년대비 3.6점 하락하여 전체적으로 구조통합지수는 전년 대비 1.4점이 하락했다. 또한 의식통합지수는 250점 만점 중 125.8점으로 전년 대비 4.3점 상승하였다.
- 영역별로는 경제영역에서 전년대비 지수가 하락한 반면 정치, 사회문화 영역에서는 상승하였다.
- 경제영역 통합지수는 49.1점으로 전년대비 2.3점 하락하였고, 정치영역 통합지수는 48.3점, 사회문화영역 통합지수는 82.0점으로 전년대비 각각 2.1점, 3.1점 상승하였다.
- 관계통합지수는 전년 대비 총 3.5점 하락한 23.7점을 기록하였다. 사회문화영역에서 변동이 없었던 반면, 경제영역과 정치영역에서는 각각 2.1점, 1.4점 하락하였다.
- 제도통합지수는 경제영역, 정치영역, 사회문화영역에서 각각 0.8점, 1.0점, 0.4점 상승하여 총 2.2점 상승한 29.9점을 기록하였다.

○ 의식통합지수 역시 전년대비 상승하였다. 경제영역의 점수는 1.0점 감소 하였으나, 경제영역과 사회문화 영역에서 각각 2.6점, 2.7점 증가하여 전체적으로는 4.3점 증가하였다. 의식통합지수의 증가는 한반도 정세 악화로 위기감이 계속해서 고조되면서 오히려 위기 해소를 위한 대화와 상호 인정의 필요성이 부각되었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표 4-1〉 2017년 남북통합지수와 백분율

	경제		정치		사회·문화		합계	
	지수	%	지수	%	지수	%	지수	%
제도적 통합	7.6/90	8.4	6.3/90	7.0	16.0/90	17.8	29.9/270	11.1
관계적 통합	3.2/160	2.0	2.5/160	1.5	18.0/160	11.3	23.7/480	4.9
의식의 통합	38.3/80	47.9	39.5/80	49.4	48.0/90	53.3	125.8/250	50.3
합계	49.1/330	14.9	48.3/330	14.6	82.0/340	24.1	179.4/1000	17.9

〈표 4-2〉 2016년 남북통합지수와 백분율

	경제		정치		사회·문화		합계	
	지수	%	지수	%	지수	%	지수	%
제도적 통합	6.8/90	7.6	5.3/90	5.9	15.6/90	17.3	27.7/270	10.3
관계적 통합	5.3/160	3.3	3.9/160	2.4	18/160	11.2	27.2/480	5.7
의식의 통합	39.3/80	49.1	36.9/80	46.1	45.3/90	50.3	121.5/250	48.6
합계	51.4/330	15.6	46.1/330	14.0	78.9/340	23.2	176.4/1000	17.6

〈표 4-3〉 2015년 남북통합지수와 백분율

	경제		정치		사회·문화		합계	
	지수	%	지수	%	지수	%	지수	%
제도적 통합	6.8/90	7.6	6.0/90	6.6	15.5/90	17.2	28.3/270	11.3
관계적 통합	20.1/160	11.8	7.3/160	4.6	20.4/160	12.8	47.8/480	10.0
의식의 통합	42.6/80	53.3	36.0/80	45.0	48.6/90	54.0	127.2/250	50.9
합계	69.5/330	21.1	49.3/330	14.9	84.5/340	24.8	203.3/1000	20.3

〈표 4-4〉 2014년 남북통합지수와 백분율

	경제		정치		사회·문화		합계	
	지수	%	지수	%	지수	%	지수	%
제도적 통합	7.5/90	8.3	6.4/90	7.1	16.6/90	18.4	30.5/270	11.3
관계적 통합	18.7/160	11.8	6.8/160	4.3	21.0/160	13.1	46.5/480	9.7
의식의 통합	43.4/80	54.3	37.3/80	46.6	48.6/90	54.0	129.3/250	51.7
합계	69.7/330	21.1	50.5/330	15.3	86.2/340	25.4	206.3/1000	20.6

〈표 4-5〉 2013년 남북통합지수와 백분율

	경제		정치		사회·문화		합계	
	지수	%	지수	%	지수	%	지수	%
제도적 통합	7.2/90	8.0	6.4/90	7.1	14.8/90	16.4	28.4/270	10.5
관계적 통합	14.9/160	9.3	3.6/160	2.3	19.9/160	12.4	38.5/480	8.0
의식의 통합	40.8/80	51.0	36.8/80	46	46.4/90	51.6	124/250	49.6
합계	62.9/330	19.1	46.6/330	14.1	81.1/340	23.9	190.8/1000	19.1

〈표 4-6〉 2012년 남북통합지수와 백분율

	경제		정치		사회·문화		합계	
	지수	%	지수	%	지수	%	지수	%
제도적 통합	6.6/90	7.3	6.5/90	7.2	14.0/90	15.6	27.1/270	10.0
관계적 통합	18.2/160	11.4	4.9/160	3.1	18.6/160	11.6	41.7/480	8.7
의식의 통합	42.5/80	53.1	37.8/80	47.3	48.5/90	36.2	128.8/250	51.5
합계	67.3/330	20.4	49.2/330	14.9	81.1/340	23.8	197.6/1000	19.8

〈표 4-7〉 2011년 남북통합지수와 백분율

	경제		정치		사회·문화		합계	
	지수	%	지수	%	지수	%	지수	%
제도적 통합	7.7/90	8.6	6.8/90	7.6	14.0/90	15.6	28.5/270	10.6
관계적 통합	17.4/160	10.9	6.4/160	4.0	19.1/160	11.9	42.9/480	8.9
의식의 통합	41.5/80	51.9	35.9/80	44.3	46.8/90	52	124.2/250	49.7
합계	66.6/330	20.2	49.1/330	14.7	79.9/340	23.5	195.6/1000	19.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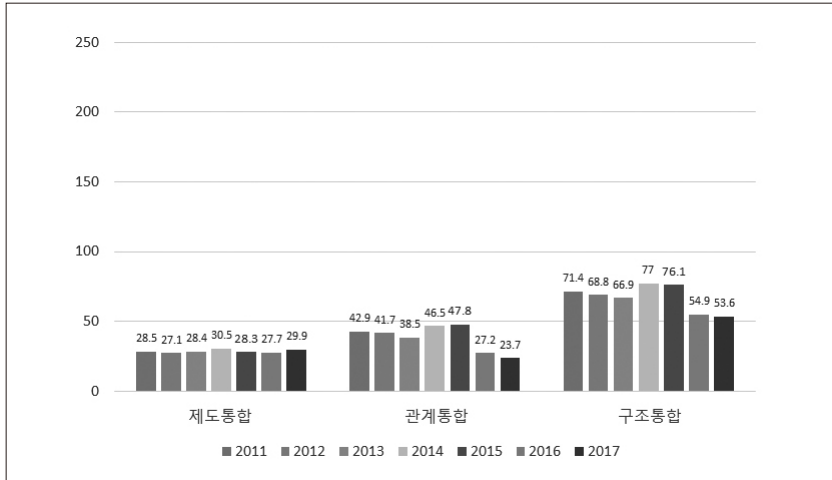
〈표 4-8〉 2010년 남북통합지수와 백분율

	경제		정치		사회·문화		합계	
	지수	%	지수	%	지수	%	지수	%
제도적 통합	7.7/90	8.6	6.8/90	7.6	13.9/90	15.4	28.4/270	10.5
관계적 통합	20.7/160	12.9	4.8/160	3	22.7/160	14.2	48.2/480	10
의식의 통합	40.6/80	50.8	36.3/80	45.4	47.9/90	53.2	124.8/250	49.9
합계	69/330	20.9	47.9/330	14.5	84.5/340	24.9	201.4/1000	2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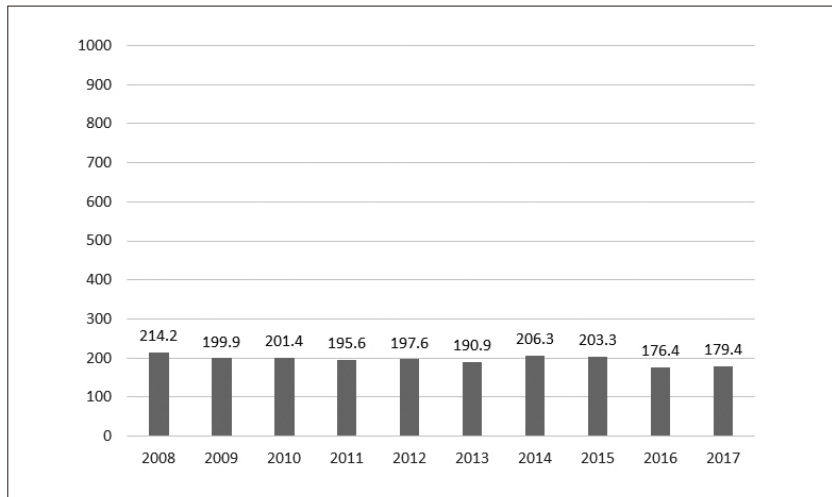
- 2010~2017년의 남북통합지수 변화 추이를 살펴보면, 구조통합지수와 의식통합지수를 합한 종합지수는 2015년까지 200점 안팎에서 등락하다가 2016년에 170점대로 크게 하락한 뒤 2017년에도 큰 변화 없이 170점대를 유지하였다.
- 8년간 종합지수는 2010년 201.4→2011년 195.6→2012년 197.6→2013년 190.8→2014년 206.3→2015년 203.3→2016년 176.4→2017년 179.4점으로 나타났다.
- 제도적 통합과 관계적 통합으로 구성되는 구조통합지수는 2010년 76.6→2011년 71.4→2012년 68.8→2013년 66.9→2014년 77.1→2015년 76.1→2016년 54.9→2017년 53.6점으로 2010년대 들어 계속 60~70점대를 유지하다가 2016년에 크게 하락하여 50점대로 떨어졌고, 2017년에도 소폭 하락하였다. 제도적 통합수준은 최근 8년간 27~30점 범위에서 큰 변화 없이 유지되고 있으며, 관계적 통합 수준은 꾸준히 감소하다가 2014~15년에 40점대 중반으로 반등하였으나, 핵 위기가 본격화된 2016년과 2017년에는 다시 크게 하락하여 20점대를 기록하고 있다.
- 8년간의 의식통합지수는 2010년 124.8→2011년 123.7→2012년 128.8→2013년 124→2014년 129.3→2015년 127.2→2016년 121.5→2017년 125.8점으로 120점대에서 소폭 등락을 반복하고 있다. 2017년의 의식통합지수는 한반도의 긴장 고조 국면이 지속됨에도 불구하고 전년 대비 4.3점 상승하였다.

- 2010년~2017년의 남북한의 통합율을 보면 2015년까지는 20% 내외에서 소폭 변동하였으나 2016년과 2017년에는 크게 하락한 17%대를 기록하였다.
- 8년간 남북 통합률은 2010년 20.1%→2011년 19.5%→2012년 19.8%→2013년 19.1%→2014년 20.6%→2015년 20.3%→2016년 17.6%→2017년 17.9%를 나타냈다.
- 2017년 영역별 통합률의 변동을 살펴보면, 경제 영역은 전년대비 0.7% 포인트 감소한 반면 사회문화와 정치 영역은 각각 0.9% 포인트, 0.6% 포인트 증가하였다. 구체적으로, 경제영역의 경우 2010년 20.9%→2011년 20.2%→2012년 20.4%→2013년 19.1%→2014년 21.1%→2015년 21.1%→2016년 15.6%→2017년 14.9%로 19~21% 사이에서 등락하다가 2016년 이후에는 15% 정도로 내려 앉았다. 정치영역의 경우 2010년 14.5%→2011년 14.7%→2012년 14.9%→2013년 14.1%→2014년 15.3%→2015년 14.9%→2016년 14.0%→2017년 14.6%로 8년 간 큰 변화 없이 14~15%를 유지하고 있다. 사회문화영역의 경우 2010년 24.9%→2011년 23.5%→2012년 23.8%→2013년 23.9%→2014년 25.4%→2015년 24.8%→2016년 23.2%→2017년 24.1%로 나타나 3년 연속 하락 이후 약간 반등하였다.
- 이상에서 살펴본 것처럼 영역별 통합률은 사회문화>경제>정치 영역 순서로 높게 나타난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2017년을 기준으로 구조적 통합(제도+관계 통합)의 경우 사회문화(13.6%)>경제(4.3%)>정치(3.5%) 순서로 통합률의 차이를 나타내며, 의식통합의 경우 사회문화(53.3%)>정치(49.4%)>경제(47.9%) 순서로 나타났다.

〈그림 4-1〉 2011~2017년 종합지수(구조통합지수+의식통합지수) 비교



〈그림 4-2〉 2008~2017년 종합지수(구조통합지수+의식통합지수) 비교



■ 남북한 통합의 단계를 구조통합지수를 기준으로 평가해보면, 정치영역의 통합단계는 0단계로 가장 낮고, 경제영역은 1단계, 사회문화영역은 2단계를 기록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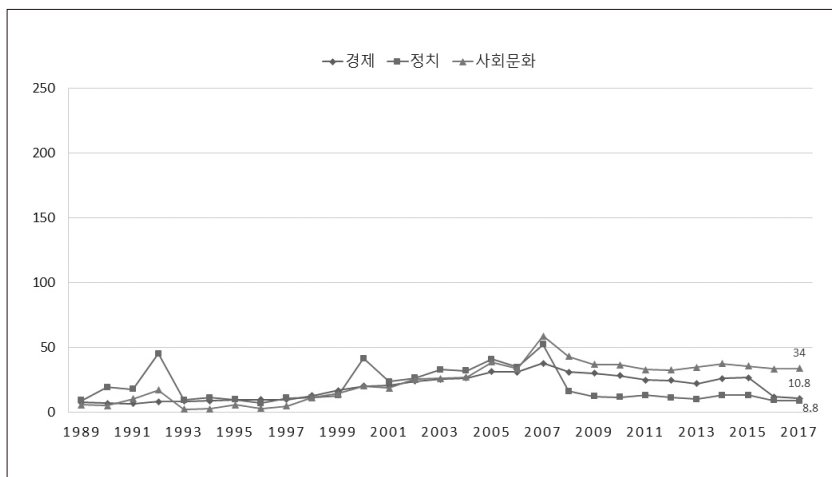
- 정치영역의 경우, 2010년 1단계→2011년 1단계→2012년 1단계→2013년 0단계→2014년 1단계→2015년 1단계→2016년 0단계→2017년 0단계로 2년 연속 0단계를 기록하였다.
- 경제영역의 경우 역시, 2010년 2단계→2011년 2단계→2012년 2단계→2013년 2단계→2014년 2단계→2015년 2단계→2016년 1단계→2017년 1단계로 2016년 1단계로 내려앉은 후 2년 연속 1단계를 벗어나지 못하였다.
- 사회문화영역은 2010년 2단계→2011년 2단계→2012년 2단계→2013년 2단계→2014년 2단계→2015년 2단계→2016년 2단계→2017년 2단계로 2010년대 들어 꾸준히 2단계를 유지하고 있다.

〈표 4-9〉 영역별 구조통합지수 시계열적 추이와 단계 변화

연도	경제(250)				정치(250)				사회·문화(250)			
	제도 (90)	관계 (160)	구조 (250)	단계	제도 (90)	관계 (160)	구조 (250)	단계	제도 (90)	관계 (160)	구조 (250)	단계
1989	1	6.62	7.6	0	1	8.1	9.1	0	1.1	4.8	5.9	0
1990	1	5.96	6.9	0	1	18.3	19.3	1	1.1	4	5.1	0
1991	1	5.9	6.9	0	1	17	18	1	1.1	9.3	10.4	0
1992	2	6.4	8.4	0	2	43.3	45.3	3	1.3	16	17.3	1
1993	2	6.5	8.5	0	2.5	6.9	9.4	0	1.5	1	2.5	0
1994	2	6.9	8.9	0	2.6	8.7	11.3	1	1.6	1	2.6	0
1995	2	7.8	9.8	0	3.1	6.6	9.7	0	1.9	4	5.9	0
1996	2	7.7	9.8	0	3.2	3.9	7.1	0	2.2	1	3.2	0
1997	2	7.8	9.8	0	3.3	7.8	11.1	1	3.2	1.8	5	0
1998	5	8	13.0	1	3.8	7.6	11.4	1	6.9	4.6	11.5	1
1999	5	12	17.0	1	4.3	8.5	12.8	1	7	7.4	14.4	1
2000	5	15.3	20.3	1	4.4	37.2	41.6	3	7.1	13.3	20.4	1
2001	5	15.5	20.4	1	4.5	19.1	23.6	2	7.2	11.6	18.8	1
2002	5.5	18.4	23.8	2	4.6	21.9	26.5	2	7.2	18.3	25.5	2
2003	5.5	20.2	25.7	2	4.7	28.3	33	2	7.4	18.7	26.1	2

	경제(250)				정치(250)				사회·문화(250)			
	제도 (90)	관계 (160)	구조 (250)	단계	제도 (90)	관계 (160)	구조 (250)	단계	제도 (90)	관계 (160)	구조 (250)	단계
2004	6	20.5	26.5	2	6	26.2	32.2	2	7.5	19.5	27	2
2005	6	25.3	31.3	3	6.1	34.9	41	3	8.4	30.4	38.8	2
2006	6.5	24.6	31.0	3	6.2	28.6	34.8	2	9.2	24.3	33.5	2
2007	8.3	29.5	37.8	3	6.3	46	52.3	3	11.7	47.3	59	3
2008	8.3	22.7	31.1	3	6.3	10.1	16.4	1	12.6	30.5	43.1	3
2009	8.7	21.4	30.1	2	6.9	5.4	12.3	1	14.2	22.8	37.0	2
2010	7.7	20.7	28.4	2	6.8	4.8	11.6	1	13.9	22.7	36.6	2
2011	7.7	17.4	25.1	2	6.8	6.4	13.2	1	14	19.1	33.1	2
2012	6.6	18.2	24.8	2	6.5	4.9	11.4	1	14	18.6	32.6	2
2013	7.2	15	22.2	2	6.4	3.6	10	0	14.8	19.9	34.7	2
2014	7.5	18.7	26.2	2	6.4	6.8	13.2	1	16.6	21.0	37.6	2
2015	6.8	20.1	26.9	2	6.0	7.3	13.3	1	15.5	20.4	35.9	2
2016	6.8	5.3	12.1	1	5.3	3.9	9.2	0	15.6	18.0	33.6	2
2017	7.6	3.2	10.8	1	6.3	2.5	8.8	0	16.0	18.0	34.0	2

〈그림 4-3〉 영역별 구조통합지수 연도별 추이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통일학연구 44

2018 남북통합지수

발행일 2019. 2. 28
발행처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발행인 임경훈
저 자 천경효 · 조동준 · 김병연 · 김학재 · 안소연 · 이종민 · 조용신
등 록 119-82-67975(2006.7.7)
주 소 08826 서울 관악구 관악로 1
전 화 02-880-4052-4
팩 스 02-874-7305
홈페이지 <http://tongil.snu.ac.kr>
디자인 희망커뮤니케이션즈 (02-2268-1968)

ISBN 979-11-961299-5-8

©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2018

이 보고서의 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의
사전 서면 허락없이 복제하는 것을 금합니다.